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관한 연구

포로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2021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唐 鑫

Master'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A study of the Chinese POW repatriation issue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 the process of the truce negotiations

August 2021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TANG XIN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관한 연구

포로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탕신

탕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 년 8 월

위원장 신성호

부위원장 최용섭

위원 박태균

<한글초록>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관한 연구

포로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탕신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미 70 여 년 전의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국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전쟁의 휴전체제는 아직까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정세에도 한국전쟁의 영향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처음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내전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주요참전국인 중국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20 만 명에 가까운 중국군인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22,000 여 명의 포로도 발생하였다. 이 22,000 여 명의 포로는 전쟁의 당사자이자 불행한 시대의 목격자이다. 전선에서 구사일생을 경험한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은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수용되었다가 1953 년 정전협정 조인 전과 후에 차례로 송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 중의 70%, 즉 14,000 여 명의 포로들은 자신의 출신지인 중국대륙이 아닌 대만台灣으로 가게 되었다.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잊혀진 듯한 한국전쟁의 포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특히 중국군포로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의 제 1 장과 제 2 장에서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배경 그리고 중국군포로의 발생과정을 서술하고, 제 3 장과 제 4 장에서는 각각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중국군포로들이 전쟁이 끝난 후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동시에 진행된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이 두 핵심적인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3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군의 동원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상의 다양성; 둘째, 반공포로들의 존재 및 포로들 사이의 이념분쟁과 권력투쟁; 셋째 관리당국의 책임 등이다. 무엇보다 수용소내부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던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의 포로송환정책의 수립과정, 포로들의 저항 및 양측의 의견충돌, 그리고 마지막의 합의과정과 문제점 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결론은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이 1 년반 동안의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적으로 중국군포로를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를 좌우하였다는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이러한 작용과정을 시기별로 나눠서 각 시기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군포로송환문제를 비롯한 한국전쟁의 포로처리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전쟁, 중국군, 북한군, 포로, 송환, 수용소, 휴전회담
학생번호: 2018-26237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검토 5
1.3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 2 장 한국전쟁 중국군포로문제의 기원 **16**

2.1 중국군의 한국전쟁개입 16
2.2 중국군포로의 발생 20

제 3 장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 **29**

3.1 수용소내부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 29
3.2 포로들의 조직화 및 폭력문제 38
3.3 또 하나의 전쟁터: 포로에 대한 심리전 50

제 4 장 휴전협상에서 포로송환을 둘러싼 논쟁 **60**

4.1 송환원칙의 충돌-'전원송환'과 '자원송환' 61
4.2 송환정책의 조정 및 휴전회담의 지체 67
4.3 상병포로의 '소교환'과 송환문제의 최종합의 76

제 5 장 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간의 상호작용 **86**

5.1 거제도와 판문점-두 개의 충돌현장 1951.7-1952.3 88
5.2 운명의 순간: 포로에 대한 심사와 분리 1952.4-1953.3 94
5.3 마지막 '설득'과 강요된 대만행 1953.4-1954.1 105

제 6 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제 1 장 서론

1.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국전쟁 1950-1953[1]은 한韓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수많은 도시가 초토화 되었으며 수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전쟁의 발발은 이미 70 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남북한[2] 사이의 군사적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 차세계대전 끝난 후 일본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분단의 운명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또한 전후 대한민국의 반공反共국가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에서 대북지원이나 민간교류 등 남북한에 관련된 이슈를 논쟁할 때마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처럼 한국전쟁은 남북한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고착시켰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

[1] 1950-1953 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전쟁은 다양한 이름으로 서술되고 기억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처럼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반도전체를 '한반도'라고 칭하고, 남측과 북측을 각각 '남한', '북한', 합치면 '남북한' 등 용어를 사용하며 특별한 언급 없는 경우 '한국'이라는 용어는 한반도 남측, 즉 대한민국만 가리킨다.

남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주요참전국인 중국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3] 인명 및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중국지도부의 참전결정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4] 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중국인들에게도 많은 의문을 남겼다. '과연 그때 중국의 입장에서 참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남의 나라의 내전인데 중국이 이렇게 간섭해도 되는 것일까?', '한국전쟁 때문에 대만台灣과 통일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대표적이었다. 전쟁의 아픔은 한국전쟁의 또 하나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흔히

---

[3] 한국전쟁 중 중국군의 사상규모는 통계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의 통계(1953)로 한국전쟁 중 중국군의 '作戰減員'은 36.6 만 여 명을 달했고, 그 중에서 작전시 사망 11.6 만 명, 부상 22 만 명, 실종 및 생포는 2.9 만 여 명 등이 포함되었다. 그 이외에도 2.5 만 여 명의 '비작전사망'자들이 집계됐다. 孟照輝(2012),「抗美援朝戰爭志願軍傷亡人數辨析」,『軍事歷史』, 2012 年第 2 期. 한편, 중국 '항미원조기념관'에서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전국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전쟁 중 중국군 작전사망, 부상 후 사망, 질병으로 사망 및 실종자 등 포함해서 '중국지원군열사'는 총 183,108 명으로 집계되었다. 朱進(2013),「中國人民志願軍 18 萬餘烈士名單分類」,『軍事歷史研究』, 2013 年第 4 期.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방송이 2015 년에 중국군포로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작한 5 부작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전문가의 소식을 인용해 중국군의 희생규모는 36 만 명으로 기술하였다. Voice of America Chinese(2015),『解密時刻 : 志願軍戰俘』5 부작 다큐멘터리 https://youtu.be/f9EkfJcnisk, 제 5 편 37 분 38 초. 가장 최근에 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이 2020 년 10 월 23 일에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 주년' 기념대회에서 '19 만 7 천여 명의 열사들이 조국과 인민 및 평화를 위해 전쟁에서 소중한 목숨을 바쳤다'고 기조연설을 한 바 있었다. "19 萬 7 千多名英雄兒女為了祖國、為了人民、為了和平獻出了寶貴生命". 新華網, 2020 년 10 월 23 일,「習近平: 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 70 週年大會上的講話」,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0/23/c_1126649916.htm. 하지만 영문문헌 중에 한국전쟁 중 중국군의 사상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Bruce Cumings 는 900,000 의 중국군병사들이 한국전쟁 중에 사망하였음을 추측한다고 기술한 바 있었다. Cumings, B.(2010), *The Korean War (A modern library chronicles book)*, 35 쪽.

[4]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은 '미국을 대항하여 북한을 돕는다'는 '抗美援朝', 그리고 '朝鮮戰爭'등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용어의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다. '조선전쟁'은 1950 년 6 월 25 일에 발발한 남북한 사이의 내전을 가리키고, '항미원조'는 1950 년 10 월부터 중국군이 참전하는 부분의 전쟁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군의 참전으로 당시 이미 중국접경지역으로 올라온 유엔군이 다시 38 선으로 격퇴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항미원조'는 중국군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잊혀진 전쟁 the forgotten war’[5]으로 불리며 기억되고 있다. 누구도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차라리 잊혀졌으면 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왜 한국전쟁을 잊으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전쟁은 이미 70 여 년 전의 일이었지만 전쟁의 결과는 현재진행형으로 오늘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전쟁에 관련된 인식이나 연구는 전쟁의 발발과 진행과정, 그리고 휴전협상 등 주제에 집중되었다. 역사의 주체인 사람으로서의 역사는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 한국전쟁과정을 두고 볼 때, 포로들의 이야기, 즉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문제는 전쟁의 지속 및 휴전협상의 진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심지어 전쟁과정도 좌우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문제는 휴전협상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 년이 지난 1951 년 7 월부터 교전양측은 휴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양측의 입장차이를 좀처럼 좁혀 나가지 못했다. 결국 포로처리문제는 1 년 6 개 월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의 논쟁 끝에 합의되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지전高地戰 등을 비롯한 양측의 무력충돌과 병사들의 사상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은 포로처리문제 때문에 한국전쟁은 2 년이나 더 지속되었던 셈이다. 심지어 포로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중립국송환위원회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 NNRC 의 의장직을 맡은 인도에서 온 티마야 Subayya Kadenera Thimayya 장군은 휴전협상을 놓고 볼 때 전쟁의 주 목적이 포로를 잡고 그들을

[5] 영문문헌에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서술되는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Cumings, B.(2010), *The Korean War (A modern library chronicles book)*; Blair, C.(1987),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Melady, J.(1983), *Korea : Canada's Forgotten War*; Stein, R.(1994), *The Korean war : "The forgotten war"*; Rosen, Stanley Russell, & Rosen, Milton Jehiel (2018), *An American rabbi in Korea: A chaplain's journey in the forgotten war* 등 참조.

정치적으로 전향시키려는 데에 있는 듯하였다고도 평가를 했다.[6] 이처럼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치열한 논쟁은 교전양측의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다. 공산진영共產陣營과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교전양측은 포로처리문제를 이념과 가치관의 분쟁, 그리고 인권문제로 여기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 논쟁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보여줬고, 한국전쟁이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포로송환문제이 둘러싸여 '이데올로기 전쟁'으로도 전환된 것이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로처리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동안 역사서술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사람으로서의 역사의 진실을 중국군포로의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전쟁기간 중 중국군포로들은 총 22,000 여 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들의 처리문제에 있어 22,000 여 명의 포로들 중 약 70%인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출신지인 중국본토[8]가 아닌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 및 이 사실의 배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듯 어디서도 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전쟁의 일면이다. 왜 대다수의 중국군포로들은 고향으로 송환되지 않고, 왜 대만으로 가게 되었을까? 포로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가? 포로수용소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

[6] K. S. 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25 쪽.

[7] 박태균(2005),『한국전쟁』264 쪽.

[8] Chang, David Cheng(2020)에 의하면 14,000여 명의 대만으로 가게 된 중국군포로들 중 2 명만 대만출신이었다. Chang, David Cheng(2020), *The Hijacked War: The Story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5 쪽. '중국본토'라는 용어는 대만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롯한 '중국대륙', '중국본토', '본토송환', '대만송환', '대륙정부', '대만정부', '공산당정부', '국민당정부' 등 용어를 통해 대륙과 대만을 구분한다. 특별한 언급 없는 경우, 1949 년 공산당정권 수립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중국'이라는 용어는 대륙과 대만을 다 포함한 뜻으로 사용하고, 1949 년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중국정부'는 대륙에 있는 '공산당정부'를 지칭하며 '중화민국'은 대만을 가리킨다.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대륙, 대만, 미국, 한국 등 측의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포로처리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오늘날의 지역정세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전쟁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행위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주체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의 역사는 곧 전쟁을 참여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및 서술들 뿐만 아니라, 참전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 또한 한국전쟁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 및 중국군포로들의 이야기는 이런 시각에서 한국전쟁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여 한국전쟁 기간 중 중국군포로문제의 발생 및 처리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을 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 선행연구검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 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70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들은 수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 전쟁포로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의 경우, 이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휴전협상과 관련된 서술에서는 포로처리문제가 필연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각으로 휴전협상에서 양측의 의견차이 및 포로처리의제의 합의과정, 협상결렬과 전쟁의 지연, 민간인억류자 및 미귀환국군포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국군포로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그들의 처리문제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았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왜 결국에는

대다수의 중국군포로들이 자기 출신지인 중국본토가 아닌 대만으로 가게 되었는가?'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 서술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군포로들을 북한군포로들과 동일시하며 '공산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교전양측의 구성상으로 봐서 휴전협상에서 포로처리문제를 논의했을 때 북한군포로와 중국군포로를 '공산군포로'로 같이 보는 것이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군만의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사실 포로처리문제에 관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의 의견충돌과 마찬가지로 북한측과 중국측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같은 진영에서 싸웠지만 북한군과 달리 외국군대로서의 중국군만의 사정을 쉽게 간과하면 우리가 한국전쟁포로처리문제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이다. 중국군포로의 경우는 낯선 이국의 땅에서 작전하다 포로가 된 것이었고 포로수용소에서도 북한군포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고립된 처지에 있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소식의 진공에서 살아야 했다. 더군다나 중국군 병사들의 종군從軍경력, 동원배경이나 지식수준 및 정치적 경향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복잡한 지역정세 및 중국 국내정세의 요소들도 서로 얽히고 함께 작용되었기 때문에 중국군포로송환문제 역시 북한군포로의 경우와 분리해서 따로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논저로 조성훈(2010)은 한국전쟁 공산진영共產陣營 '송환거부포로'[9]가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를 첫째, 북한과

[9] 대부분의 한글문헌에서는 다수 중국군포로들이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중국본토가 고향인 포로가 '송환거부' 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거부'라는 표현은 주관성이 강하여 포로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고향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대만으로 송환지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밝히겠지만, 다수 그 시기에 작성된 역사기록에서는 이들 중국군포로가 대만으로 가게 된 배경에 본의의 선

중국군포로들이 송환되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둘째, '반공포로'[10]단체들의 활동의 영향; 셋째, 미군의 포로정책의 영향 등으로 제시했다.[11] 하지만 이런 판단 역시 중국군과 북한군을 합쳐서 어떠한 집단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중국군포로송환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3 가지 원인 중 어느 것이 중국군포로의 송환과정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金幸福(1996)은 유엔군측의 포로관리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포로를 그냥 수용했다가 돌려보내는 인원으로 생각했던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일어나는 소요와 폭동에 대해 적절하고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12] 포로처리문제만 다룬 논저 이외에 기타 한국전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포로처리문제를 부분적으로 논의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박태균(2005)은 중국군포로 미송환현상들이 대량으로 나타난 이유가 중국군병사들 중 많은 수가 중국공산주의혁명 전에 국민당國民黨군 소속이었기

택이 아닌 강요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군포로 중 1 차 상병포로교환 및 2 차 송환희망포로교환 이후 남은, 유엔군에 의해 '송환거부'로 분류된 다수 중국군포로를 경우에 따라 '직접 송환되지 못했던 포로들' 혹은 '미송환(Non-repatriates)포로'들이라고 지칭하겠다. '송환' 및 '미송환'이라는 용어의 정확성에 관련된 비슷한 논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거제시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8)도 참조.

[10] '친공포로' 및 '반공포로'라는 용어 역시 다수의 한글문헌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송환거부'처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친공 아니면 반공, 모든 포로들이 다 둘 중의 하나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포로들 중에 반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조직과 친공산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조직들이 다 형성되었고, 각자 강경 공산주의자나 반공주의자들도 나타났지만 나머지 다수 반공도 아닌 친공도 아닌 포로들도 많이 존재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수용소라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부조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원되고 정치적 경향과 주장보다 살아서 자유로운 삶을 더 동경했던 포로들이었다. 특히 중국군포로의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많은 포로들이 반공조직에 의해 강요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반공포로'쪽으로 서게 되며 결국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반공포로'라고 인식하면 강요에 의해 반공행렬에 동원된 포로들의 존재를 쉽게 간과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부분적으로 '반공' 및 '친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중국군포로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중의 일부 '친공' 혹은 '반공' 경향을 강하게 보인 자들 혹은 그들의 조직들만 가리킨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1]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420 쪽.

[12] 金幸福(1996).『韓國戰爭의 捕虜』258 쪽.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13] 이들 포로는 전직 국민당군대 출신이기에 중국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정부로의 송환을 원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로 볼 때 전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70% 이상인 자들이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 포로들의 출신배경 이외에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관련연구논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陳卓(2017) 및 余系彦(2014)의 박사학위논문이 대표적이다. 陳卓(2017)은 중국군포로 다수 미송환 현상에 대해 중국군 병사의 동원과정, 중국내 정치운동 및 포로수용소에서의 내부갈등 등 중국군 포로의 내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았다.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송환에 대해 내린 판단'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14] 하지만 이 연구는 중국군포로들이 포로수용소라는 폐쇄된 환경 및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대만으로 가게 된 것은 과연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을까? 그 과정에서 중국군포로들의 심리적인 요인, 중국내 정치운동 등 이른바 내부요인들이 포로수용소에서의 강요 및 협박 등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됐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余系彦(2013, 2014)의 연구는 미국이나 대만정부의 포로송환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포로들의 송환거부 유도를 지적하며 다수 중국군포로들의 대만행을 '강요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15] 한편, 김보영(2016) 역시 이 점을 주목하였고,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의 강요 및 폭력현상을 지적했다. 김보영(2016)은 중국군포로들의 송환여부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포로수용소를 장악한 전국민당군前國民黨軍 출신의 우익右翼

---

[13] 박태균(2005),『한국전쟁』264 쪽.

[14] 진탁(2017),「6·25 전쟁시기 중국군 포로의 대만송환에 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5] 여계언(2014),「6·25 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여계언 (2014),「6·25 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21 세기정치학회보, 24(1), 393-413 쪽.

포로지도자들로, 그들은 다른 포로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선택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기하였으며 또한 유엔군이 실시한 포로교육 및 대만인台灣人 교원들도 간접적으로 포로들의 송환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16] 이선우(2017) 역시 포로수용소에서의 폭력을 언급하며 포로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명확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17] 그 이외에도 한국전쟁 포로송환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박영실(2016)은 중국군미송환포로들이 대만으로 이송되는 과정 및 대만에서 국민당정부에 의해 중화민국국군中華民國國軍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18] 민경길(1997)[19]과 정인섭(2000)[20]은 국제법의 시각에서 한국전쟁 포로송환문제를 다루었고, 이상호(2010, 2020)는 미국이 '공산포로'에게 실시한 '미국화' 교육을 고찰했다.[21] 정근식, 김란(2016)[22] 및 전우(2016)[23], 이사사(2019)[24]는 구술자료 등을 통해 대만이나 중국본토로 송환된 포로들의 삶을 고찰했다.

역사당사자로서 한국전쟁연구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항미원조'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중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포로송환문제에 집중된 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 하고

---

[16] 김보영(2016),「한국전쟁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선택」, 사학연구(123), 177-210 쪽.
[17] 이선우(2017),「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38, 317.
[18] 박영실(2016),「타이완행을 선택한 한국전쟁 중공군 포로 연구」, 아세아연구, 59(1), 180-215 쪽.
[19] 민경길(1997),「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4(1), 1-15 쪽.
[20] 정인섭(2000),「6·25 의 법적 조명: 제 2 세션; 6·25 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제 6 주제;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21] 이상호(2010),「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현실(78), 421-449 쪽; 이상호 (2020),『한국전쟁: 전쟁을 불러온 것들, 전쟁이 불러온 것들』.
[22] 정근식 김란 (2016),「두 갈래길, 중국지원군 포로의 생애서사: 장저쓰(張澤石)와 류춴지엔(劉純儉)의 구술사에 기초하여」, 구술사연구, 7:1, 11-55 쪽.
[23] 전우(2016),「한국전쟁 참전 중국지원군 포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이사사(2019),「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포로의 송환과 귀국 이후의 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있었던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중국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미국 및 대만 정부 등을 비판해 왔고, 중국의 역사학계 역시 이를 동조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역사자료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이념적인 비판만 강조된 경향이 있다.[25] 따라서 한국전쟁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관한 진정한 학술연구는 중국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26]

중국본토로 송환된 포로들은 중국정부 및 군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30 여년간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포로가 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1980 년대에 이르러서야 중국본토로 송환된 이들은 비로소 중국중앙정부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 그 이후로 중국군포로문제에 관련된 많은 구술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포로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구술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 및 연구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돗드사건'[27] 등에 참여한 귀환중국군포로 張澤石의 회고록, 많은 포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구술내용을 냉정한 시선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于勁의 연구, 그리고 미송환중국군포로들을 상대로 하는 설득작업을 담당했던 賀明의 회고록 등이 있다.[28] 이들 구술자료 및 연구는 보다 객관적으로 당사자로서의 증언을 잘 보존하였기에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특히 于勁의 연구는 중국본토로 송환된 많은 포로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대립을 초월해 포로 한 명 한 명을

---

[25] 대표적으로 邊麗君 馮金暉編(1990),『朝中戰俘遣返內幕』; 程來儀(2000),『正義與邪惡的較量-朝鮮戰爭戰俘之謎』; 大鷹(1997), 『志願軍戰俘紀事』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역사자료, 기록문서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중국본토로 송환된 포로들의 구술내용에만 집중되었으며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

[26]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17 쪽.

[27] 1952 년 5 월 7 일에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포로들이 유엔군측 포로관리당국의 총책임자인 돗드(Francis T. Dodd)를 나흘 간 억류하는 사건이었다.

[28] 張澤石(1988), 『我從美軍集中營歸來』; 張澤石(1994),『戰俘手記』; 張澤石(2000), 『我的朝鮮戰爭』; 于勁(1988), 『厄運』, 2020 년 재간행;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

사람으로서 접근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복잡한 심리를 냉정하게 관찰하였다. 많은 당시의 군사법정 심판기록 등 자료도 확보해 포로수용소의 내부사정 및 중국군포로들 사이의 분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1 차자료를 제공했다.

2000 년대 이후, 러시아 및 중국정부 등의 역사문서들의 공개에 따라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宋曉芹(2011)은 한국전쟁 휴전회담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고찰했고, 소련이 휴전협상 과정 중 중·조[中朝]의 협상정책을 지도, 또한 중·조 간 의견충돌시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하였다.[29] 宗興波(2014)는 다수 중국군포로들이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냉전배경하의 국제적 요인, 중국본토 및 대만이라는 '두개의 중국'의 국내적 요인, 중국군 구성상의 복잡함 등 개인적 요인들을 지적하였다.[30] 蔣洪勇(2005)은 중국으로 송환된 포로들이 1980 년대까지 약 30 여 년 동안에 정부, 사회 등으로부터 불이익 및 편견, 차별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31] 王唯笑(2013) 역시 미국과 중국이 본국으로 송환된 포로들에 대한 처리방식을 비교하면서 동·서양 문화차이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고찰했다.[32]

한편, 대만의 경우에는 이들 중국군포로를 '반공의사[反共義士]'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의 탄압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들 '반공의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 포로수용소에서 결사투쟁을 해서 '자유중국[自由中國]'대만으로 오게 된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중국본토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대만측의 연구에서 이념적 '승리'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등 내용만 강조되고 역사자료 근거로 이루어진 학술연구는 많지 않았다.[33] 2000 년대 이후 이들 '반공의사'에 관한 역사자료정리 및 연구는 대표적으로 周琇環(2001, 2005, 2006, 2007, 2010,

---

[29] 宋曉芹(2011),『試析朝鮮戰俘遣返談判中的蘇聯因素』, 世界歷史 2011 年第 2 期.
[30] 宗興波(2014),『志願軍戰俘去台原因探索』,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31] 蔣洪勇(2005),『戰俘問題與朝鮮停戰』,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32] 王唯笑(2013),『朝鮮戰爭戰俘問題研究』, 外交學院碩士學位論文.
[33] 대표적으로 대만정부에서 간행한『反共義士奮鬥史』등이 있다.

2011)의 작업을 참조할 수 있다.[34] 이들 작업에서는 周琇環이 대만정부 및 해외주재공관들이 작성한 한국전쟁과 중국군포로처리문제에 관한 문서들을 정리하였고, 중국군포로들이 대만으로 이송되는 과정, 특히 대만정부의 개입과정 등을 사학연구의 관점으로 고찰했다. 沈幸儀(2013)는 대만 외교부 및 국방부의 문서 등을 이용해 중국군포로수용소의 관리문제를 지적하였고, 포로송환과정 막판에 진행된 설득작업은 '자원송환원칙'을 지키기는 커녕 설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포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들의 운명을 무책임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35]

한국전쟁의 또 하나의 주요참전국으로서 그동안 한국전쟁에 관련된 주제들은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역시 포로들에 관한 내용, 특히 적군이었던 중국군과 북한군포로들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관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논저에서 한 장 정도의 분량이 되는 서술에 그쳤고, 중국군포로의 수용상황 및 송환문제 등에 관해서는 더욱 언급이 없었다.[36] Blair, C.(1987)는 중국군 중 중국내전에서 공산당군으로 전향한 많은 전직 국민당 병사들의 존재함을 지적하고, 내전에서의 전향 그리고 한국전쟁 중의 생포 등으로 인해 이들 국민당출신 병사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심지어 배신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공산당치하로 송환되면 엄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송환은 점점 중국본토가 아닌

---

[34] 외교문서 및 역사자료정리는 周琇環編(2005,2006,2007),『戰後外交史料彙編: 韓戰與反共義士篇』 3 권을 참조; 연구논문은 周琇環(2010),『韓戰期間志願遣俘原則之議定(1950-1953)』, 國史館館刊, 第 24 期(2010 年 6 月); 周琇環(2011),『接運韓戰反共義士來臺之研究』, 國史館館刊, 第 28 期 (2011 年 6 月) 등 참조. 구술자료는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참조.

[35] 沈幸儀(2013),『一萬四千個證人: 韓戰時期「反共義士」之研究』353 쪽.

[36] 한국전쟁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서술은 Young, C.(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Kim, M.(2019),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The Untold History*; Jager, S.(2013),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등 참조.

대만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이것이 성사되면 포로들이 공산당중국으로의 송환을 거절한다는 것은 워싱턴에게도 엄청난 여론의 승리 propaganda victory 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37]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군포로들이 대만으로 송환되는 것은 왜 중요한 지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Charles S. Young(2014)은 다수 중국군포로들이 대만으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 포로들에 대한 반공조직의 압박을 지적하였다. 포로들이 정말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많은 이들이 대만이 아닌 중국본토로 선택했을 거라고 추론했다.[38]

최근에 와서 한국전쟁 중국군포로송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David Chang Cheng 常成(2020)의 연구는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는 한국전쟁이 첫째 전선에서 둘째 포로수용소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전반부는 땅을 위하여, 후반부는 포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후반부는 일부 핵심반공포로들에 의한 '납치된 전쟁 the Hijacked War'이라고도 표현하였고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는 다수의 송환의 권리를 무시하였으며 소수의 비非송환의 권리만 보호해 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유엔군측의 자원송환방안은 중대한 실패 major failure 였고, 이 원칙은 북한측에서 억류된 유엔군포로들의 조기송환을 불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송환을 고수하면서 전쟁이 지연되었던 만큼 유엔군의 불필요한 희생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어떻게 보면 북한군과 중국군포로의 권리를 위하여 미국인 병사들을 희생하였던 셈이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인들에 대한 오만함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39]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본토, 대만 그리고 미국 등에서 이루어진 한국전쟁 중국군포로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

[37] Blair, C. (1987), *The Forgotten War : America in Korea, 1950-1953*, 962 쪽.
[38] Charles S. Young(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101 쪽.
[39] Chang, David Cheng(2020), *The Hijacked War: the Story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367-370 쪽.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군포로송환문제를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를 고찰하였다.

1.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한정해서 수행하는 연구로서, 상대적으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 중 중국군포로의 경우에만 집중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관찰하였다. 따라서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 및 휴전협상에서 포로송환문제에 관련된 치열한 논쟁, 포로송환원칙의 확립 및 중립국송환위원회의 활동까지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의 전 과정을 중국군포로송환의 시각 또는 관점으로 고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도 중국군포로의 송환문제에 한정되지만 휴전협상과정 및 포로송환원칙 등 내용을 검토할 때, 한국전쟁 포로전체에 적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군포로 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들의 경우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자료는 한국전쟁기 남북한정부, 중국본토 및 대만정부, 미국정부 등 각 측의 정부문서 등을 중심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각 측의 입장 및 정책수립과정을 고찰하였다.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은 각 측 역사당사자들의 증언, 포로들의 회고록 및 그동안 중국과 한국 등 역사학계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같은 사건을 보다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대한 역사의 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해당시기 각 측에서 출간된 언론보도 및 최근에 와서 중국과 미국 등에서 제작한 한국전쟁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등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총 6 장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 1 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전쟁기 중국군의 동원 및 참전과정 그리고 중국군포로문제의 발생을 제 2 장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제 3 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을 고찰하고 중국군포로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 4 장에서는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앞서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검토한 내용, 즉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과정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양자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시기별로 나눠 고찰함으로써 이 두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 6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해서 앞서 검토한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연구질문에 대한 연구자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국전쟁 중국군포로문제의 기원

2.1 중국군의 한국전쟁개입

1950 년 6 월 25 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처음에는 한반도 남북한 사이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내전의 형태로 일어났지만, 몇 달 사이에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과 신생 중국공산당정권이 파견한 중국군이 같이 참여하는 국제전의 형태로 바뀌었다. 국제전의 성격을 띄는 만큼 한국전쟁의 발발과 진행과정은 복잡한 지역정세와 주변 세력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바로 이러한 급변하는 과정 속에 당시 중국지도층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다.

1945 년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는 곧 소련과 미국 점령군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1948 년에 한반도 남북지역에서 각자 따로 정부가 수립되었고 양 측의 대립도 이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같은 시기, 한반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중국국민당이 통치하는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무장세력 사이에 미래 중국정부 지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결국 1949 년 10 월 1 일에 중국공산당이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고 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물러났다. 양 측은 대만해협台灣海峽을 두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치하였다. 한반도에서 김일성과 이승만이 서로 조국통일을 구상하는 것처럼 중국국민당정부 및 신생 중국공산당정부 역시 통일된 중국을 위해 막판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이미 대부분의 중국영토를 점령한

공산당정권에게 대만은 남겨진 마지막 숙제였다.[40]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어느정도 예고된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 전투를 기다리는 중국공산당정부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적어도 중국대륙과 대만의 통일을 먼저 이루고 나서 군사적, 경제적 여유 등이 생기고 나서야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작전을 돕겠다는 기본입장이었다.[41]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 같은 진영에서 속한 관계이지만, 당시의 중국정부에게 있어 남의 통일보다 자국의 통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김일성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 1949 년 7 월에 중국공산당부대 산하에 있는 한반도 출신자로 편성된 이른바 '조선족부대朝鮮族部隊' 두 개의 사단 총 2 만 1 천 여 명의 병사들이 북한으로 투입되었다.[42] 1948 년 2 월에 창설된 병력도 무기도 부족한 조선인민군에게 중국내전에서 작전경험을 쌓은 이들 병사의 합류는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병력확충만으로는 전쟁준비에 있어 부족하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진영의 지도자 역할인 소련의 무기지원은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전쟁을 수행하는 필수조건이었다. 따라서 1949 년 연말에서 1950 년 초 사이에 김일성은 소련의 무기지원 및 전쟁허락을 얻기 위해 분주하였다. 소련에 이어 1950 년 5 월에 김일성 일행은 중국도 방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한 막판 준비를 벌였다.

---

[40] 1950 년 6 월 한국전쟁 발발할 때 당시 중국공산당정부가 이미 1945 년부터 시작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福建省 연안에 있는 金門, 馬祖 등 작은 섬들과 대만만 통일목표로 남았던 상황이었다.

[41] 毛澤東은 1949 년 5 월에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과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시기상으로 국제환경이 유리한 1950 년 초가 적절하다고 강조하였고, 공산당의 주요병력은 당시 다 양자강 이남의 남중국지역으로 배치되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공산당이 신속하게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197-198 쪽, 205 쪽.

[42] 중국인민해방군 164 사단(10,320 명) 및 166 사단(10,821 명)이 당시 중국과 북한 양측의 합의하에 북한으로 투입되어 조선인민군 제 5, 6 사단으로 편성되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中國人民解放軍東北軍區司令部編(1949),『東北三年解放戰爭軍事資料』, 미간행, 76-77 쪽.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199 쪽 재인용.

당시 毛澤東 등 중국지도층은 김일성의 '속전속결'형 작전계획에 대해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김일성은 소련의 동의를 이미 얻었다며 중국을 재촉하였고 중국은 전쟁허락만 해 준다면 중국에게 아무런 지원도 요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43]

당시의 상황에서 중국지도층은 소련과 북한의 결정을 반대할 수가 없었다. 毛澤東은 다만 전쟁시 일본 혹은 미국의 군사적 간섭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김일성에게 표명했다. 결국 6 월 25 일에 북한군대가 남한으로 대거 내려와 작전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정부의 무장간섭을 우려하던 중국정부는 1950 년 7 월 초에 국방회의를 개최해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조직하여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주둔시키고 필요시 전쟁에 개입하여 조선인민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44]

전쟁 초기에 북한군은 인력 뿐만 아니라 무기에서도 남한군보다 우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1950 년 9 월 15 일부터 시작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은 큰 좌절을 겪었다.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자 김일성은 다시 소련과 중국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소련은 미국에게 구실을 남겨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의 전면적 충돌을 회피하려고 애초 김일성에게서 작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부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하되 소련군의 공식적인 참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0 월 1 일에 김일성의 지원요청 서한을 받은 스탈린은 곧바로 중국정부에게 참전을 요청했다. 외부지원 없이 북한군의 힘만으로는 절대 미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정권 역시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지원요청을 받은 중국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시 중국공산당정부는 수립된 지 1 년도 안 된 신생정권이었다. 게다가 청나라 멸망 이후부터 시작하여

---

[43] 楊奎松(2019),『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第四版 289 쪽.

[44] 1950 년 7 월 7 일 및 10 일에는 두 번을 거쳐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周恩來가 국방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關於保衛東北邊防的決定」을 의결하였고, 총 25 만 명을 달하는 동북변방군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建國以來毛澤東文稿』제 1 권 561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1990),『抗美援朝戰史』6 쪽; 楊奎松(2019),『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第四版 301 쪽 재인용.

1950년까지 중국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1931년부터 14 년 동안 일본침략자와 맞서 항쟁도 해야 했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1950 년의 중국은 경제, 민생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태였고 대만과의 통일도 언제 해결될 지 모르는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 및 공중전력이 거의 없는 중국군에게 있어서는 과연 소련의 군사지원 특히 공중지원없이 한국전쟁을 개입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중국지도층의 의문이었다. 다시 말해 소련의 군사지원여부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중국군의 참전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유엔군이 38 선 이북으로 넘어오느냐는 문제였다.[45] 이러한 우려 속에서 당시 周恩來 중국총리는 10 월 3 일에 주중인도대사 파니카 Kavalam Madhava Panikkar 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군이 38 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중국은 나서서 전쟁을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이다.[46] 파니카대사는 중국측의 이러한 메시지를 '최종결정'이라고 믿고 있다며 미군이 38 선을 넘는다는 것은 곧 한국전쟁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47] 한편 중국지도부 내부에서도 한국전쟁의 참전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결국 10 월 5 일 오후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중국지도부가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48]

하지만 이 결정은 중국지도부 내부의 의견 뿐이었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소련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0 월 8 일에 周恩來 중국총리 일행은 소련으로 출국했다. 중국군의 참전과 관련해 소련과 논의하기 위해서다. 소련의 군사적 지원 특히 공중지원을 확실히 약속 받아야 중국도 마음 편히 파병할 수 있기

---

[45] 1950 년 5 월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毛澤東은 이미 이 점을 강조하였고, '제국주의'가 38 선을 넘으면 중국이 나서겠다고 毛澤東은 김일성에게 말했다. 楊奎松(2019),『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第四版 290 쪽.

[46] 『周恩來外交文選』25-27 쪽.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287 쪽 재인용.

[4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50, Korea, Volume VII, Document 595.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48]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287 쪽.

때문이었다. 같은 날 毛澤東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황에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으로 간 周恩來는 스탈린과 만난 뒤에 10 월 11 일에 스탈린과 공동명의로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하지 않겠다는 합의결론을 毛澤東에게 보냈다. 중국군대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준비가 다 되면 시기상 너무 늦겠다는 판단에서였다.[49] 다시 말해서 중국과 소련의 협상결과는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포기해야 할 것이었다. 당시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은 이미 38 선 이북으로 진출해서 승승장구 중이었고 북한군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일성의 통일계획도 크게 좌절되었고, 정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긴박한 시기였다. 소련 역시 전투기나 조종사들을 전쟁에 투입한다는 것에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미군이 점점 압록강鴨綠江변으로 다가오자 毛澤東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고심 끝에 10 월 13 일 오후 그는 중국지도부 내부회의에서 '참전하면 이익이 극대,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극대'라고 지적하였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되었다.[50]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결정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외래적 강박'과 '내재적 자원自願'이 상호 결합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51]

2.2 중국군포로의 발생

1950 년 10 월 19 일에 중국인민지원군 병사들이 압록강을 건너가며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발발한 지 만 4 개 월이 된 10 월 25 일에 첫 전투를

---

[49]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306 쪽.
[50] "參戰利益極大, 不參戰損害極大",『建國以來毛澤東文稿』제 1 권 556 쪽. 楊奎松(2019),『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第四版 316 쪽 재인용.
[51] 김계동&한국전쟁연구회(2000),『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172 쪽.

하였다. 이후 다음 해인 1951 년부터 10 월 25 일은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참전기념일이 되었다.[52] 참전에 따라 중국군포로도 교전 첫날인 10 월 25 일에 최초로 포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53] 중국군의 참전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열세를 보인 북한군에게 큰 도움이 됐고, 양측이 '2 차 전역戰役' 이후 유엔군을 38 선 이남으로 몰아칠 수 있었던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전쟁의 국면은 다시 한번 180 도로 바뀌었다. 중국군의 참전에 따라 북한군은 다시 한번 남한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50 년 12 월 말에 시작된 '제 3 차 전역'에서 중국군과 북한군은 38 선 이남지역으로 계속 전선을 밀고 나갔으며 1 월 4 일에 남한의 수도인 서울을 점령했다. 중국군은 참전 이래 전반적으로 이 때까지 우세를 보였고 전선도 한발 더 남쪽인 37 도선 쪽으로 다가갔다. 물론 작전하는 과정에서 포로들도 계속해서 생겼지만 중국군의 전투력에는 아직 큰 손실이 없었다.

1950 년 12 월 23 일에 있는 워커 중장 Walton Harris Walker 의 사망으로 리지웨이 Matthew Bunker Ridgway 중장은 12 월 27 일에 미 제 8 군 사령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어서 1951 년 1 월 25 일부터 리지웨이가 '선더볼트 작전 Operation Thunderbolt'을 지휘하여 중국군과 북한군을 다시 북쪽으로 퇴각시켰다. 이에 맞서 1951 년 4 월 22 일부터 공산군측은 두 차례에 거쳐 유엔군측을 상대로 '춘계공세'를 벌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전선도 더 이상 남쪽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중국군은 북쪽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체 한국전쟁 참전기간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중국군 60 군 180 사단은 거의 전멸되어 화천 서남쪽에 포위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굶주림과 식중독, 그리고 작전사망 및 실종 등으로 총 7,644 명이 감소되었다고 중국군사령부가 1951 년 7 월에 작성한

---

[52] 中央對外宣傳辦公室、中央黨史研究室「黨史上的今天」, '10 월 25 일' 검색한 내용,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5/70486/70516/index.html
[53] 金幸福(1996),『韓國戰爭의 捕虜』16 쪽.

내부자료에 기록되었다.[54] [표 1]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951 년 4 월부터 6 월까지 단 3 개 월 동안 안에 총 15,4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한국전쟁기간 중 발생한 중국군포로수의 약 73.5%를 차지한 규모였다.[55] 이중에서도 특히 1950 년 6 월에는 총 8,525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통계에 집계되었고 이 역시 전체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수의 약 40%를 차지한 규모였다.

[표 1] 수용소 포로 통계[56] (단위:명)

시간/월	북한군	중국군	소계	누계
1950.7	39		39	39
1950.8	1,706		1,706	1,745
1950.9	9,074		9,074	10,819
1950.10	51,859		51,859	62,678
1950.11	35,465		35,465	98,143
1950.12	37,730	1,245	38,975	137,118
1951.1	102	115	217	137,335
1951.2	2,121	190	2,311	139,646
1951.3	4,083	122	4,205	143,851
1951.4	15	1,750	1,765	145,616
1951.5	1,366	5,214	6,580	152,196

[54] 于勁(2020),『厄運』40-41 쪽.

[55] 통계방법과 시기 또는 오류 등에 따라 중국군포로의 정확한 인원수는 다르게 제기되어 왔다. 대만 측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군포로들은 1951.1-1951.6 사이에 총 17,500 여 명이 발생하였고 전체 한국전쟁 기간 중 총 21,3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포획되었다.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17-18 쪽.

[56] HQ UNC, "*A Tabulation of the Number of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POWs(1950.7.15~1953.7.28)*", 19/338.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33 쪽 재인용.

1951.6	956	8,525	9,481	161,677
1951.7	254	407	661	162,338
1951.8	395	95	490	162,828
1951.9	1,848	492	2,340	165,168
1951.10	852	1,510	2,362	167,530
1951.11	495	750	1,245	168,775
1951.12	103	150	253	169,028
1952.1	37	88	125	169,153
1952.2	83	34	117	169,270
1952.3	104	42	146	169,416
1952.4	1,248	14	1,262	170,678
1952.5	90	0	90	170,768
1952.6	91	53	144	170,912
1952.7	73	73	146	171,058
1952.8	72	21	93	171,151
1952.9	118	6	124	171,275
1952.10	1	9	10	171,285
1952.11	0	97	97	171,382
1952.12	1	6	7	171,389
1953.1	14	1	15	171,404
1953.2	22	5	27	171,431
1953.3	3	7	10	171,441
1953.4	0	0	0	171,441
1953.5	0	5	5	171,446
1953.6	0	12	12	171,458

1953.7	0	36	36	171,494
	150,420	21,074		

이처럼 중국군은 1951 년의 '춘계공세'에서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인적 손실이 가장 컸다. 작전인원수의 감소규모와 포로들의 급증규모를 결합해서 비춰볼 때 중국군병사들 중에 실종된 자들은 대부분이 유엔군에 의해 생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먹을 것 없었거나, 혹은 탄약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투력을 상실해 포로가 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였다. 당시 중국군병사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무기 등도 낙후된 조건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군 참전 당시 중국공산당정부는 설립된 지 1 년도 안 된 신생정권이었다. 더군다나 수십년의 대내외 전쟁을 겪은 중국의 경제와 민생도 그야말로 황폐한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전투시 꼭 필요한 무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군병사들의 식량 및 옷과 신발 등 필수품도 제대로 공급 못 받는 상황이었다.[57] 특히 한반도 남쪽으로 전선을 밀고 나갈 수록 중국군의 공급선도 그만큼 길어질 수 밖에 없어 군수품에 대한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먹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군병사들은 하루하루를 굶주림과 싸우면서 버텨야 했고,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처럼 전투력을 상실해 포로가 된 경우 이외에도 공산당군으로서 싸우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소속부대에서 이탈하여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자들도 발생하였던 것이다. 규율을 특별히 강조하는 공산당부대에서 왜 투항한 자들이 나왔을까? 중국군사령부는 이 문제에 대해

[57] 당시 중국군의 작전장비들과 개인 필수품 등에 대한 보장은 매우 열악하였다는 기록이 각종 회고록이나 군사문서 등에 의해 많이 기술되었다. 추위를 견딜 만한 옷과 신발이 없어 동상을 입은 중국군 병사의 사진이나 기록도 많이 남아 있다. 이규상 엮음(2020),『끝나지 않은 전쟁 6·25』231 쪽.

공산당부대 중 중국내전에서 패배한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인 병사들도 많이 편입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전선에서 투항한 자들이 대부분 이런 국민당출신이라고 인식하였다.[58] 이런 상황을 인지하여 1951 년 9 월 22 일에 투항 등 '변절행위'에 대해 중국군사령부는 지원군보위공작회의志願軍保衛工作會議를 열었고, 회의결과 같은 해 10 월 15 일부터 다음 해인 1952 년 3 월말까지 총 5 개월 동안 중국군내부에서 '반혁명분자反革命分子'를 숙청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59]

여기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병사들의 동원과정 및 구성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국도 내전 중이었다. 중국공산당의 군사력은 내전 중에서 패배한 국민당부대를 흡수하면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중국군병사들 중에 예전 국민당부대 소속인 병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대들은 복장만 갈아입고 '구군대舊軍隊'에서 공산당 산하에 있는 '신군대新軍隊'로 편입되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내부에서는 원래 공산당출신병사들, 전향된 전직 국민당부대원들, 젊은 학생들, 농민들, 그리고 본인의 지원과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된 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는 공산당정부가 수립된 지 1 년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던 시기였다. 공산당정부는 대만으로 내전을 확대해 통일을 이룬다는 계획이었지만,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 또한 대륙수복을 한참 꿈꾸던 시기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공산당부대 중의 일부 전직 국민당소속

---

[58] 杜平(1988),『在志願軍總部』295-296 쪽. 전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인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다만 대만측의 통계에 의하면 14,000 여 명의 대만으로 간 중국군포로들 중에는 9,234 명들이 전직 국민당부대소속인 걸로 집계되었다. 14,000 여 명의 규모에서 66%를 차지한 것이었다. 설사 전직 국민당부대 출신자들이 전부 대만으로 갔다고 해도, 이 숫자는 전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에서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정도 차지한 큰 비중이었다. 周琇環(2011),「接運韓戰反共義士來臺之研究(1950-1954)」,『國史館館刊』第 28 期 142 쪽.

[59] 杜平(1988),『在志願軍總部』295-296 쪽.

병사들은 공산주의 혹은 공산당정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다. 이들이 공산당부대에서 출신 때문에 차별을 받았거나 가족이 공산당의 토지개혁 등 정치적 운동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반공산주의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전투 중에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대만을 가게 해 달라고 유엔군에게 요청했다. 대만으로부터 국민당부대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소문 등이 더욱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다.[60] 투항한 자들의 존재는 유엔군정보당국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들의 협조를 통해 공산당부대의 각종 군사정보와 비밀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 공산진영의 심리전에서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유엔군측은 이들 투항자를 이용해 계속해서 수용소에서 중국군포로 중의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어 조사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였고 비밀리 포로들을 훈련해 정보채취 등 작업도 시켰다. 반공산주의적인 경향을 보인 이들 투항자들은 대부분이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각 대대, 중대, 소대장 등 관리직을 맡게 되었고, 수용소와 같은 폐쇄된 환경 속에서 나머지 일반포로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 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중국군의 조직상의 이러한 특수성과 이들 전선에서 투항한 병사들의 존재는 향후 중국군포로수용소의 이념분쟁과 내부충돌, 그리고 중국군포로송환문제의 복잡함을 이미 어느정도 예고한 셈이었다.

전선에서 투항한 자들을 동요시킨 것에는 유엔군의 심리전의 효과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중국군포로들이 가장 많이 포획되었던 시기인 1951년 5월 『동아일보』의 한 보도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고, '유엔군과 한국군의 우수한 선전이 매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中東部서 中共軍大部隊續續投降」

---

[60] 黃天才(2010),『我在 38 度線的回憶』73 쪽.

"美第八軍發表에 依하면 UN 軍은 五月廿日부터 同廿七日 사이에 敵兵 (主로 中共軍) 약 五千名을 捕虜로 하엿다는바 그中 三千十六名은 廿七日에 生捕한 것이다. 其大部分은 華川貯水池南方에서 生捕된 것이며 共產軍의 大量投降과 生捕는 UN 군의 急追擊開始以來 敵이 바든 熾烈하고도 長期的인 攻擊의 結果이다. 神經戰을 目標로 한 傳單과 地上 밋 空中으로부터의 擴聲器에 依한 工作이 敵으로 하여금 降服케 함에 잇서서 廣範圍로 活用되고잇다 한다……來報에 依하면 굼주림과 國聯軍의 優秀한 宣傳이 매우 效果를 나타내고 잇다 한다."[61]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중국군병사들 중에 전직 국민당부대소속인 병사들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 점은 당시의 대만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주한대사 邵毓麟은 1950 년 11 월 2 일에 중국군포로들 언급하면서 그들 중에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이고 중국동북지방에서 주둔하던 국민당 '중앙부대中央部隊'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대만정부에게 보고했다.[62] 이어 11 월 24 일의 전문에서 당시 대만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기자가 전선에서 취재한 내용을 인용해 중국군포로들은 다 대만을 가길 원한다고도 보고했다.[63] 이처럼 중국군포로들의 증가됨에 따라 일부포로들이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는 징후가 포착되었고 유엔군 및 대만정부는 이 점을 인지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포획된 중국군포로들을 심문하기 위해 유엔군측에서 중국어 통역요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따라서 유엔군의 지원요청을 받은 대만정부는 한국으로 중국어 통역요원들을 파견하는 등 유엔군의 대중국군심리전을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국에 있는 화교학교 선생들과 학생들이 당시 대만정부 주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들은 최전방에서 중국군을 상대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중국어로 확성기방송을 통해 중국군병사들에게 항복하라고 동요시키는

---

[61] 『동아일보』 1951 년 5 월 30 일자.
[62] 邵毓麟(1980), 『使韓回憶錄』 230 쪽.
[63] 邵毓麟(1980), 『使韓回憶錄』 249 쪽. 한편, 대만중앙통신 기자는 11 월 20 일에 당시 중국군포로 28 인이 국민당정부 蔣介石 총통에게 대만으로 가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국군'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도했다.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 『反共義士奮鬥史』 17 쪽.

작업을 담당하였다. 또한 포로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등 중국군포로들에 관련된 업무에 대만정부의 활동은 이들 포로들이 최종적으로 송환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에서 거주하던 화교에 이어서 대만정부는 직접 대만에서 통역요원이나 정보요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였고 대대적으로 중국군포로들에 관련된 업무를 관여하였다. 대만정부의 이러한 활동으로 대만의 소식과 정보들이 한국전쟁 최전방으로 전달되었고, 중국군병사들 특히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64] 제 3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만정부의 활동은 중국군포로들 사이의 분쟁을 더욱 자극시켰고, 유엔군의 포로송환정책도 뒷받침해주었다. 결국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는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64]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만정부는 한국으로 파병하여 대공산진영의 전쟁을 직접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정부 등의 반대로 불발되었다. 대신 유엔군측의 요청으로 대만정부는 중국군포로를 심문하는 등 중국군을 상대로 한 심리작전에 직접 관여하였다. 당시 대만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중국대륙이나 전선에 있는 중국군병사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려고 분주했다. 총통 蔣介石 역시 1950 년 11 월 13 일에 중국대륙을 상대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육성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병사들이 다 옛 국민당소속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한반도로 도착하자 즉시 유엔군에게 투항하라고 권유하였다. 또한 蔣介石은 이들에게 대만으로 오면 원래 소속이었던 중화민국 '국군'으로 복귀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15-16 쪽; 周琇環編(2005),『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9-11 쪽.

제 3 장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

3.1 수용소내부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군포로의 숫자도 계속 늘어났다. 앞서 [표 1]의 통계에서 나왔듯이 1951 년 4 월에서 6 월 사이에 중국군포로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수원, 대전 및 대구 등 지역에 분산 수용되었던 포로들은 처음에 부산으로 이송되었다가 추후 부산의 수용시실 부족으로 인해 인근 거제도로 다시 이송되었다. 중국군포로 3,000 여 명은 1951 년 5 월 13 일에 처음으로 거제도에 있는 72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65] 이 3,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는 3 개의 대대大隊로 편성되어 72 포로수용소의 1, 2, 3 북한군포로대대에 이어 4, 5, 6 대대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1951 년 5 월 17 일부터 72 수용소에 있는 북한군포로들은 유엔군포로관리당국과 수용소관리 및 포로들의 활동자유 등 문제로 충돌하였다. 결국에는 유엔군 포로관리당국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72 수용소의 북한군포로대대들은 이 사건 때문에 66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72 수용소에는 중국군포로만 남은 상태였다. 곧 이어 5 월 말에 중국군포로들은 부산에서 또 거제도로 이송되어 72 수용소의 1, 2, 3 대대로 다시 편성되었다. 이로써 72 수용소는 중국군포로들만 관리하는 수용소로 바뀌었다.

계속 증가되는 중국군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72 수용소 이외에 1951 년 6 월 12 일에 86 수용소도 신설되었다. 86 수용소는 설립된 지 한 달 뒤인 7 월 중순에

---

[65]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23 쪽.

72 수용소와 함께 6 개 대대의 중국군포로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대규모 수용소가 되었다.[66] 1951 년 9 월 중순까지 거제도에는 2 만 명에 가까운 중국군포로들이 수용되었다.[67]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군포로들의 출신과 참전배경 그리고 각자 포로가 된 과정은 다 다양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작전하는 과정에서 전투력을 상실해 생포되었던 것이지만 일부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유엔군 쪽에 투항하기도 했다.[68] 그리고 투항한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국민당부대 출신이어서 공산주의 혹은 공산당정권에 대한 악심을 품고 있었고 무기나 차량 그리고 탄약을 가지고 전투 중에 투항한 경우도 있었다. 공산주의자의 눈에는 투항한 자들이 군인으로서 부대를 배신한 사람들이었고, 투항한 자들의 눈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한 것이었다. 이처럼 복잡한 출신 및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중국내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이념분쟁과 폭력전쟁도 겪어본 사람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수용소라는 열악하고 폐쇄된 곳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갈등과 충돌은 포로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어떤 포로가 무심코 부른 공산당부대의 노래는 다른 어떤 동료포로에게 귀에 거슬리고 듣기 불편한 소리가 되고 또는 어떤 포로가 간직하던 국민당깃발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적의 상징으로 보이기도 했다.[69] 다시 말해, 중국내전에서의 이념적 대립과 충돌은

---

[66]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27 쪽.

[67]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53 쪽. 한편, 于勁(2020)에 의하면 1950 년 11 월까지 거제도 72 수용소는 7,700 여 명, 86 수용소는 8,400 여 명, 71 수용소는 230 여 명, 70 수용소는 1,5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수용되고 있었다. 于勁(2020),『厄運』259 쪽.

[68]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7 쪽.

[69] 나중에 중국본토로 송환된 공산당원 출신인 중국군포로 張澤石은 거제도 86 수용소에 도착한 후 중국군부대에서 유행되는 몇몇 노래들을 흥얼거리며 동료포로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정치적 경향을 파악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기록하였다. 또한 어떤 포로가 부른

다양한 출신의 중국군포로들에 의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군포로 사이의 분쟁과 충돌은 일종의 중국내전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군포로의 내부적 문제는 앞으로 중국군포로송환문제를 둘러싼 커다란 파장의 근간이 되는 요소였다.

중국군포로 내부의 이념적 분쟁은 포로수용소라는 폐쇄적 환경 때문에 날로 대립되고 첨예화 되었으며 폭력충돌로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상에서 어떤 정치적 경향을 보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대륙 아니면 대만으로 송환을 원하는지, 공산주의 혹은 공산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전술한 바와 같이 포로수용소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전부 포로들 사이에서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충돌은 중국본토로 송환을 원하는 '친공'이라고 불리는 공산당원들 중심으로 모인 한 쪽과 대만으로 송환을 원하는 '반공'이라고 불리는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을 중심으로 모인 한 쪽 사이에 벌어졌다. 양쪽은 포로수용소에서 나머지 다수의 중국군포로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더욱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 포로수용소 내부의 권력을 쟁탈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은 제네바협약 중 전쟁포로에 관련된 원칙을 근거해 수용소내부에서 포로들의 자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포로들은 수용소내부의 권력을 장악해야만이 상대방도 견제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측 사이의 권력투쟁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각 수용소의 포로대표 및 각 대대, 중대, 소대장의 자리는 이른바 '친공'과 '반공' 두 진영 간의 쟁탈목표가 되었다. 일부 지식인출신자나 중국군포로 중의 공산당원들은 처음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능력 등으로 수용소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점차 치열한 권력투쟁에서 물러났다. 반대로

공산당 노래 때문에 다른 포로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기록도 있다.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60 쪽.

반공산주의경향을 가진 자들은 점차 수용소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역할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유엔군의 입장에서 포로수용소 안에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엔군측은 심지어 일부 반공경향이 강한 중국군포로들을 선발해서 일본도쿄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로 보내 이들에게 정보훈련 등도 시켰고 이들을 포로수용소로 복귀시킨 다음에 수용소의 관리직에 앉히기도 했다.[70]

중국군포로 사이의 권력투쟁은 우선 거제도에 있는 대형수용소에서 일어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군포로들은 1951 년 5 월 13 일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이때 중국군포로는 72 포로수용소에서 4, 5, 6 대대로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4 대대는 일반병사들과 달리 계급이 높은 장교들로만 구성된 중국군포로 '장교대대'였다. 1951 년 6 월에 부산에서 거제도 72 수용소로 이송된 공산당원이자 중국군 20 군의 교도원[教導員]인 孫振冠은 '합법투쟁수단'으로 4 대대의 대대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72 수용소 4 대대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었다.[71]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孫振冠은 72 수용소의 북한군포로들과 수용소관리당국 간의 폭력충돌에서 북한군포로를 동조하는 이유로 포로관리당국에 의해 징계를 받았고 대대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반공경향이 있는 포로들과 수용소관리당국의 감시아래 계속해서 저지당했다. 각종 권력투쟁을 통해서 '친공' 및 '반공' 두 진영은 수용소에서 심하게 대립하였지만 포로관리당국의 지지를 얻은 '반공' 쪽 포로들은 점차 투쟁에서 우세를 보였다. 반면에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자들은 수용소에서 동료포로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받았거나 포로관리당국에 의해 각종 징계를 받곤 했다. 특히 중국군 72 수용소는 대표적인 반공진영이 통치한 수용소였고 다른 중국군포로의 눈에는 72 수용소가 1951 년 7 월 중순부터 이미

---

[70] 大鷹(2009),『志願軍戰俘紀事』57-58 쪽.
[71]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56 쪽.

전면 '백색화白色化' 되었다.[72] 즉 72 수용소는 그 때 당시 이미 반공진영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제도에서 각 수용소내부의 권력투쟁의 결과로 각자 '반공' 혹은 '친공', '대륙송환' 또는 '대만송환'으로 확연하게 대립되고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공 쪽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국민당정부를 상징하는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를 게양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친공 쪽 포로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공산당정권을 상징하는 '오성홍기五星紅旗'를 게양해야 된다고 맞섰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심각한 유혈충돌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다수 중국군포로가 수용되던 또 하나의 대규모 수용소, 1951 년 6 월에 신설된 86 수용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먼저 86 수용소에 들어간 중국군포로 제 1 대대는 부산에서 수용되던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통치권을 장악한 집단이었다. 86 수용소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소전체의 관리권을 가지기 위해 나섰다.[73]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51 년 7 월 하순에 86수용소의 여러 실권자들은 포로관리당국에 의해 부산으로 압송되어 조사받았다. 86 수용소의 친공포로들은 이를 반공포로들이 뒤에서 관리당국과 손잡아 수용소의 관리권을 가지려고 쓰는 꼼수라고 인식하였다. 이어서 1951 년 8 월 2 일에 72 수용소 반공포로의 대표인물인 李大安은 포로관리당국 관계자의 지시하에 86 수용소에 와서 실권자 2 위인 '부연대장'직을 맡았다.[74] 86 수용소에 있는 전체 중국군포로를 관리하는 자리에서 86 수용소를 72 처럼 반공진영이 철저하게 통치하는 수용소로 바꾸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는 86 수용소의 공산주의자 등 다른 포로들의 저지로 무산되었으며 李大安은 다음 날인 8 월 3 일에 다시 72 수용소로 돌아갔다.

---

[72] '백색공포(White Terror)'는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시기에 국민당정부가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공산당원 또는 공산주의지지자들 상대로 한 체포 및 진압 등으로 조성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인용된 '백색화'는 국민당출신 혹은 국민당을 지지하는 포로들이 거제도 72 수용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었다.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34 쪽.

[73]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26 쪽, 314-315 쪽.

[74] 于勁(2020),『厄運』38-39 쪽.

86 수용소의 권력투쟁은 계속 이어갔다. 반공포로들은 86 수용소의 내부규율을 유지하는 '경비대'를 장악했고 10 월 9 일 밤에 친공과 반공 두 진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다음날 10 월 10 일은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의 '국경절'이었다.[75] 반공포로들은 대만정부에게 충성심을 보이려고 이날 아침에 수용소에서 국민당정부를 상징하는 '청천백일기'를 게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막으려고 나서자 양측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86 수용소의 핵심공산주의자들은 폭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관리당국에 의해 징계를 받았고 86 수용소의 공산주의세력 역시 이로 인해 크게 좌절되었다. 이미 반공세력의 통치아래에 있는 72 수용소처럼 86 수용소도 반공세력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거제도 뿐만 아니라 부산도 포로들 사이의 권력투쟁의 장이었다. 일반 포로들과 달리 전쟁 중 부상한 포로들은 우선 부산에서 설치된 상병포로들을 치료하는 '병원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경우에 따라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전쟁 중 유엔군에게 투항한 '변절자'들은 크게 부상할 일이 없었고 게다가 같은 곳에서 치료받는 북한군부상자들의 지지도 있었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는 반공포로와 조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따라서 친공산주의 쪽의 중국군포로들은 부산에 있는 상병포로수용소에서 보다 쉽게 통치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76] 그리고 부상한 자들을 집중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상병수용소는 다양한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다. 각종 소문이나 정보도 사람들의 움직임 따라 같이 모였다.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는 서로 다른 수용소에서

[75] 당시 중국군포로들 사이의 정치적 경향에 따라 친공 및 반공진영들은 각자 다른 '국경절'을 기념했다. 친공진영은 1949 년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절인 10 월 1 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반공진영은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국경절인 10 월 10 일을 기념했다. 양 쪽은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보인 가운데 상대 측 행사 역시 폭력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 이처럼 중국군포로 사이에서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폭력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76]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9 쪽.

관리되던 북한군과 중국군포로들은 여기서 만나고 소식을 주고받았다. 일종의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1951 년 10 월까지의 중국군포로수용소내부의 권력투쟁 상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출신배경 및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한 이념적 괴리는 포로들 사이에서 분쟁과 충돌을 야기했고, 양측사이의 권력투쟁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투쟁의 결과는 반공 쪽의 우세로 일단락되었지만 양측의 대립은 여전했다. 크고 작은 충돌은 72 와 86 두 수용소에서 계속 나타났다. 한편 권력투쟁에서 열세를 보인 공산주의자들은 72 와 86 에서 나와 71 수용소에서 그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국경절 깃발게양사건으로 징계 받았던 86 수용소의 81 명 공산주의자들은 징계가 끝난 후 72, 86 두 수용소 모두 가지 않겠다고 포로관리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1951 년 11 월 10 일에 이 81 명의 포로들은 72 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수용소입구 앞에서 72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관리당국과 설전을 벌인 끝에 이들은 71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거기에는 마침 3 일 전인 11 월 7 일에 72수용소에서 투쟁을 벌이다 탈출한 14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와 있었다. 72와 86 수용소의 일부 친공포로들은 71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합류하였던 것이다.

71 수용소는 이들 친공포로에 의해 '소연안小延安' [77] 이라고도 불렸고 친공포로들의 중심지가 되어 72 와 86 의 반공주의자들과 맞서는, 그리고 대만이 아닌 중국본토로 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이 모인 수용소가 되었다. 1952 년 4 월 8 일에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이 중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심사와 분리를 진행했을 때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정부를 상징하는 오성기五星旗를 게양하는 것도 71 수용소에서였다. 한 마디로, 그동안 중국군포로 사이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은

[77] '연안(延安)'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 중국공산당의 활동중심지로써 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이상의 근거지로 여겨졌던 곳이었다. 당시 연안에 좌익조선인들도 중국공산당과 같이 활동하였으며 광복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서 조선로동당 내부의 이른바 '연안파'를 결성하기도 했다.

같은 수용소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과 달리 공산주의자들이 따로 71 수용소에서 집중되었다는 것은 중국군포로 사이의 투쟁이 수용소 단위로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각 수용소에서 투쟁을 벌이다 탈출한 공산주의자는 자신만의 활동공간을 얻은 셈이었다. 이에 따라 반공과 친공 양쪽 진영 간의 대립은 거제도에서 확연히 공개화되고 더욱 심화되었다.

반공포로에 의해 계속해서 억눌렸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71 수용소를 활동기지로 삼고 72 와 86 의 반공주의자들과 맞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공산당부대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고 공산당부대의 질서를 유지하며 대만이 아닌 중국본토로 송환해 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였다. 이로써 같은 중국군포로들이지만 이들은 정치적 주장 등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 다른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고 거제도포로수용소도 마치 중국내전시기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교전하는 최전방이 된 듯했다. 중국내전은 이들 중국군포로에 의해 거제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였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71 에서 북한군포로들과 접촉하여 포로수용소에 있는 노동당지하조직과 연대도 했다는 것이다. 친공 쪽 중국군포로의 지도자 중 한 명인 孫振冠은 71 로 오기 전에 노동당지하조직 지도자인 박상현朴相顯과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71 의 환경에서 더욱 외부의 간섭없이 보다 쉽게 북한측 포로조직과 접촉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78] 이런 연대활동은 향후 북한군포로들이 포로관리당국 책임자를 억류한 '돗드사건'[79]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

[78]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61-62 쪽.

[79] 1952 년 5 월 7 일에 중국군포로 중 공산주의자들의 협조하에 북한군포로들은 당시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책임자인 돗드(Francis Dodd) 준장을 억류한 사건이었다. 그 후 5 월 10 일에 돗드가 석방될 때까지 중국군과 북한군 포로들은 돗드하고 여러차례 협상을 벌였다. 포로들은 관리당국에게 포로들 상대로 한 무력진압, 감금, 협박, 고문과 살해 등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따라 포로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협상결과로 돗드는 포로수용소장으로서 관리당국의 책임을 시인하고 관련 문서에서도 서명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세계적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한국전쟁포로처리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판문점에서 진행되던 휴전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때 중국군협상

이상으로 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들은 거제도 혹은 부산에서 수용되는 상황 및 수용소에서 중국군포로내부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상황을 살펴봤다. 요약하자면 우선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국도 내전 중인 상황이었고, 중국공산당정권은 수립된 지 1 년도 안 된 신생정권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병사들도 출신이 다양했으며 전직 국민당부대출신 병사들도 많았다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총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쟁을 참여했다는 점도 있었으며, 이러한 출신이 다양한 부대가 신생 공산당정권 및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심을 얼마나 갖고 있었을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양한 출신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가 된 이들도 역시 다양했다. 전투력을 상실해 생포된 자가 있는 반면에 유엔군의 전단지를 들고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투항한 자 중에 전직 국민당부대 출신자가 많아서 이들은 포로수용소에서 반공산주의입장과 대만으로 송환을 희망한다는 주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이는 포로 중의 공산주의자 및 그 지지자들과 심각하게 대립하고 충돌하였다. 이 충돌은 포로 사이의 권력투쟁을 야기했고, 양측 모두 수용소의 내부통치권을 장악하려 했다.

문제는 간단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중국국민당정부가 있는 대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중국공산당정부가 있는 대륙으로의 송환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결과 포로관리당국의 지지하에 반공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권력투쟁에서도 절대적인 우세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중국본토가 아닌 대만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한편, 권력투쟁에서 밀린 일부 공산주의자가 반공포로들이

대표인 張澤石의 회고록 등 참조.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32-148 쪽.

통치한 수용소에서 탈출해 따로 수용되었다. 중국군포로의 투쟁양상도 이에 따라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경향을 떠나서 충돌에 직접 참여했던 중국군포로들은 소수였다는 점이다. 나머지 다수의 포로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이 질문은 반공 및 친공 포로들의 활동을 검토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반공' 혹은 '친공'은 전체포로들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부 정치적 주장이 강한 포로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수의 포로는 이처럼 정치적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공간에 갇힌 사람들로서 어쩔 수 없이 친공과 반공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며 투쟁에 끌려들어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좌우됐을까? 이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을 더욱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 포로들의 조직화 및 폭력문제

수용소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권력투쟁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으로 투쟁하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중국군포로들의 내부조직화는 수용소생활이 시작됐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쟁 중에서 단체로 작전하듯이 수용소에서도 이들 포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혹은 공산당원과 청년단원들, 그리고 본토송환을 희망여부 등 기준으로 각종 조직을 만들었다. 사관학교출신인 선후배들과 동창들, 같은 고향에서 온 동네친구들 등 각종 포로들의 조직이 수용소에서 나타났다. 힘든 환경 속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고 의지하려는 인류의 본능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초기에 정치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포로들의 출신배경은 다양했고 지식수준은 낮았다. 정치적 주장과 갈등보다 수용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급선무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 대만으로 간다는 것도 그저 일부 포로에 의해 떠도는 설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1951 년 5 월에서 6 월 사이의 중국군포로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휴전협상이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군포로 중의 일부는 강력하게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대만으로의 송환을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공산당군출신의 포로들 사이에서 명명백백하게 반공산주의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변절행위였고 이런 주장과 행동은 곧바로 사람으로 가득 찼던 수용소에서 찬성과 반대의 대치를 야기했다. 수용소내부의 권력투쟁도 곧바로 대만이냐? 대륙이냐?라는 질문을 둘러싸여 시작되었다. 중국군포로 사이에서 확연히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대만은 처음부터 포로들 앞에서 놓인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원하면 대만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포로들이 전쟁이 끝나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전쟁포로에 관련된 국제법에도 명시돼 있었던 인류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국군부대의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전쟁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투항한 병사들을 비롯하여 중국본토로 송환될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동시에 대만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포로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최적의 송환지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대만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들 반공산주의 포로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물론 대만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들 반공포로에게 대만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로들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대만정부도 확실히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80]

따라서 본토송환 거부의사를 표시한 포로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 둘씩 모여서 반공조직을 만들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집단은 '중국국민당 반공청년구국단中國國民黨反共青年救國團'과 '반공항아청년동맹회反共抗俄青年同盟會', 그리고 '중국국민당 63 지부中國國民黨六三支部' 등 3 개가 있었고, 이들은 반공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활동했다.[81] 구국단은 1951 년 5 월 28 일에 거제도 72 수용소에 있는 일부 반공포로에 의해 소집회의가 열린 이후 7 월 2 일에 설립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반공진영의 실력을 계속 키우고 친공산주의 쪽의 포로들과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설립 이후 구국단 소속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혈서血書와 문신文身[82]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대만으로의 송환을 희망한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동시에 자신들과 같이 수용된 나머지 포로들에게도 이 길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설립 이후 5 개월이 지난 1952 년 1 월까지 구국단은 총 8,500 개의 단원증을 발급하였다.[83] 비슷한 시기인 1951 년 6 월에 반공이념을 내세운 중국국민당 63 지부가 72 수용소의 장교출신 포로들로만 구성된 제 4 대대에서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63 지부는 '一顆心回台灣, 一條命滅共匪', 하나의 마음은 대만으로

---

[80] 1952 년 1 월-4 월 사이 대만정부 주한국대사관과 대만외교부 간에 오가는 전문을 보면 당시 유엔군측은 이미 자원송환정책을 수립했는데도, 대만정부도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전수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만정부는 여전히 반공포로들이 대만으로 최종적으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대만정부 주한국대사관에서 책동과 선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자극해야 된다는 정책제의도 대만정부에게 보냈다.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포로들의 대만송환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정책이었다. 周琇環編(2005),『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181 쪽, 215 쪽, 234-235 쪽.

[81]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51-68 쪽.

[82] 글자를 몸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예로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여겨져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역사 중에 송나라 때 岳飛의 어머니는 그의 등 뒤에 '精忠報國'라는 글자를 새겨, 충성을 다해 조국을 보답하라고 아들에게 격려한 이야기가 전해진 바 있다.

[83]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52 쪽.

향하며, 하나의 몸은 공산주의비적匪賊을 멸살한다는 행동지침을 제시하였고 향후 중국군포로 중의 반공활동을 이끌었다.

72 수용소의 구국단 및 63 지부를 이어서 86 수용소에서도 1951 년 10 월 9 일의 '중화민국기게양사건' 이후 10 월 12 일에 '반공항아동맹회'가 설립되었다. 공산당과 소련을 적으로 여기고 이와 싸우겠다는 취지였다. 이 동맹회의 설립 규칙에는 회원의 왼쪽 팔에 '反共抗俄반공항아' 4 글자를 문신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84] 즉 이 조직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자신의 왼쪽 팔에다가 반공문신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회원들의 대만가기의 의지를 다짐하였던 것이다. 반공조직에서 문신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러한 반공문신을 한번 했으면 영영 공산당정권이 통치하는 중국본토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가면 무조건 공산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고 회원들의 이탈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신을 통해 누가 나와 같은 쪽인가를 알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수용소에서 자의든 아니든 간에 포로들의 몸에 새겨진 이 문신들은 나중에 대륙과 대만으로 간 포로들의 공통의 기호가 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문신들이 치욕의 상징이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광의 표시였다. 문신을 치욕의 상징으로 여겼던 포로들은 나중에 귀국전에 수용소에서 고통을 참아 칼로 자신의 문신을 없애기도 했지만, 대만으로 간 포로들은 나중에 대만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문신을 지우기도 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영광과 치욕도 퇴색된 듯했다.

한편, 중국본토로 송환을 원하는 공산당원출신 포로들과 공산당정권에 대한 호감 혹은 충성심을 보인 자들, 그리고 순수 고향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토송환 희망자들 역시 수용소에서 자기들만의 조직을 결성하였다.

---

[84] '반공항아애국청년동맹회' 조직규정 제 5 장 제 1 조.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56-57 쪽.

부산상병수용소에서 이들은 복잡한 수용소내부의 상황을 보고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모아 '귀국소조回國小組', '애국주의모임愛國主義小組' 혹은 '모택동청년단毛澤東青年團', 그리고 '중국인애국향우회中國人愛國同鄕會' 등을 조직하였다. 1952 년 1 월에 중국군포로 郭兆林, 王化英 등이 '부산포로수용소 항미원조동맹회釜山戰俘營抗美援朝同盟會'를 발족시켜 부산의 각 조직들을 통합해 더욱 큰 집단으로 본토송환을 호소하면서 반대진영과 투쟁하기로 결심했다.[85] 부산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병포로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라서 반공세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본토송환을 원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대만으로 가야 된다는 압박도 피할 수 있었다. 반면에 거제도의 72 와 86 수용소에는 친공과 반공 두 진영 간의 충돌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본토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반공진영의 위협 앞에서 조직활동이나 연대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72 와 86 수용소에서는 친공포로쪽의 조직들이 대부분 비밀로 결성되고 활동하였다. 대표적으로 72 와 86 수용소의 중국공산당 '지하당지부地下黨支部'와 86 수용소의 사천성四川省출신자들로 구성된 '가로회袍哥會' 등이 있었다.

1951 년 11 월에 '10·9 중화민국기게양사건' 등 일련의 친공과 반공조직들 간의 투쟁을 통해 성공적으로 72 와 86 에서 탈출한 일부 공산주의자는 71 수용소에서 모였다. 71 수용소는 이로써 본토송환을 원한 포로들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기점으로 이들은 71 수용소에서 새로운 공산당조직을 결성하는 등 72 와 86 에 있는 시절보다 한 층 더 치밀해지고 공개화된 공산주의 조직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52 년 4 월 초부터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이 중국군포로들 상대로 이른바 개인의 송환의향에 따라 포로들을 심사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총 6,000 명 정도의 본토송환을 원한 포로들이 전체 중국군포로 중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지은 거제도 602 수용소로 집결되었다가 7 월에 다시 제주도로

[85]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2 쪽, 345-346 쪽.

이송되었다.[86] 포로들을 상대로 한 포로관리당국의 분산관리정책 때문이었다. 각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온 본토송환을 희망한 이들은 새로운 조직인 '공산주의단결회共產主義團結會'를 결성하였으며 이 단결회는 향후 1 년여 간 친공산주의포로들의 일상과 투쟁활동 등을 총괄하여 조직하였다. 단결회의 행동지침에 따라 포로들이 시위와 항의 심지어 단식 등 투쟁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며 공연과 포로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실시하였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중국본토로 송환될 때까지 단결회는 친공산주의포로 쪽의 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이처럼 포로수용소에서 친공과 반공진영의 포로들은 각자의 조직을 통해서 수용소의 내부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또한 전시戰時의 상황에서, 포로수용소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포로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앞으로 생사도 가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폭력적 요소들이 이 과정에서 동원되었다. 포로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포로들 사이에 참혹한 살인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1951 년 7 월에 휴전협상 시작한 다음에 두 진영은 수용소에서 '사람 쟁탈전'을 전개했으며 더욱 많은 수의 포로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특히 반공진영의 경우는 대만으로 송환된다는 목표를

---

[86] 602 수용소의 구성은 72 와 86 수용소에서 투쟁하다가 1951 년 11 월에 71 수용소로 탈출한 254 명의 포로들과 1952 년 4 월부터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이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를 통해 72 와 86 에서 나온 3,800 여 명의 포로들, 그리고 70 수용소의 1,270 명의 포로들, 61 수용소와 부산 각 상병수용소에서 온 포로들 등 총 6,000 명 정도였다. 602 수용소의 포로들은 앞으로 중국본토로 송환된 중국군포로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99 쪽. 하지만 심사를 통해서 각 수용소에서 602수용소로 이송된 포로들의 정확한 규모는 당사자 및 정부문서 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다. 1952 년 4 월 28 일 대만정부 주한국대사관의 보고서에는 제 86 수용소에서 1,128 명, 72 수용소에서 400 여명, 70 수용소에서 1,500 명이 본토송환을 선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周琇環編(2005),『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234 쪽; 于勁(2020),『厄運』337 쪽도 참조.

이루기 위해 포로수용소에서 나머지 포로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대만송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국제사회의 주목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고, 휴전협상에서 강제송환을 강력히 비판하는 유엔군측에게도 유리하며 대만으로 간다는 최종목표도 성사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공포로들은 수용소에서 대대적으로 반공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나머지 포로들을 상대로 위협적이고 강제적인 수단 등을 동원해 대만으로 간다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반공포로들 사이에서만 나타났던 혈서쓰기와 반공문신 등은 이제 반공조직에 의해 일반포로들에게도 강요되기 시작하였다. 반공포로들은 이런 방법으로 일반포로들의 본토송환요구를 막으려고 했다. 대만으로 보내달라는 혈서쓰기운동에 참여하거나 몸에 반공문신이 있는 포로들이 본토송환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두려워해 대만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1951 년 7 월 2 일에 72 수용소에서 179 명 중국군포로들이 '반공구국단' 설립대회에 참가하였다. 휴전회담이 곧 시작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혈서로 써서 수용소 밖으로 보내는 것을 결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 본토송환을 거부하고 대신 대만으로 가겠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포로들은 설립대회 참가자의 피를 모아 '대만으로 간다', '국민당정부에게 충성한다',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혈서를 써서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 蔣介石 총통,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트루먼 Harry S. Truman 미 대통령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앞으로 각각 전달하기로 했다. 첫번째 혈서쓰기 운동 이후에도 구국단 등 반공조직의 활동에서 반공포로들은 여러차례 혈서쓰기를 진행하였으며 참가 인원수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심지어 1951 년 12 월에 반공포로들의 조직하에 4 번째 혈서를 썼을 때 참가자 수는 72 수용소의 전체수용인원인 9,000 명이라고 포로들이 대외적으로 과시했다.[87] 반공포로들이

[87]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39 쪽.

72 수용소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증거였다. 나중에 중국본토와 대만으로 간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은 밝혀졌지만 당시 반공조직에서 대대적으로 폭력을 동원해 많은 일반포로들에게 대만으로 송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반공조직의 위협 앞에서 일반포로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반공포로들이 택한 더욱 참혹한 방법은 반공문신을 강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풍습은 중국에서 예로부터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근대 중국의 내전 중에서 전향, 귀순 및 항복한 병사들의 복종 등을 대변하는 일종의 충성표시로도 활용되었다.[88] 반공포로의 입장에서 중국군은 공산당의 군대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군 포로의 몸에다가 반공문구를 새기는 것은 공산주의와의 연결을 철저히 단절시키는 수단이었다. 반공문신을 가지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본토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반공조직들은 포로수용소에서 혈서쓰기와 동시에 문신을 하는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쳤다.

1951 년 7 월부터 72 수용소에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문신은 반공포로내부의 의지와 단결을 다짐하는 수단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공에 대한 확고함을 인정 받은 자들만이 문신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문신을 하는 대상자범위는 점점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반공포로들이 통치한 72 와 86 수용소에서 보편화 되었다. 문신의 내용도 '공산당과 소련을 반대한다反共抗俄'에서 '朱德[89] 과 毛澤東을 죽인다殺豬拔毛', '공산비적을 섬멸한다殲滅共匪', '대만으로 돌아간다回台灣' 그리고 '毛澤東을 생포한다活捉毛澤東' 등으로 점점 다양화 됐다. 많게는 100 여 개의 글자를 문신한 사람도 있었고, 글자 이외에 중국지도, 국민당의 표시 그리고 깃발 등을

[88]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368-369 쪽.
[89] 당시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명이며 '개국원수'로서 중국군부의 통솔자였다.

문신하기도 했다. 문신을 하는 신체부위도 양쪽 팔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손, 등, 배, 다리, 가슴 등으로 몸 전체로 퍼졌다.[90]

반공포로들이 조성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은 곧 반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들이 장악한 수용소에서 반공을 하지 않는 것은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따라서 대부분 일반포로들은 어쩔 수 없이 반공조직의 협박하에 문신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하는데, 안 하면 반공을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는다', '문신을 안 하면 때린다', '누가 반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등 다수의 포로들의 회고록에서 이처럼 폭력과 강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91] 심지어 반공포로들이 중국본토로의 송환을 끝까지 요구한 포로들을 불러서 폭행하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며 심장을 도려내는 잔인한 사건도 발생하였다.[92]

폭력은 어느 한 쪽만의 특징이 아니었다. 반공포로들이 장악한 수용소에서는 본토송환을 요구하는 포로들이 폭력에 희생되는 대상이었지만 본토로 돌아간다는 포로들로 구성된 수용소에서는 마음 바뀐 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서 탈출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대상이 되었다. 1952 년 4 월부터 포로관리당국은 전체 포로들에 대해 심사와 분리작업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포로들의 송환의향에 따라 '본토송환을 희망한다'로 분류된 자들을 제주시 쪽에, 14,000 여 명의 '송환거부'로 분류된 포로들을 제주 모슬포 쪽에 분산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본토송환을 희망하는 수용소는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단결회가 수용소내부를

---

[90]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48 쪽.

[91] 高文俊, 文健友 인터뷰,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304-305 쪽, 347 쪽.

[92] 1952 년 4 월 7 일 밤에 반공포로의 대표인물인 李大安 등 몇 명이 72 수용소에서 끝까지 본토송환을 요구한 중국군포로들을 불러서 폭행하고 잔인하게 이들 중의 2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수 포로들의 회고록 및 당시 작성된 역사자료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332-333 쪽; 劉通和 인터뷰,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329 쪽;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22-123 쪽.

관리하였다. 당시 이 단결회에서는 전체 6,000 명 정도의 포로들 중 약 50%정도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분자', 40%의 '중간자', 그리고 소수의 투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93] 따라서 소수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 전선에서 투항한 사람, 공산주의지도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포로관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조직을 파괴한 사람 등은 본토송환을 원하는 포로들 사이에서 청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17 명의 포로들이 단결회의 승인하에 수용소내부에서 동료포로들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살해되었다.[94]

수용소 밖에는 미군과 남한군 병사들이 경비하고 있었지만, 수용소내부는 포로들만의 작은 세계였다. 포로관리당국은 수용소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행동은 없었다. 아니면 그런 의도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외부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었던 막사 안에서 폭력은 그들만의 유일한 정글의 법칙이었다. 폐쇄된 환경 속에서 포로들은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원시적인 사회질서에 복종해야 했고, 수용소는 인간의 악을 지극히 확대시켰던 장소였다.

중국군포로들 내부의 폭력 뿐만 아니라,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포로들 사이의 폭력현상을 지속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포로관리당국 자체도 이른바 포로들의 '폭동'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침없이 총기 등 화력을 동원했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포로수용소의 폭력문제를 검토할 때 포로관리당국에서 포로들에게 가한 폭력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관리당국은 사실 수용소폭력의 가장 큰 가해자였다.

---

[93]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216 쪽.
[94] 于勁(2020),『厄運』410 쪽;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211-212 쪽.

1951 년 6 월 18 일부터 거제도 72 수용소에 있는 북한군 장교대대 포로들은 급식 및 수용소 관리 등 문제로 포로관리당국에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튿날인 19 일에도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자 포로관리당국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포로 7 명이 사망했고 4 명이 부상을 입었다.[95] 이는 거제도에서 포로들이 일으킨 저항운동 중 단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첫번째 사례였다.[96] 당시 72 수용소에서 중국군포로들도 같이 수용되어 있었고 이 사건을 목격한 일부 중국군포로들도 단식투쟁을 동참하는 등 북한군포로의 저항을 응원하였다. 이 사건으로 시작하여 수용소 내 포로들의 항의를 진압하기 위해 포로관리당국은 계속해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하였고 포로들의 사상도 속출했다.

1952 년 5 월 7 일에 76 수용소에서는 북한군포로들이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책임자인 포로수용소장 돗드 준장을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이후 한 달 뒤인 6 월 10 일에 포로관리당국은 76 수용소에서 무력을 동원해 포로들의 저항을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300 여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97] 또한 같은 해 10 월 1 일에 제주도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오성기를 게양했다는 등의 이유로 포로관리당국은 화력을 동원해 포로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군포로 65 명은 사망했고 100 여 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98] 아무리 포로들의 불만표시, 시위 및 저항들을 전부 '폭동'이라고 규정해도, 한 쪽은 돌과 깡통을 사용했고, 이를 진압한 쪽은 기관총과 탱크까지 동원해 압도적인 무력을

---

[95]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186 쪽.

[96] 金幸福(1996),『韓國戰爭의 捕虜』113 쪽.

[97]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중국군포로대표 張澤石의 회고록에 의하면 사상자가 총 300 여 명이 발생했다. 한편 조성훈(2010)에 의하면 사망 40 명, 부상자 142 명이었다.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56 쪽;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265 쪽.

[98] 이 사건의 사상자 수 역시 회고록 및 연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는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사상자 총 165 명이었고, 중국군포로대표인 張澤石의 회고록에서는 185 명으로 서술되었다. 한편 조성훈(2010)은 사망 56 명, 부상 91 명으로 기술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사망 52 명, 부상 113 명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240-241 쪽;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297 쪽.

사용하였다. 이처럼 포로에게 가한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무차별한 폭력으로 수용소에는 공포의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중국군포로내부의 폭력도 처음부터 포로관리당국의 방치 심지어 묵인하에 점차 심해졌고 포로들 사이의 대립도 이로 인해 날로 첨예화되었으며 결국은 끔찍한 사건들이 포도들이 송환될 때까지 계속 나타났다.

수용소는 결코 편안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부산에서 거제도로, 거제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제주도에서 판문점으로 이송되었고 3 년정도 1951.4-1954.1 의 긴 세월 동안 기한없는 기다림에서 초조하게 매일매일을 버텨야 했다. 온통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외부세계와의 단절,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상과 현실 간의 충돌은 이들에게 한꺼번에 몰아쳤다. 지극히 폐쇄된 환경에서 수용소 내·외부로부터 오는 공포감과 폭력은 이들의 마음을 동요시켰고 이들의 운명도 좌우했다.

포로수용소의 폭력문제는 포로들의 송환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많은 상상을 초월한 폭력이 수용소에서 동원됐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철거되면서 1,200 여 구가 넘는 포로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는 포로수용소 안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눠야 했던 그들간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99] 수용소의 폭력문제는 결국에 중국군포로들 사이에 많은 것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휘둘러 살인의 악마가 되어 버렸고, 어떤 사람은 이상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였다. 중국군포로의 송환문제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좌우되었다.

---

[99]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4D 영상관에서 상영되는 수용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거제도'에서 나온 소개내용.

3.3 또 하나의 전쟁터: 포로에 대한 심리전

적군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은 전쟁 중에서 상대편의 사기와 전투력을 동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서 인류역사상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현대전쟁에서는 이를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이라고 부른다.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이야기[100]가 바로 고대전투에서 심리전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전쟁에서의 심리전은 다양한 방법과 전술이 동원된다. 한국전쟁에서도 교전양측에 의해 심리전이 많이 활용되었다. 선전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전선에서의 확성기 및 라디오 방송 등은 한국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심리전의 수단이었다.

이른바 '삐라'라고 불리는 전단지살포는 한국전쟁 내내 한반도 곳곳에서 대량으로 뿌려졌다. 기록에 의하면 미 극동사령부 Far East Command 가 한국전쟁 시기 총 40 억 장의 삐라를 제작하여 전방과 후방 곳곳에 뿌렸다.[101] 이렇게 많은 양의 삐라를 뿌렸는데 효과는 어땠을까? 중국군포로들의 증언 중에서 유엔군이 살포한 전단지를 들고 투항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타났다. [102] 또한 전선에서 확성기방송을 통해 대만에 있는 중국국민당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투항했다는

---

[100] 기원전 202 년에 초(楚)나라의 항우(項羽)가 통솔한 군대가 유방(劉邦)의 한군(漢軍)에 의해 포위되었다. 어느 날 한밤 중에 초군(楚軍)을 4 면으로 포위한 한군(漢軍) 중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렸다. 초군은 이 노래들을 듣고 깜짝 놀라 한군이 이미 초의 땅을 다 점령하였고 초나라 사람들을 잡고 군인으로 충당하였다고 생각했다. 슬픈 분위기에 빠진 초군의 사기가 크게 좌절되었다. 사실 이는 한군이 일부러 초나라 노래를 부르고 초군을 동요시키려고 하는 전술이었다.

[101] 육군 심리전감실 편(1957),『현대심리전』189 쪽; 국방부(1956),『政訓大系 1』B445 쪽. 이임하(2012),『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11 쪽 재인용. 한편 다른 연구에 의하면 20 억 장, 25 억 장 등 숫자도 제기되었다.

[102] 중국군포로 중 반공진영의 핵심인물인 李大安 등 6 명은 바로 유엔군이 살포한 '포로우대'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들고 투항한 것이었다. 于勁(2020),『厄運』76 쪽; 常成(2016),「'新中國'的叛逃者-韓戰反共戰俘的生死逃亡路, 1950-1954」, 漢學研究第 34 卷第 2 期, 245-280 쪽 재인용.

전직 국민당부대소속인 병사들도 있었고 심지어 포로로 잡힌 즉시 미군의 명령에 따라 군용비행기를 타고 중국어로 확성기방송업무에 동원된 사례도 있었다.[103] 적어도 미군 스스로는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전을 '매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04]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아래 [표 2]에서 1951 년 1 월부터 다음 해 1 월 31 일까지 중국군 1,391 명에 대해 심문을 실시한 결과 그 중에서 952 명은 심리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전체에서 68.4%를 차지한 비율이었다. 심문을 받은 포로들 중에 특히 전선에서 항복한 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90.5%가 심리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심리전의 여러 수단 중에서도 삐라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표 3]의 통계결과를 보면 1952 년 1 월부터 1953 년 4 월까지 전체 378 명의 중국군포로들에 대한 심문에서 153 명은 삐라의 영향을 인정했다고 집계되었다. 이는 삐라가 확성기방송 등 나머지 수단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표 2] 1951.1.1-1952.1.31 포로 심문 결과[105] (단위:명)

구분	중국	북한	총계
피심문자 수	1,391	1,708	3,099
심리전에 영향 받은 수	952	1,126	2,078
피심문자 가운데 항복한 수	882	1,327	2,209
심리전에 영향 받은 수	798	1,025	1,823

[103] 蕭力行 인터뷰,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404-405 쪽.
[104] 앞서 26-27 쪽 각주 61 번 동아일보 보도 참조.
[105] GHQ, FEC Command Report, 1952.2, Psychological Warfare Section, RG 407 Box 631. 이임하(2012),『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74 쪽 재인용.

[표 3] 1952 년 1 월-1953 년 4 월 포로의 심문서와 심리전의 영향[106] (단위:명)

구분		1952 년 1 월-12 월		1953 년 1 월-4 월	
		중국	북한	중국	북한
보고 수		348	453	30	37
심리전 효과로 결정	잡힌 수	138	55	10	4
	항복한 수	210	398	20	33
	삐라 영향	140	219	13	11
	방송 영향	9	4	4	6
	둘다 영향	26	43	4	11
	영향 받지 않음	35	133	9	9

삐라에서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다양했지만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대표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적으로 충돌하는 배경하에 유엔군의 삐라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내용 위주로 제작되었다. 그 다음에 중국군의 해외작전의 특수성을 의식하여 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가족 관련 이야기, 생활이야기 등의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이 포로를 우대한다, 식량을 충분히 제공한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등 중국군병사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오늘날 같은 빅데이터 Big Data 시대에서 회사들이 누리꾼의 온라인 활동 및 취향 등 개인정보를 분석해 특화된 광고물을 선정해서 투입하는 것처럼 당시 유엔군도 북한군, 중국군, 전방과 후방 그리고 군인 및 민간인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106] EUSAK/Supporting Documents Section Ⅱ Book 4 Assistant Chief of Staff G3(1952.11, RG407, Box 1416; 1952.12, RG407, Box 1428; 1st Loudspeaker and leaflet company, 1953.4, RG 407 Box 1469). 이임하(2012),『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75 쪽 재인용.

‘맞춤형’ 삐라를 제작하여 살포했다. 다양한 상대들에게 서로 다른 선전물을 써야 된다는 인식에서였다.

1950 년 9 월에서 1951 년 11 월 말까지 미군이 살포한 삐라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군을 상대로 살포한 삐라에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 차지한 비율은 북한군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미군이 중국군병사들의 출신과 참전배경의 다양함, 그리고 소속부대에 대한 충성도가 북한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중국군병사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을 살포하면 북한군보다 더욱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07]

심리전은 전쟁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포로수용소 역시 심리전의 또 하나의 주요 활약장소였다. 유엔군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적대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수용소내부의 공산주의자들도 당연히 엄밀히 감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조직활동 및 연대행동 등도 억제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이 선택한 첫번째 중국군포로들에 대한 심리전 방식은 포로수용소내부의 반공세력을 지지하고 이들을 통해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산주의세력 혹은 친공진영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수용소에서 반공과 친공포로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유엔군측은 항상 반공포로들을 이용해 공산주의지도자 혹은 지지자들 찾아내 징계를 했다. 수용소내부의 공산주의세력이 이런 과정에서 많이 좌절되었고 억압되었다. 포로관리당국의 입장에서 공산세력을 억제하는 것은 수용소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가 짙으면 짙을 수록 교전하는 양측 사이의 이념적 분쟁에도 유엔군측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공산군포로의 전향은 유엔군측에게 이념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1 년 7 월에 휴전회담이 시작된 다음에

[107] 정용욱(2010),「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 (2010),『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273-274 쪽.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반공진영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포로들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폭력행위 등도 더욱 빈번히 일어났다. 반공포로들은 다른 일반포로들에게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대만송환을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휴전회담장의 상황도 유엔군측에게 더욱 유리해졌다. 이처럼 일부반공포로들이 수용소의 내부통치권을 장악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유엔군의 심리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엔군측은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 반공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포로들 중 반공경향이 강한 '결사반공'을 하는 포로들을 선발해 일본도쿄로 보내 특별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돌아와서 각 수용소의 관리직을 맡았고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훈련을 받은 일부 포로들은 강제로 유엔군의 정보요원으로도 동원되어 육로 혹은 해상, 그리고 비행기 등으로 북한지역에 잠입해 정보수집활동을 비밀리 전개하기도 하였다.[108] 미군은 사실 2 차세계대전 때부터 유럽에서 이처럼 포로에 대한 '재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심리전에, 혹은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했다.[109]

일부 반공포로들을 통해 반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이외에도 유엔군측은 일상적으로 포로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전을 진행했다. 전쟁터에서 뿌려진 삐라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실 유엔군이 공산군포로들 상대로

---

[108] 중국군포로들 중 반공포로조직의 핵심인물인 王順清 王福田 劉炳璋 등은 모두 도쿄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었다. 또 한 명의 핵심인물인 李大安은 정보요원으로 동원돼 북한지역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혔다. 常成(2016),「'新中國'的叛逃者-韓戰反共戰俘的生死逃亡路, 1950-1954」, 漢學研究第 34 卷第 2 期, 245-280 쪽; 당시 유엔군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선갑도를 기지로 이용해 포로명부에서 이들 강제동원된 포로정보요원들을 '실종' 등 이유로 제명한 다음에 거기서 정보수집 방법 등을 훈련시키고 북한지역으로 투입하였다. 侯廣明 인터뷰,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285-293 쪽; Voice of America(2015),『解密時刻 : 志願軍戰俘』5 부작 다큐멘터리 등 참조.

[109]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366 쪽.

실시한 교육을 통해서도 선전하고자 한 내용들이었다. 특히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른바 반공교육은 수용소내부에서 중요한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포로들에 대한 교육은 각 수용소에서 유엔군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CIE 에 의해 설치된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CIE 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미 2 차세계대전 이후 미군점령하의 일본에서 교육개혁 등을 주관해 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수용소에서 포로에 대한 교육과 심리전도 시급해지자 한국에 그 기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1951 년 8 월에 거제도 72 수용소에서 1,500 명을 동시에 용납할 수 있는 텐트로 만든 단체활동공간이 설치되었다. 중국군포로수용소 내의 첫 CIE 학교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중국인포로들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교원들이 필요했다. 나중에 유엔군사령부 및 대만정부 등에 의해 일본과 대만에서 일부 교원들이 모집되어 한국으로 파견되었지만 처음에는 적합한 인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일단 중국군포로들 중 첫째, 단호하게 반공경향을 가진 자; 둘째, 전직 국민당부대 장교출신인 자; 셋째, 상당한 학식이 있고 강연할 재주를 가진 자 등 3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CIE 학교의 교원으로 선발되었다.[110] CIE 학교의 교육내용은 미군의 삐라처럼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이른바 반공교육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수용소내부의 복잡한 이념대립의 분위기 속에서 친공산진영의 포로들의 불만과 반발을 야기했다. 공산진영의 눈에 CIE 학교의 설립 및 반공교육의 실시는 중국군포로들에게 강제로 세뇌하여 사상전향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CIE 학교의 교육은 이로서 수용소내부 양쪽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군포로에 대한 심리전 과정에서 대만정부의 개입과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만에 있는 중국국민당정부가 한반도로 파병하여 한국정부를 지원한다는 참전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정부 등의 반대로

---

[110]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98 쪽.

불발되었다. 당시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물러난 국민당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을 중국대륙을 다시 공격하여 수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한반도는 물론, 압록강을 넘어 대륙까지 진출할 생각이었다. 직접적인 참전이 어려워지자 대만정부는 유엔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군에 대한 심리전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본토송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의 존재는 내전에서 공산당에 의해 격퇴 당한 대만정부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대만정부는 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중대한 영향력의 표시와 대륙에 있는 중국사람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저항을 나타냈다고 인식하였으며 유엔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111]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국민당정부 총통 蔣介石이 육성으로 전선에 있는 중국군병사들에게 즉시 투항하라고 권유했다. 당시 주한국대사관의 요청하에 재한화교들이나 대만에서 중국어통역요원 및 강사들도 수용소 안의 CIE 학교 등 포로관리 업무에 동원되었다. 대만정부는 이 사람들을 통해 수시로 수용소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반공조직과도 연락을 취했다.[112] 이들 대만측 인사들은 수용소내부에서의 반공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적극적으로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분주하였다. 대만측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 반공포로들은 수용소내부에 있는 공산당원, 공산주의청년단원 등을 조사하였고, 관련정보를 대만측 정보원에게 전달하였다.[113] 또한 반공포로들은 대만측 인사들을 통해 대만사회의 움직임과 휴전회담의 진전 등 외부소식을 받았고, 신문이나 잡지 등도 수용소내부로 반입되었다.

---

[111] 周琇環編(2001),『戰後外交部工作報告(民國三十九年至四十二年)』522 쪽, 565 쪽.
[112]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62 쪽;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404 쪽. 王東原(1988),「反共義士爭奪戰紀實: 為紀念一二三自由日第三十六週年而寫」,『傳記文學』第二十五卷第一期.
[113] 于勁(2020),『厄運』129-130 쪽, 152-153 쪽.

중국군포로들이 최종적으로 송환될 때까지 이들 대만측 인사들의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대륙에 있는 공산당정부도 대만측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인지하였다. 공산진영은 이들 대만정부에 의해 파견 온 인원이 다 국민당소속의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비밀요원들이라고 비판하였고, 이 사람들이 수용소내부에서 반공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군포로들을 대만으로 강제송환을 유도하도록 활동했다고 맹비난했다. 많은 중국군포로의 증언에서도 대만정부의 이러한 개입에 대해 언급되었고 당시 미 주한대사 무초 John Joseph Muccio 역시 이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틀림없이 蔣介石의 비밀경찰이라고 했다.[114] 당시 대만정부 주한대사 邵毓麟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상세히 이 시기 대만정부의 정보활동을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에 대해 첫째, 중국군포로들 사이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 둘째, 포로들의 내부조직화 및 수용소의 폭력문제; 셋째, 포로에 대한 심리전 등 3 가지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군포로들의 다양성이다.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병사들이 다 공산당부대라는 하나의 명의로 파병되었지만, 당시 중국공산당정권은 수립된 지 1 년도 안 된 신생정권으로 병사들의 출신도 다양했다. 따라서 수용소 내의 중국군포로들의 정치적 경향도 서로 달랐다. 전직 국민당부대출신 병사도 있었고, 젊은 대학생도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동원된 일반사람도 많았다. 따라서 수용소의 내부상황을 이해할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향이 뚜렷한 친공과 반공 포로들 이외에 다수 중간적 입장을 가진 포로들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수용소내부의 폭력문제의 심각성이다. 당시 전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 요동치는 시기에 있었다.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한국전쟁의 발발 등은 예외없이 이 세계적 흐름을 타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

[114] MacDonald, Callum A.,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p.138.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153 쪽 재인용.

충돌요소는 포로들을 따라 수용소로 고스란히 전파되었고, 수용소라는 지극히 폐쇄적인 환경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폭력이 동반된 가운데 유혈사태로 분출되었다. 끊임없이 나타났던 수용소의 폭력문제는 수용소내부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포로들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집단의 의지에 동원되고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했다. 수용소는 지옥같은 곳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이 살아만 있는 송장이었다. 수용소폭력문제의 심각성은 포로송환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포로들의 인생에도 큰 상처를 남겼으며 그들의 운명을 잔인하게 좌우했다.

이 과정에서 포로관리당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용소내부의 폭력에 대해 관리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포로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을 지나치게 동원하여 포로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반공포로들은 초기에 권력투쟁에서 수용소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시기부터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이들이 거침없이 폭력을 휘두르며 다른 포로들을 잔인한 수단으로 위협할 수 있을 때까지 포로관리당국의 지지 혹은 묵인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포로들 간의 이념충돌 및 권력투쟁으로 유혈사태가 빈번히 일어났는데도 관리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오히려 포로들의 저항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수용소폭력의 가장 큰 가해자는 관리당국이었다.

셋째, 포로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불가이다. 폐쇄적인 환경하에 수용소에서 일부 핵심반공포로 및 그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들 반공포로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중국본토로 송환을 원한 포로들에게 무차별폭행을 하여 위협하였다. 강제로 반공문구를 몸에다가 문신하거나 대만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반공포로들은 잔인한 수법으로 나머지 포로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위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반포로들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중국본토로

돌아가고 싶어도 반공포로들이 장악한 72 와 86 수용소에서는 결코 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의 진실된 의사표현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엔군측에서 추구한 이른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원송환' 정책도 그만큼 유명무실이 되었다.

이상 몇 가지 시사점은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군포로들 중 다수가 대륙이 아닌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초조하게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동시에 판문점에서 교전양측은 치열하게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설전중이었다.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이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휴전회담장에서 어떤 논쟁을 야기했는지는 이어서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휴전협상의 진행과정과 수용소상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제 4 장 휴전협상에서 포로송환을 둘러싼 논쟁

1951 년 7 월 10 일에 한국전쟁 휴전회담은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1 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서부터 또 2 년이 지난 1953 년 7 월 27 일에 교전양측은 드디어 휴전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고 역사적인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조인되었다. 휴전을 위하여 양측은 첫 협상 이후 2 년이나 달하는 긴 시간에 거쳐 합의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총 3 년 동안 치른 한국전쟁의 마지막 2 년에 교전양측은 협상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양측은 더 이상 북쪽이나 남쪽으로 진출해 더욱 많은 지역을 점령하는 작전전략을 보류하였고, 전선도 38 선 근처로 고정되었으며 전쟁의 방식도 운동전運動戰에서 진지전陣地戰으로 바뀌었다.[115]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깊게 진출하는 것보다 38 선 부근에서 대치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다는 이른바 고지전高地戰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에 양측의 충돌은 누가 휴전회담장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일종의 소모전消耗戰이었다. 병사들을 희생하면서 '북진' 혹은 '남진'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략이었고 양측은 전쟁 이전과 비슷한 대치국면으로 돌아왔다. 38 선 근처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합의를 모색한 것이었다.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었지만, 협상을 자기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전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2 년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등 그 다른 어떤 의제보다 포로송환문제에 대한 합의는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양측은 이 논제를 놓고

---

[115] 1952 년 8 월 20 일에 周恩來 중국총리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와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冊)』1200 쪽.

가장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으며 어느 한 쪽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1951 년 12 월에 포로처리문제를 다룬 정식협상의 시작부터 1953 년 6 월 이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까지 양측은 포로송환문제를 놓고 1 년 반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전체 한국전쟁 기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이었다. 논쟁을 벌이는 동시에 전쟁도 이로 인해 2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더 지속되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포로송환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합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일까? 문제는 양측이 포로명부를 서로 교환할 때부터 시작되었다.[116]

4.1 송환원칙의 충돌-'전원송환'과 '자원송환'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정식협상은 1951 년 12 월 11 일에 시작되었다. 앞서 1951 년 11 월에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 오가는 전문에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 양측은 모두 '합의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으며 포로들 전수송환을 하는 방안에 '적들도 반박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毛澤東은 11 월 14 일에 모스크바로 보낸 전문에서 휴전의 연내달성 1951 년을 목표로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117] 12 월에 시작된 공식협상에서 공산군측은 포로명부 등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 전에 우선 포로송환의 기본원칙을 정하자고 회담장에서 제의를 하였다. 그 원칙은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해당내용에 따라 '전원송환', 즉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포로들을 즉시 석방하여 송환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당시 공산군측은 자신이 억류한 포로의 규모가 유엔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포로송환의 원칙을 먼저 정하자고 제의한 것도

---

[116]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37 쪽; 박태균(2005),『한국전쟁』257 쪽.
[11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38-239 쪽;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冊)』1103, 1108 쪽.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어 유엔군이 공산군포로들을 억류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118] 반대로 유엔군측은 포로명부 등 자료를 먼저 교환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공산군측의 포로송환 원칙을 정하자는 제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공산군측이 한발 물러섰고 양측은 12 월 18 일에 포로명부를 처음으로 교환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났다. 유엔군측은 132,474 명의 포로명단을 공산군측에게 넘겼는데 그 중에 중국군포로가 20,720 명, 북한군포로가 111,754 명이었다. 공산군측은 남한군포로 7,142 명, 미군포로 3,193 명 그리고 기타외국군포로 1,216 명 등을 포함한 총 11,559 명의 명단을 전달했다.[119] 숫자상으로 봐서 공산군측이 예상했듯이 유엔군측은 훨씬 많은 포로들을(13.2 만 명: 1.1 만 명) 포획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포로들을 더 많이 포획하였으니까 따라서 포로처리에 관련된 협상에서도 유엔군측은 처음부터 유리한 협상조건을 갖췄다. 명단을 서로 교부한 다음 양측 모두 상대방이 억류한 포로의 숫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공산군측이 제공한 포로명부 중에 남한군포로의 수는 7,142 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측은 협상자리에서 남한군실종자의 수가 88,000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거대한 숫자의 차이를 공산군측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에서 전선석방, 북한군편입과 도망,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 등 이유를 제시하였고 전선에서의 실종자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 특히 '북한군편입'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국군과 북한군의 합의에 따라 전선에서 생포하거나 항복한 남한군병사들은 전부 다 북한군측에 수용되어 있었고 전시의 상황에서 북한군은 이들을 포로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

[118]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37-438 쪽.
[119]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40-442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54 쪽; Rees, D(1964), *Korea: The Limited War* 316 쪽. 자료에 따라 숫자상의 차이가 조금 있음.

것보다 북한군으로 편입시켜 다시 전쟁에 투입한 경우가 많았다. 관리비용도 절감되고 군사적인 측면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많은 남한군포로들이 북한군에 의해 포획된 후 포로로 관리되지 않고 북한군으로 재편입되었다. 당시 중국군정치부주임인 杜平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국전쟁이 초기에 내전의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포로교환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중국내전 중의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군포로의 북한군재편입을 설명하였다.[120] 남북의 분단으로 많은 남한군포로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북한에 남아 있게 되었다. 포로라는 신분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포로송환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에서 계속 억류되었던 이들 남한군포로들의 존재는 1994 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사건을 통해 '국군포로'문제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53 년 7 월 말에 부임한 북한주재 소련대사 Sergey Suzdalev 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군포로 13,049 명과 전쟁초기 남한지역에서 동원되어 북한군에 가입한 일반인 42,262 명을 억류했다.[121]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도 북한이 전쟁초기에 50,000 명의 남한군 포로들을 '전선'에서 석방하여 북한군으로 편입시켰다고 지적하였다.[122]

한편, 공산군측 역시 유엔군측이 제시한 포로의 숫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공산군측은 12 월 18 일에 교부한 포로명부를 확인한 결과, 앞서 국제적십자를 통해 받은 자료보다 44,205 명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이 중에서 37,000 여 명은 다 남한지역출신 민간인이라고 설명하였다.[123] 당시 유엔군에 의해 북한군포로들 중 남한출신 민간인억류자들을

---

[120]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44 쪽.

[121]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387-388 쪽 참조; 허만호(2017)의 연구에서 다양한 주장을 인용해 북한체류 국군포로의 규모는 7 만 명, 그리고 5-6 만 명 등으로 추산된다고 기술하였다. 허만호(2017),『6·25 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협상론과 제도론의 관점에서』121 쪽.

[122] Mark W. Clark(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102 쪽.

[123] 柴成文主编(2000),『板門店談判紀實』172 쪽;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41, 446 쪽.

재분류하는 작업은 실시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에게 포로명부를 교부할 때 이 부분을 제외시켰던 것으로 보인다.[124]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전쟁만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세계가 지지한 북과 남의 내전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공산진영 및 자유진영이 대결한 국제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모두 분열상태였고, 중국대륙과 대만은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상황이었다. 중국군병사들의 구성상의 다양성으로 인한 내부적인 대립과 충돌문제, 전시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징병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억류자'문제, 그리고 남한군포로들의 북한군편입에 따라 일어난 남한출신 '국군포로'문제 등 이 모든 것은 한국전쟁 포로송환정책을 합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포로명부를 서로 교환한 뒤에 포로송환정책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포로송환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큰 틀에서 양측은 '전원송환'과 '자원송환'의 원칙을 각자 주장하고 논쟁하였다. 핵심은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존재 및 이들에 대한 처리방법이었다. 즉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포로들을 그대로 송환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의사를 고려하여 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느냐는 문제였다. 공산군측은 제네바협약을 기반으로 포로들의 '전원송환'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산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병사들이 적군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그 병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반대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의 의견을 강력하게 반대해 '자원송환 Voluntary Repatriation'원칙을 주장하였다. 즉 포로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송환지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본국으로 송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유엔군측의 이러한 입장은

[124]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380-381 쪽 참조.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포로송환정책을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실시한 결과였다. 유엔군측에서 '전원송환'을 동의할 수 없는, 또한 '자원송환'을 고수하게 된 이유를 크게 군사적·전략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등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유엔군 쪽에 억류된 포로들과 공산군 쪽에 억류된 포로들을 서로 전원송환 한다면 13 만 여 명의 포로들이 공산군 쪽으로 송환되지만 유엔군측은 1.5 만 여 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10 만 명이 넘는 인원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공산군 쪽의 병력도 보충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유엔군측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선 전략적으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이 제기한 전원송환 원칙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1951 년 10 월에 당시 트루먼 미 대통령은 이미 공산군측의 주요한 양보가 없으면 전원송환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공산군측 역시 유엔군측이 취한 전원송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산군포로들을 억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125]

유엔군측이 전원송환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도주의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중국군포로의 경우는 처음부터 강력히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반공입장을 천명한 포로들과 적극적으로 관리당국에 협조하는 포로들도 많은데, 이들은 공산당치하[治下]의 중국본토로 송환되면 틀림없이 공산당에 의해 처벌받거나 심지어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엔군측이 인식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포로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간판을 내세워 전원송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절대 이들이 중국본토로 보내져 처벌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공산주의와의 이념적 싸움에서도 세계적 여론의 지지를 얻고 대공산진영의 심리전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이기겠다는

[125]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199 쪽 재인용;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38 쪽.

취지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6] 공산주의와 자유세계가 대립하는 구조에서 보면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문제는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을 띠게 된 것이었다.

한편 포로처리문제에서 남한출신 '민간인억류자'문제도 있었다. 남한출신의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포로가 된 경우였다. 만약 이들 민간인출신 억류자들 상대로 중국군과 북한군포로들과 구분없이 전원송환을 실시하면, 이들에게 두 번 다시 불행을 안기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유엔군측은 인식하였다. 한국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엔군측에게 전원송환을 동의하지 말라는 것과 이들에 대한 조기석방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군포로들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유엔군측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다. 바로 대만의 존재였다. 한국전쟁시기 중국도 내전 중인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두고 공산당정부와 국민당정부가 각각 중국대륙 및 대만을 통치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군포로들 중에 처음부터 대륙송환 대신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만정부 역시 이들을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밝혔었다. 따라서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게 대만은 최적의 송환지가 아닐 수 없었다. 가령 한국전쟁 당시 중국통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혹은 대만이라는 중국대륙 이외의 정치적·군사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없었다면, 당시의 상황에서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이들 중국군포로를 달리 처리하는 방법도 쉽게 못 찾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중국군포로들은 계속 남한에서 억류되었다면 남한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식량이 모자라 남한 사람들도 굶는 판에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127]

---

[126] 실제로 자원송환원칙은 휴전협상이 애초 시작되는 단계부터 미군내에서 대공산주의진영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377-378 쪽;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198 쪽 참조.
[127] 박태균(2005),『한국전쟁』261 쪽.

4.2 송환정책의 조정 및 휴전회담의 지체

공산군측은 협상회담 처음부터 전원송환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비해 유엔군측의 자원송환원칙은 처음부터 자리가 잡힌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의 여러가지 특수성을 고려하고 포로들의 송환거부문제, 민간인억류자문제 등을 감안해서 점차 확정된 것이었다. 1952 년 1 월 2 일의 회담에서 유엔군측이 자신의 포로송환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1 대 1'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1 대 1 로 교환한 다음에 한 쪽에서 더 송환할 포로들이 있다면 다른 한 쪽에서 억류된 민간인들 등과 다시 1 대 1 로 교환하며 송환거부포로들을 강제로 송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본국으로의 송환거부를 허용하는 '자원송환'이라는 원칙이었다. 유엔군측이 1 대 1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양측이 공개한 포로의 수의 거대한 차이를 감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엔군측은 이 원칙을 통해 공산군측이 제공한 명단보다 더 많은 유엔군포로들 혹은 민간인들의 송환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산군측에서는 이 원칙에 대해 공산군포로들을 억류하려는 조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128] 양측은 50 여 차례의 분과회의와 20 여 차례의 참모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포로교환원칙에 대한 의견차이는 좀처럼 좁혀 나가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정부 내에서도 자원송환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52 년 2 월 27 일에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미 정부에게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악관에서 대통령 및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공군참모총장, 해군작전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결과 트루먼

[128]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201 쪽 논의 참조;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47-449 쪽; 柴成文 趙勇田(1989), 『板門店談判』214-215 쪽.

대통령은 포로송환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최종입장은 '강제적 송환 Forcible Repatriation'을 동의 못한다는 것이라고 결정지었다. 즉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같은 회의에서 반덴버그 Hoyt Sanford Vandenberg 미 공군참모총장은 강제송환을 반대한다는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송환을 격렬하게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로들을 조속히 수용소에서 분리시키고 포로의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작업을 통해 공산군측에게 새로 수정된 포로명부를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원송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129] 한 마디로, 송환을 거부할 포로들을 조속히 파악해서 전체 포로명부에서 이들을 제외시킨 다음에 수정된 명부를 가지고 공산군측과 전원송환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었다. 포로들의 송환의향에 따라 그들을 분리하는 작업은 미국정부의 핵심지도자 사이에 거론되었던 것이다.

회의결과는 곧 리지웨이에게 전달되었다.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최종입장과 이를 실천하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송환을 거부할 포로들을 분리시킨다는 작업지시였다. 또한 미 합동참모본부는 리지웨이에게 해당작업이 수용소내부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치밀한 계산에 의해 실시되어야 된다고 지시했다.[130] 제 5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이러한 미국정부의 포로송환정책의 조정 및 관련된 행동방안, 그리고 나중에 유엔군포로관리당국에 의해 진행된 이 분리작업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걱정했던 것처럼 수용소내부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포로들 사이의 반공조직의 통치로 인해 포로들이 '자원송환'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특히 중국군포로의 경우는 분리작업 이후 이미 70%의 '송환거부' 대 30%의

---

[129]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Johnson).*

[130]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47,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Ridgway).*

‘본토송환’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최종적인 중국군포로의 송환결과와도 거의 일치했다. 반공조직의 통치하에 분리작업 때 많은 포로들이 폭행을 당하였고 심지어 목숨도 잃었다. 분리작업의 결과를 둘러싸여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도 공산군측이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였고, 이 작업 또한 포로수용소장 돗드준장을 억류한 사건 및 후속 포로관리당국이 포로들 상대로 실시한 진압 등 유혈충돌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휴전회담의 중단과 전쟁의 지연도 초래했다.

1952년 3월 5일의 회의에서 공산군측은 양측이 전년도 12월 18일에 교환한 포로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쟁이 끝난 후 모든 포로들을 석방하여 송환하는 원칙을 수립하자고 제의하였다. 유엔군측에서 관리되는 4 만 여 명의 민간인억류자의 문제를 정전 이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이어서 3 월 27 일에는 공산군측이 포로송환원칙을 다시 조정하여 절충안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수용되는 포로들 중 출신지가 수용된 쪽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즉 북한에서 억류 중인 북한출신 남한군포로와 남한에서 억류 중인 남한출신 북한군포로의 경우는 해당포로들의 의사에 따라 송환을 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규정하는 정책이었다. 공산군측은 이러한 정책조정들이 자신이 유엔군측에게 크게 양보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131]

4 월 1 일의 회의에서 유엔군측은 1 대 1 원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송환거부자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하며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 주는 자원송환원칙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날의 회의에서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으로 송환할 포로의 수가 11.6 만 명이 추산된다고 하였다. 이 숫자는 전체 유엔군 쪽에 억류 중인 사람의 수 [17 만]에서 민간인억류자 [3.8 만] 및 남한출신 북한군포로들 [1.6 만]을 각각 제외한 정도였고 포로들을 단지 남북한 출신으로 나누었던 수준이었다.[132]

---

[131] 柴成文 趙勇田(1989),『板門店談判』218 쪽;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50-451 쪽.
[132]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212 쪽.

당시 유엔군 참모장 히키 Doyle Overton Hickey 는 13.2 만 명의 공산군포로 중에 약 28,000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추산하였고, 하지만 약 16,000 명 정도만 송환을 거부하겠다고 추론했다.[133] 11.6 만의 송환규모는 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 공산군포로들의 최종 송환결과를 감안해서 보면 당시 유엔군측에서 미송환포로들의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수용소를 장악한 반공조직이 일반 포로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존재는 공산군과 유엔군측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의 주요 약점 중의 하나라고도 평가되었다.[134]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규모는 이제 유엔군 뿐만 아니라, 공산군에게도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앞서 2 월 27 일에 미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리지웨이에게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송환거부포로들을 분리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제 이 명령을 집행할 때가 되었다.

4 월 4 일에 리지웨이가 도쿄에서 출발하여 문산에 도착했고 같은 날 미 합동참모본부로 보낸 전문에서 리지웨이는 모든 포로에 대한 심사와 송환거부포로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해야 된다고 제의하였고, 그 시일은 앞으로 5 일 안이라고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135] 이에 대한 워싱턴의 승인을 받고 리지웨이는 곧바로 포로심사 및 분리작업을 추진하였고, 중국군포로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4월 8일부터 진행되었다. 제5장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유엔군의 이 작업은 많은 폭력과 혼란을 야기하였고, 중국군포로의 송환을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송환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작업의 진행

---

[133] Walter G. Hermes(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168-169 쪽.
[134] Walter G. Hermes(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168-169 쪽.
[135]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80,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Ridgway)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및 이에 따른 후폭풍은 곧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양측의 의견대립을 심화시켰고, 휴전협상의 지연도 초래했다.

4 월 19 일의 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수용 중인 포로에 대한 심사결과 북한군포로 42,100 명과 중국군포로 15,599 명이 본국송환을 거부하였고, 공산군측으로 송환할 포로의 수는 약 7 만 명이라고 밝혔다.[136] 이는 공산군측에게 교부한 포로명부의 절반수준이었다. 공산군측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절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유엔군측은 이어서 4 월 28 일에 자원송환을 포함한 이른바 '포괄적인 Package'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공산군측은 여전히 강력한 비판을 표시했다. 포로송환원칙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5 월 7 일에는 거제도 76 수용소에서 북한군포로 중 공산주의자들이 당시 포로관리당국의 책임자인 돗드준장을 수용소에서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억류된 돗드와의 교섭에서 중국군포로대표들도 같이 참여하였고, 포로들은 수용소당국이 자원송환을 내걸고 진행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포로에 대한 강요, 폭행 및 살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교섭 끝에 포로관리당국은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돗드도 사건발생 3 일 후에 석방되었다. 사건의 발생 및 포로들의 호소가 공개되자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은 세계적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포로관리당국도 더 이상 심사와 분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돗드사건은 거제도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영향은 고스란히 판문점까지 전달되었고 공산군측은 5 월 9 일부터 휴전회담에서 강력하게 유엔군측의 폭격 및 포로들에 대한 폭력을 비판하고 나섰다.[137] 휴전회담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진전없이 계속 상대에 대한 비판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측 모두 포로송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고 휴전을 조속히 달성시키려는 의도가

---

[13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57 쪽; 김학재(2015),『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412-413 쪽.
[137]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66 쪽.

없다고 상대방을 비판하였다. 공산군측에서는 유엔군측이 자원송환을 고집한 것을 포로들을 계속 억류하고 전쟁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수법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유엔군측에서는 공산군측이 휴전회담을 그저 선전용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5 월 12 일에 유엔군측 협상대표인 조이 Charles Turner Joy 는 신임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Mark Wayne Clark 에게 보낸 전문에서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고 휴전회담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더 이상 소용없다고 말했다. 조이는 이어서 유엔군대표단이 휴전회담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 공산군측에게 약점만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회담중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138] 클라크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유럽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고, 조이의 제의를 완전 지지했다고 기술했다.[139] 미 합동참모본부는 조이의 회담중단요청이 시기상조라고 회신하였지만 클라크는 5 월 31 일에 다시 보고를 올려 포로에 대한 심사작업 끝난 후, 만약 공산군측이 여전히 수정된 포로명부를 토대로 한 유엔군의 송환방안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때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할 것을 선포하는 계획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지 역시 얻지 못했지만, 대신 합동참모본부는 휴전회담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클라크에게 허용하였다. 클라크는 즉시 조이의 후계자 해리슨 William Kelly Harrison Jr. 신임 유엔군측 교섭대표에게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전달했고 해리슨은 곧바로 회담장에서 이를 실천하였다.[140]

한편, 7 월 초의 회의에서도 공산군측은 자신의 입장을 계속 강조하였고, 특히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의 경우는 전수송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7 월 13 일의 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수용 중인 전체 포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

[138]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117, *The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Joy)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Clark).*
[139] Mark W. Clark(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104-105 쪽.
[140] Mark W. Clark(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106-107 쪽.

공산군측에게 송환할 포로의 수를 4 월 19 일의 7 만 명 [1 차심사결과/1952.4] 에서 8.3 만 명 [2 차심사결과/1952.7] 으로 다시 수정하였다. 이 중에서 북한군포로는 7.66 만 명으로 전체 북한군포로의 규모를 볼 때 약 80%를 차지한 비율이었지만, 중국군포로는 6,400 명으로 전체 중국군포로의 불과 32%만 차지하는 숫자였다.[141]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6,400 명만 중국본토로의 송환을 희망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毛澤東은 평양과 모스크바로 보낸 전문에서 유엔군측의 이러한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적군의 군사적인 위협하에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으면 앞으로 더욱 불리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논리였다.[142] 특히 중국군측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중국군포로들 중 소수만 송환을 원한다는 유엔군의 주장이었다. 周恩來 중국총리는 포로들이 전부 다 자유를 박탈당한, 적군의 무력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의 의지를 결코 표현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설사 송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협박에 의한 결과일 것이고 그들의 송환거절표명은 다 위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143]

회담장에서 진전이 없자 유엔군측은 공산군측에게 압도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강력한 군사력의 압박을 통해 공산군측이 자신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1952 년 5 월 12 일에 클라크가 리지웨이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직을 정식 부임한 다음에 공산군측에게 공습이 위주로 된 군사적전계획을 세웠다. 클라크는 강력한 군사행동을 통해서만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입장에서 '명예로운 휴전 Honorable Armistice'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

14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75 쪽; 杜平(1988),『在志願軍總部』473 쪽.

142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186-1189 쪽;『周恩來軍事文選』第四卷, 280-290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76 쪽 재인용.

143『周恩來軍事文選』第四卷, 301-302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78 쪽 재인용.

인식하였다.[144] 즉 강력한 군사력의 위협으로 공산군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휴전조건도 받아들이게 하며 이로써 그 명예로움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유엔군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실시하는 공습이었다. 따라서 1952 년 5 월부터 10 월까지 유엔군측은 북한지역에 대한 무차별공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7 월 11 일 및 8 월 4 일 그리고 8 월 29 일에 유엔군은 수천 번의 폭격기를 출격하여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해 3 차례 대규모공습을 실시하였다. 7 월 11 일의 폭격에서만 유엔군은 1,400 톤에 달하는 폭탄과 23,000 갤런에 달하는 네이팜탄을 투하하였고 2,400 채의 건물이 폐허가 되거나 파손되었다.[145] 김일성은 7 월 16 일에 스탈린에게 보낸 문서에서 7 월 11 일-12 일 이틀동안만의 공습으로 6,000 명이 넘는 평양시민이 사상했다고 말했다.[146]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은 조속히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소련과 중국은 앞서 말한 듯이 유엔군의 군사력 앞에서 이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 월 20 일에 중국총리 周恩來는 스탈린과의 만남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북한측의 입장표명을 언급하였고, 북한이 전쟁에서 지금 하루만의 손실이 휴전회담의 쟁점인 미송환포로의 수보다 더 많다고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毛澤東의 이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고, 북한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희생만 했을 뿐이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147]

5 월부터 10 월까지의 공습은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측의 항의를 야기하였지만 합의를 조기달성하는 데에 있어 그들의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하였다. 어느 측면으로 봐도 대치는 여전하고 끝은 보이지 않았다.[148]

---

[144] Mark W. Clark(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70-71 쪽.
[145] Walter G. Hermes(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324 쪽.
[146]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184 쪽.
[147]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201 쪽.
[148] Walter G. Hermes(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329 쪽.

포로송환원칙에 대한 의견차이로 7 월 하순부터 9 월말까지 양측은 8 차례의 대표단회의만 진행하였고 휴전회담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149] 공산군측은 이를 유엔군측이 계속해서 아무 이유없이 휴전회담의 일시중지를 선포함으로써 회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엔군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산군측의 선전연설을 더 이상 들어도 휴전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무런 진전없이 계속 이대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이와 클라크가 제의했던 회담의 중단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꺼내야 할 카드가 되었다. 9 월 24 일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미국정부가 '강제송환 없다'는 포로처리원칙을 재확인하였고, 국무장관 애치슨 Dean Acheson 은 휴전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만약 공산군측이 이를 거부하면, 어떤 새로운 유의미한 제안을 받을 때까지 미국은 휴전회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는 클라크에게 공산군측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그리고 동시에 건설적인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유엔군측이 협상자리에서 '무기한 휴회'를 선포한다는 회의결과를 전달하였다.[150] 따라서 9 월 28 일의 회담에서 해리슨은 최후통첩식으로 송환거부포로들을 비무장지역으로 이송해서 자유롭게 송환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수정된 '자원송환'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군측은 10 월 8 일의 회담에서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고, 유엔군측은 즉각 휴전회담을 무기한 휴회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1 년 넘게 합의해 온 휴전회담은 포로송환의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결렬되었고, 6 개 월 뒤인 1953 년 4 월에 이르러서야 양측은 다시 판문점 회담장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

[14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279 쪽.

[150]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276,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to the President*; Document 278,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Clark)*.

4.3 상병포로의 '소교환'과 송환문제의 최종합의

휴전회담은 무기한휴회로 진입하였지만 포로송환문제에 관련해서 양측은 다른 장에서 힘을 겨루기 시작하였다. 1952 년 10 월 14 일에 뉴욕에서 열린 제 7 차 유엔총회는 한국전쟁의 휴전에 관련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10 월 24 일에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3 시간 동안 연설을 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한 21 개국의 공동제안으로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방안을 내놓았다. '비강제송환'의 포로처리원칙은 유엔의 무대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제안국들은 중국공산당정부와 북한정부에게 이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10 월 29 일의 회의에서 소련대표단장인 비신스키 Andrey Vyshinsky 외무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였고, 자원송원을 주장하는 것이 1949 년에 개정된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위반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구타나 살해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포로들의 송환요구를 막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151] 이어서 비신스키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소련정부의 제안을 제기하였고 미국안과 대치하였다.

이 사이에 인도대표단은 11 월 17 일에 포로처리에 관련된 인도안을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다. 인도안은 교전양측의 합의하에 중립국들이 송환위원회를 조직하여 양측에서 수용중인 미송환포로들을 비무장지역으로 이동시켜 송환위원회의 관리로 넘긴 다음에 포로들의 송환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포로들의 송환여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소련대표는 인도안이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비판하였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표시를 하였다. 결국은 12 월 2 일의 회의에서 소련의 제안은 부결되었고, 인도안은 12 월 3 일의 전체회의에서 54 표 찬성 대 5 표 반대, 1 표

[151]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290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360-361 쪽.

기권으로 통과되었다.[152] 이처럼 포로처리문제가 유엔에서도 뜨겁게 논쟁되었지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소련의 주장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도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1952 년 11 월 4 일에 진행된 미국대선 투표에서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국전쟁이 이미 2 년 넘게 진행되었던 시점에서, 또한 휴전협상도 1 년 넘게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업무는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철수하는 것이었다. 미국내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한국전쟁이 조속히 종결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미국에게 압력을 주었다. 아이젠하워는 대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미국시민들의 종전을 호소하는 목소리에서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군인출신인 아이젠하워는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절대 적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부임하자마자 밝혔다.

1953 년 1 월 20 일의 취임식에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했다고 언급하였고, 절대 명예를 희생하여 안전과 맞교환함으로써 침략자에게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그는 유엔이 평화로운 상징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무력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필요하다면 그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확고한 전투의지를 표명하였다.[153] 아이젠하워의 취임연설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의 참전을 합리화하여 미국의 반전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대로 전쟁을 불명예스럽게 끝내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2 월 2 일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대만해협중립' 정책도 선언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 해군 7 함대가

---

[152]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291-1293 쪽.

[153] *Inaugural Address*, Dwight D. Eisenhower, January 20, 1953.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inaugural-address-3

대만해협으로 파견돼 중국국민당과 공산당정부 사이의 잠재적인 무력충돌을 선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지역적 평화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정책을 내 놓은 이유는 아이젠하워가 앞서 유엔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인도안을 거절한다는 중국의 입장표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던 데에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우는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표명하였다.[154] 아이젠하워의 이러한 정책은 공산군에 대한 압력으로 한국전쟁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대만에 있는 중국국민당정부는 미 7 함대가 철수한다는 기회를 누려 중국대륙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해협까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위기를 보이자 영국정부 등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毛澤東과 周恩來 등 중국지도층도 이를 강력히 비판하였고, 毛澤東은 미 제국주의가 전쟁을 그만 할 때까지, 중국과 북한인민이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발표하였다.[155]

한편, 아이젠하워가 취임한 시점에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큰 진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951 년 연말부터 유엔군은 공중습격 이외에 지상으로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 휴전회담이 이미 시작한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더 이상 유엔군의 목표가 아니었다. 공산군측의 저항 앞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고, 전쟁규모도 확대시켜야 승리의 가능성을 보이는데 확실한 한국전쟁의 목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에서는 '제한된 전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전쟁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불필요하게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였다.[156] 반면 공산군측의 경우 대치하는 상황에서 방위공사를 적극적으로

---

[154]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Dwight D. Eisenhower, February 2nd, 1953.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Museum, and Boyhood: https://www.eisenhowerlibrary.gov/eisenhowers/speeches

[155]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中卷』121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 『抗美援朝戰爭史·下卷』413 쪽 재인용.

[156] Walter G. Hermes(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331, 349 쪽.

구축하였고 각종 군수품에 대한 공급도 전쟁초기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었으며 작전능력도 향상되었다. 38 선 부근에서 벌어진 고지전에서도 공산군측은 활약을 보였고 인천상륙작전처럼 유엔군의 또 다른 상륙작전을 대비해 한반도 동·서해안의 방위태세도 강화했다. 毛澤東은 당시 아이젠하워의 처지에 대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휴전을 하면 또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 평가하였다.[157]

1953 년 2 월 22 일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공산군측으로 편지를 보내 양측에서 수용중인 상병포로들을 먼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결렬된 휴전회담을 재개하는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공산군측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 바로 회신을 하지 않았다. 毛澤東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클라크에게 답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사이에 1953 년 3 월 5 일에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공산진영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없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 중국군의 참전 및 북한에 대한 군사적, 기술적 그리고 인력적 지원 등 한국전쟁에 관련된 공산군측의 모든 행동을 스탈린이 직접 관여하고 지도해 왔기 때문이었다. 스탈린의 사망에 따라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새 소련시도부의 태도도 바뀌었다. 휴전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달성하는 것은 소련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53 년 3 월 19 일에 소련정부가 毛澤東과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 구체적으로 공산진영의 향후 행동방안을 제시했다. 소련정부는 편지에서 중국정부가 클라크 2 월 22 일의 상병포로교환제의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고 북한과 소련도 이어서 함께 북경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 후 유엔에서 소련대표단도 중국과 북한측의 성명을 최선을 다해 지지할 것이고 클라크에게 보낼 답장에서 휴전회담의 재개도

[157] 杜平(1988),『在志願軍總部』574 쪽.

제의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158] 3 월 28 일에 김일성과 중국군사령관 彭德懷의 명의로 쓴 편지는 2 월 20 일에 클라크편지의 답장으로 발송되었다. 편지에서 공산군측은 양측 상병포로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체포로문제의 합리적 해결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단되던 휴전협상도 즉시 판문점에서 재개해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3 월 30 일에 중국총리 겸 외교부장관 周恩來가 북경에서 한국전쟁 휴전회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성명에서 周恩來는 포로송환문제와 관련해서 제네바협약의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휴전을 이룬 다음에 양측에서 수용중인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지체없이 송환하고, 나머지 미송환포로들을 중립국의 관리로 두고 유관측의 설득을 듣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었다. 이는 조속히 휴전을 달성하는 세계인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중국과 북한 양국의 일관된 평화정책을 기반한 노력이라고 周恩來가 강조하였다.[159]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 모두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4 월 6 일에 첫 회의가 시작한 후 5 일 만에 양측은 상병포로들 상대로 하는 '소교환 Little Switch'에 대해 합의하였다. 소교환 중에 공산군측은 유엔군상병포로 총 684 명을 송환하였고, 유엔군측은 중국군상병포로 1,030 명을 포함한 공산군상병포로 총 6,670 명을 송환하였다.[160]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만 남았다. 상병포로 이외의 포로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 1952 년 10 월부터 6 개월 넘게 중단된 휴전회담도 양측상병포로의 소교환을 계기로 1953 년 4 월 26 일에 판문점에서 재개되었다.

---

[158]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295-1296 쪽.
[159]『周恩來軍事文選』第四卷, 314-317 쪽.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419-420 쪽 재인용.
[16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422 쪽;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 쪽.

5 월 7 일에 공산군측은 남은 포로에 대한 송환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조직하여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지체없이 송환하고, '송환거부'로 분류된 미송환포로들을 전부 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인계하며 포로들의 원래 출신국측이 이들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설득을 진행한 후에도 여전히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이 있다면 협상양측의 정치회담에서 이를 해결하자는 것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5 월 13 일에 유엔군측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 송환하지 않는 북한군포로들, 혹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미송환포로들을 즉시 석방하고, 중국군의 경우에는 미송환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인계하며 60 일의 설득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송환되지 않는 포로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즉시 석방한다는 내용이었다.[161]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미송환포로들에 대해 다르게 처리한다는 유엔군측의 입장이었다. 즉 중국군미송환포로들만 출신국측의 설득을 받는 제안이었다. 북한군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승만정부의 주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군측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5 월 23 일에 수석 교섭대표인 남일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공산군측은 해당 조치를 포로들을 강제적으로 억류하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고, 논쟁의 핵심은 양측의 간섭과 압박없이 미송환포로들을 중립국의 감독으로 넘길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였다.[162]

5 월 25 일의 회담에서 유엔군측은 수정된 방안을 제의하였고 5 월 13 일의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군포로에 대한 휴전시 '즉시석방' 정책을 철회하고 대신 북한군과 중국군 미송환포로들을 전부 중립국의 관리로 이관한 뒤 120 일 이후에도 송환되지 않으면 즉시 이들을 석방하거나 유엔의 해결로 넘길 것을

[16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427 쪽.
[162]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441 쪽.

주장하였다. 이 주장 이외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공산군측 5 월 7 일의 방안의 건의를 다수 수용한 것으로 공산군측에서 인식하였다. 이 시기 유엔군측의 협상전략은 휴전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자원송환만 고수하며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군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다.[163] 5 월 28 일에 소련주재 미국대사 볼런 Charles E. Bohlen 은 미국정부의 지시로 소련외교부장관 몰로토브 Vyacheslav Molotov 를 찾아가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였고, 휴전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에 있어 소련정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볼런이 설명한 유엔군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측에서 수용중인 모든 북한군과 중국군 미송환포로들을 전부 다 중립국의 관리로 이관한다. 둘째, 미송환포로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120 일의 시간을 약속하고, 그 중에서 90 일은 양측이 상대측에서 억류중인 포로들을 접촉하고 송환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는 시간이며 남은 30 일은 설득 이후에도 송환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치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다. 셋째, 120 일의 중립국 관리시간이 지나서도 송환을 이루지 못할 경우, 포로가 석방되거나 유엔총회로 이 사안을 이전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볼런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원칙이 자원송환으로 포로들의 의사에 반해 송환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유엔군측은 모든 포로들이 오직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164]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과 상의도 없이, 그리고 재차 표명하였던 북한군 반공포로의 조기석방도 묵살되었다는 불쾌감은 이승만정부와 남한사회를 더욱 분노케 했다. 남한사회 곳곳에서 휴전반대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휴전조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한국정부는 항의를

---

[16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443 쪽; 김행복 (2015),『반공포로 석방과 휴전협상』132 쪽.
[164]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1310-1313 쪽.

표시하기 위해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남한측 대표를 철수시켰다. 이승만정부의 이러한 집요함은 곧 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휴전의 조기달성은 당시 이미 교전양측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한국측 대표가 없이도 양측은 6월 4일의 회담을 시작으로, 6월 6일, 6월 7일의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6 월 8 일에 최종적으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관련협정문서도 조인되었다. 1 년 반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포로처리문제가 일단 원칙상으로 합의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모든 의제는 전부 합의되었고 이제 휴전을 선언하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휴전을 선언하는 것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통일이 없는 휴전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한국 이승만정부는 유엔군과 공산진영이 휴전을 달성한다는 것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한국만이라도 혼자의 힘으로 북진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 년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한반도의 상황은 승부없이 다시 전쟁 이전의 국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대로 휴전을 하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될 거라는 인식이었다. 이승만이 원하는 것은 휴전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북진통일'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휴전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포로문제의 이러한 처리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포로처리방안을 인정하면 휴전도 곧 선언되고 통일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될 거라고 인식하였다. 결국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포로처리에 대해 합의한 지 10 일 만인 6 월 18 일 새벽에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이른바 북한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석방하기로 하였다. 석방대상은 총 35,000 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7,000 여 명은 수용소를 지키는 한국인 경비대와 헌병대의 도움으로 6 월 18 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수용소에서 탈출하였다.[165] 이들 중에는

[165] 김행복(2015), 『반공포로 석방과 휴전협상』 121 쪽.

중국군포로 66 명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10 월 8 일에 전용기를 타고 대만으로 가게 되었으며 대만에 도착한 첫 '반공의사'들이 되었다.[166]

포로석방은 전세계여론을 경악시켰다. 한국내에서 이승만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랐지만 미국과 영국정부 등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정전협정에서 서명하려고 기차 타고 6 월 20 일에 평양에 도착한 중국군사령관 彭德懷는 당일 밤에 毛澤東에에 전문을 보내 휴전을 미루고 한국군을 겨냥해서 1.5 만 명을 더 격멸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결국은 공산군측이 7 월 13 일 밤부터 '7 월공세'를 벌여 전선을 다시 남쪽으로 추진하였으며 178km^2 정도가 되는 지역을 점령했다. 이는 휴전 전에 공산군측의 마지막 공격이었다.[167] 이와 동시에 양측은 회담장에서도 휴전을 위해 막판조율을 하고 있었다. 6 월 25 일 쯤에 한국전쟁 발발 3 주기 때 조기성사 될 수도 있었던 휴전은 결국 한 달 뒤인 7 월 27 일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한국전쟁의 휴전회담, 특히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양측의 가장 큰 논쟁은 휴전을 달성한 후 포로들을 어떤 방식으로 송환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양측에서 수용되던 포로의 수의 거대한 차이로 인해 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송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쟁 중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기가 힘든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철수하는 것이 중요했다. 적어도 심리전의 차원에서 공산진영 대비 자유진영의 우월성을 한국전쟁을 지켜보는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전쟁의 포로처리문제는 급부상했다. 왜냐하면 유엔군측에서는 처음부터 본국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포로들의 존재를 파악했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유엔군측에게도 도덕적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포로들의 요구는 명예를 필요로 하는

---

[166] 周琇環(2011),「接運韓戰反共義士來臺之研究(1950-1954)」,『國史館館刊』第 28 期 130 쪽.
[167] 柴成文 趙勇田(1989),『板門店談判』270-272 쪽.

유엔군측의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송환을 고집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포로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인도주의 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로소 고대하던 명예로운 휴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과연 포로처리문제를 통해 미국이 명예로운 휴전을 달성하였는가? 전쟁이 지연된 만큼 양측의 희생도 많이 나왔다. 전선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이 휴전은 명예로운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았다.

한편, 공산군측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한국전쟁은 고통과 슬픔의 추억이었다. 양측의 거대한 장비의 차이로 인해 공산군측은 큰 희생을 했다.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죽음으로 북한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막판에서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하는 것은 공산군측에게 있어 용인할 수 없는 적의 도발이었다. 특히 신생 중국공산당정권에게 있어 중국군포로들이 본국송환 대신 대만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것은 면목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공산군측에서는 설사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였다.

휴전회담은 이러한 의견차이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제정세의 변화 및 휴전에 대한 모두의 열망 속에 기나긴 논쟁 끝에 포로처리문제에 대해 양측은 간신히 원칙상으로 합의하였고 정전협정도 조인되었지만, 포로들을 송환하는 실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 미국이 주장한 대로 모든 포로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이어지는 제 5 장에서는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을 결합해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떠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군포로들의 송환을 결정하였는지를 분석하겠다.

제 5 장 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간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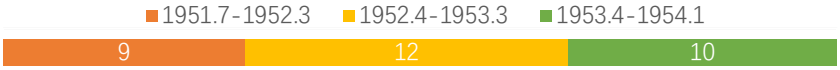
앞서 제 3 장과 제 4 장에서는 각각 한국전쟁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을 고찰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그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일들이 어떻게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논쟁거리가 되었고, 휴전회담장에서 오가던 논쟁과 결정이 포로수용소의 상황변화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상호작용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용소는 폐쇄된 곳이지만 포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했었다. 북한군포로들의 경우는 언어소통이 가능했고 수용소내부에 노동당 지하조직도 있었으며 외부와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에 중국군포로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고립된 처지였다. 반공측 중국군포로들은 수용소로 파견된 대만측 인원들을 통해 외부소식을 얻었고, 심지어 수용소내부로 라디오도 밀반입해서 전쟁동향이나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을 수시로 파악했다. 한편 친공측 중국군포로들은 포로관리당국 인원들 혹은 노동당지하조직을 통해서 각종 소식을 받았다. 심지어 쓰레기더미에서 미군 신문지를 발견해서 외부소식을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제도와 부산에 있는 병원수용소도 포로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다. 이처럼 수용소는 외부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곳이 아니었다. 친공 및 반공 양측은 각자의 방법으로 수시로 휴전회담의 소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수용소에서 각종 시위 및 저항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반면 수용소내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휴전회담의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포로들이 포로수용소장 듯드를 억류한 사건, 유엔군에서 포로들 상대로

실시한 심사와 분리, 그리고 포로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은 전부 다 휴전회담 진행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되었던 문제들이었다. 수용소와 회담장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51 년 7 월에 휴전회담의 시작, 같은 해 12 월부터 포로처리문제의 부상, 그리고 휴전협상의 중단과 포로처리문제의 최종합의, 마지막 1954 년 1 월에 중국군포로들의 최종송환까지 이 전 과정을 시기별로 나눠서 각 시기의 포로수용상황과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아래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1951 년 7 월부터 1954 년 1 월까지 총 31 개 월의 기간을 해당시기의 주요사건과 특징 등을 구분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3 개의 시기로 나눠서 중국군포로들의 송환문제의 발전과정 및 최종적인 송환을 고찰할 예정이며 각 시기는 9 개 월, 12 개 월과 10 개 월의 기간이었다.

[그림 1] 포로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의 상호작용과정



첫 번째 시기인 1951 년 7 월부터 1952 년 3 월까지는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이 이미 포획된 상황에서 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내부조직화를 통해 수용소내부의 통치권을 장악하려고 서로 대치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수용소내부의 권력투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주 특징이었으며 동시에 판문점에서 휴전회담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회담장에서 양측이 포로처리문제에 관한 서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52 년 4 월부터 1953 년 3 월까지였다. 이 시기에 유엔군측에서는 '자원송환'의 원칙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로들 상대로 이른바 '송환의향'에 따라 심사와 분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송환 및 미송환포로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한국전쟁포로처리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포로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용소내부의 수많은 혼란과 저항을 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된 범죄도 속출했다. 이 시기에 회담장에서 양측의 의견차이도 더욱 확대되었고 휴전회담도 결국에는 이로 인해 결렬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53 년 4 월 휴전회담의 재개부터 1954 년 1 월 포로들의 최종송환까지로 정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판문점의 휴전회담에 대해 영향을 미쳤고, 양측은 상병포로교환을 시작으로 포로처리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합의는 원칙상으로만 달성된 것이었고 실제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설득 및 송환할 때 많은 차질이 생겼다. 포로들이 마지막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회담장에서 양측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들이 중국군포로의 송환에는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휴전회담의 재개 및 중국군포로들의 최종송환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5.1 거제도와 판문점-두 개의 충돌현장 1951.7-1952.3

앞서 제 2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중국군포로들 중의 대부분은 1951 년 4 월에서 6 월 사이에 포획되었던 것이다(22 쪽 표 1 참조). 따라서 1950 년 10 월의 참전부터 1951 년 3 월까지 중국군포로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4 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급증하기 전까지의 포로수용소에는 중국군포로들이 이미 내부조직 등을 통해 권력투쟁을 벌였지만, 그 규모가 분산되고 각 수용소 간의 연대활동 등도 형성되는 과정이었으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1951 년 4 월부터 중국군포로들의 급증됨에 따라 수용소내부의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들어오는 중국군포로들이 점차 수용소에서 정착되는 가운데 7 월부터 한국전쟁 휴전회담은 시작하였다. 회담은 7 월 10 일에 정식 시작되었지만 소식은 6 월말 쯤부터 이미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퍼지기

시작하였다.[168] 휴전회담의 시작 소식은 수용소내부의 긴장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포로들의 개개인의 운명은 휴전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중국본토로의 송환을 원하는 한 쪽과 이를 저지하려는 다른 한 쪽 간의 충돌, 그리고 포로관리당국에 대한 포로들의 불만표시와 조직적인 저항운동도 함께 휴전회담의 진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포로수용소도 '무정부상태'에서 '신앙'과 '신앙'의 충돌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포로들의 활동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169] 휴전회담 시작 당시에는 아무도 2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휴전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을 예상 못했다. 당시 포로들 사이에도 전쟁은 곧 끝나고 자신들도 곧 풀려 나갈 거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전선에서 투항한 중국군포로들이나 포획된 후 적극적으로 본토송환에 거부의사를 표명한 자, 그리고 중국국민당정부가 소재한 대만으로 가길 원하는 자들은 휴전회담의 시작 소식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 자신들의 '변절자'행위 혹은 반공산주의의 언행으로 인해 중국본토로 송환되면 공산당정권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처음 한국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중국군포로들 중 반공경향인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산당의 집권으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전직 국민당부대출신으로 공산당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품고 있었다. 유엔군의 수용소에서 아무런 두려움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이들은 본토로 송환되면 공산당의 보복을 받을 까봐 두려워했다. 따라서 이들이 휴전회담의 시작소식과 함께 수용소에서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열창하였다. 수용소내부의 반공분위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휴전회담의 시작과 함께 점차 형성되고 고착된 것이었다.

---

[168]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31 쪽.
[169]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334 쪽;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401 쪽.

하지만 이들은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고 계속해서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이 시기의 상황에서 아무도 이들에게 확답을 줄 수 없었다. 휴전회담도 어려움 속에 시작된 것이었고 양측은 포로처리문제 뿐만 아니라,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의제들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포로처리에 대한 정책수립도 계속 진행중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명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공포로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다양한 반공조직을 결성하여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는 의지를 담은 혈서도 여러 차례 써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거제도 72 수용소에서 휴전회담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8 월 5 일에는 반공포로들이 '송환거절대회拒絕遣返大會'를 소집했다.[170] 동시에 이들은 수용소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감시와 구타를 실시하며 나머지 포로들에게 자신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강요했다. 반공조직에서는 구타와 폭행과 함께 혈서쓰기 그리고 반공문구를 강제 문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포로들을 위협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반공포로들은 수용소내부에서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이 본토송환을 거부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휴전회담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대만으로 가길 원하는 포로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대만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군포로들은 휴전이 곧 달성되어 자신들의 송환도 조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공산당의 치하治下로 송환된다는 긴박감 속에서 반공포로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중국군포로들 중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조직적 행동으로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졌고 양측의 첫 대규모 충돌은 1951 년 10 월 9 일 밤에 거제도 86 수용소에서 일어났다. 앞서 제 3 장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반공포로들은 다음 날 10 월

[170]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51 쪽.

10 일 대만에 있는 국민당정부의 '국경절'을 맞이하여 수용소에서 국민당정부를 상징하는 '청천백일기'를 게양하고 국민당정부에게 충성심을 과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대륙에는 이미 공산당정부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구시대의 깃발을 게양한다는 것은 신정권의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당연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공'과 '반공' 양측이 크게 충돌하자 포로관리당국은 사건을 개입해 몇몇 공산주의지도자들을 분리해서 사건을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86 수용소의 공산주의자들이 71 수용소로 옮겨졌고, 이는 중국군포로들이 내부적인 충돌로 처음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리된 사례였다. 곧 이은 11 월에 다수 중국군포로들이 수용된 72 수용소에서도 양측진영 간의 충돌로 공산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72 에서 탈출해 71 수용소로 합류하였다. 이로 인해 72 와 86 수용소에서는 반공포로들의 통치가 더욱 강화되었고, 71 수용소는 중국본토로 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열성적 공산주의자들이 쫓겨난 72 와 86 수용소에서 반공조직의 철저한 통치하에 일부 핵심조직자 사이에서 반공의사를 다짐했던 혈서쓰기와 문신운동은 폭력과 강요가 동반된 분위기 속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반공포로들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1951 년 11 월 7 일자 조선일보는 부산에 있는 중국군포로 1 천 명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잔악한 공산정권을 배격하는 선언에 혈서로써 서명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고, 포로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타도打倒될 때까지 중국본토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고 전했다.[171] 경향신문 1952 년 2 월 12 일의 사설에서도 22,000 여 명의 중국군 포로들 중 8,000 여 명은 '공산악치惡治를 증오하고 자유중국에의 복귀를 갈앙渴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들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공산악당惡黨의 손아귀에 다시 강제송환한다는 것은 그들 포로에게 죽엄을 주는 것

[171]「中共捕虜들血書宣言 本土엔안간다고」,『조선일보』1951 년 11 월 7 일자.

뿐이 아니라 실로 인도상 용납 못할 처사가 되는 것임으로써 유엔측에서도 끝까지 선택의 자유를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172] 중앙통신 및 중화일보中華日報 등 대만언론도 반공포로들의 대륙송환을 거절한다는 호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외교부장관 葉公超도 1951 년 12 월 18 일에 AP 기자와의 담화에서 포로들을 중국본토로 강제송환한다는 것이 비민주, 비인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어 1952 년 2 월 25 일에 반공포로들이 대만으로 가길 원한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면 대만은 이들 반공포로들을 전수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173]

이 시기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은 미국외교관 맨하드 P. W. Manhard 의 보고를 통해 미 국무부로 전달되었다. 1952 년 3 월 14 일에 부산에서 발송한 보고에서 맨하드는 1951 년 7 월부터 12 월까지 그리고 1952 년 2 월에 실시된 중국군포로들에 대한 심문내용을 종합해 중국군포로들이 일부 선출이 아닌 포로관리당국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라 임명한 포로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포로들은 수용소내의 식품, 의류 등 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들의 질병치료를 받는 권리까지 통제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들은 도쿄 연합군최고사령부 GHQ Tokyo 에 의해 파견 온 대만출신 포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부추김 하에 몇 달째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다른 포로들에게 대만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진정서陳情書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반공포로들은 폭력과 구타, 고문 등을 이용해 다른 중국군포로들을 위협하였고, 맨하드는 만약 포로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면, 많은 중국군포로들이 협박에서 탈출해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수용소로 갈 거라고 장담했다.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맨하드는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은 포로관리당국의

---

[172] 「유엔休戰代表에 忠告함」, 『경향신문』 1952 년 2 월 12 일 사설.

[173] 沈幸儀(2013), 『一萬四千個證人: 韓戰時期「反共義士」之研究』 168 쪽, 358 쪽; 周琇環編(2001), 『戰後外交部工作報告(民國三十九年至四十二年)』 319 쪽, 356-357 쪽, 562 쪽; 周琇環編(2005), 『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 208 쪽.

지지가 없으면 반공포로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포로수용소의 상황은 공산군측에게 유엔군이 강제적으로 대만으로 포로들을 보낸다는 구실을 남겨, 판문점에서 유엔군측이 주장한 자원송환이라는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174] 맨하드가 수시로 중국군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과 접촉하여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많은 중국군포로의 회고록에도 확인할 수 있고, 맨하드의 보고는 수용소에서 직접 관찰한 정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느정도 당시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반공포로들의 존재는 유엔군측에게 협상자리에서 자원송환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에 있어 인도주의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만약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원송환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정부의 자원송환원칙의 확립과정에는 반공포로들의 활동이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미 국무부장관 애치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45 년 유럽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어 독일에 의해 포획된 많은 소련군포로들과 민간인들이 소련으로 강제 송환될 때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당시 중국군포로수용소의 경우에도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다고 서술했다.[175]

한편, 반공포로들의 행동 중에 나타난 폭력성 및 강제성 역시 공산군측에게 전원송환을 주장하는 데에 힘을 실어 줬다. 앞서 맨하드의 보고서에서도 우려하였듯이 공산진영에서는 포로관리당국의 묵인 심지어 지지하에 반공포로들이 나머지 포로들을 억류하고 강제로 대만으로 보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판하였다. 공산진영은 포로수용소의 폭력문제 및 강요문제를 지적하고 유엔군측이 주장한

---

[17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63,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Johnson).*

[175] Dean Acheson(1969),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 t,* 652-653 쪽.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허구성을 비난하였으며 전원송환을 실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종합해보면 이 시기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휴전회담의 시작은 수용소의 내부분위기를 바꿨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한 반공포로들을 자극했다. 중국본토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반공포로들은 혈서쓰기와 문신운동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표출하였고 동시에 잔인한 수단들을 동원해 다른 포로들에게도 강요했다. 포로들 사이의 충돌은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내전國共內戰’으로 변하였다.[176] 반공포로들의 존재 및 활동은 한편 유엔군측에게 자원송환이라는 포로처리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 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군측에게도 유엔군의 주장을 반발하는 데에 구실을 남겼다. 반공포로들의 통제가 부재한 행동으로 인해 양쪽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은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 양측이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였고, 포로수용소에서도 내부의 ‘폭발적인 분위기’[177] 가 최고조로 달했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판문점 휴전회담장 이 두 개의 현장에서 양측의 충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5.2 운명의 순간: 포로에 대한 심사와 분리 1952.4-1953.3

휴전회담의 시작에 따른 전쟁이 곧 끝나겠다는 생각은 점점 포로들의 마음 속에서 가라앉았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휴전회담은 어느새 반년 이상의 시간이

---

[176] 張澤石 高延賽(2019),『孤島-抗美援朝志願軍戰俘在台灣』35 쪽.

[177] 거제도수용소의 ‘폭발적인 분위기’는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이 1952 년 4 월 4 일에 문산에서 미 합동참모본부로 보낸 전문에서 사용했던 말이다.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80,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Ridgway)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참조.

지나 1952 년 봄까지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렸다. 반공포로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중국군포로 중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존재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확히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본토송환을 거부하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본토송환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 숫자는 앞으로의 중국군포로의 송환규모를 의미하며 향후 휴전회담의 진전과 각측의 협상전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휴전회담장에서 전수송환을 거부하고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천명한 유엔군측에게 북한군과 중국군포로 중 송환의향이 있는 자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송환 혹은 미송환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판문점에서 후속 협상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유엔군측의 협상정책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측은 이미 포로명부 교환할 때부터 각자 억류한 포로들의 규모의 거대한 차이를 확인했고, 유엔군의 입장에서 10 배도 넘는 공산군의 포로들을 전수송환을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손해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문제는 유엔군측에서 전수송환을 거부하였지만 포로들의 송환규모도 계속해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전원송환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얼마를 송환할 것인가의 공산군측의 질문에 유엔군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대답하였다(4.2 절 참조). 이 점에 대해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을 계속해서 비난하였고, 유엔군측이 제네바협약을 위반해 공산군포로들을 계속 억류하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도 송환할 포로들의 정확한 규모를 공산군측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휴전회담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178]

---

[178]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80,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Ridgway)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유엔군측에서는 공산진영으로 송환할 포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체 수용중인 인원들을 상대로 송환의향을 묻는 심사와 분리작업을 1952 년 4 월초부터 실시하였다. 앞서 한국정부 및 유엔군측에서 이미 두 차례의 수용자심사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초점은 유엔군측에서 억류중인 북한군인원들 중 민간인억류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었다. 내전의 형태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초기 1 년 동안에 전선이 여러차례 남북으로 변동되면서 남북한 양측의 전쟁동원도 이 사이에 복잡한 형태로 엉켜 있었다. 당시 유엔군측에서 억류중인 전체인원 중 다수가 존재했던 '인민의용군'들의 처리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다. 전쟁초기 북한정부의 '전시동원령'에 의해 남북한 지역에서 강제, 반강제 혹은 자원으로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를 말한 것이었다. 휴전회담 시작 이후 협상자리에서 포로송환의 비강제성을 강조해 온 유엔군측의 입장에 따라 관리당국은 포로들의 송환에 대한 개인의사를 확인해야 비로소 송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군억류자들 중에서 민간인억류자들을 구분하여 분리시키는 작업은 1951 년 12 월부터 시작되었고 1952 년 4 월부터는 민간인억류자 뿐만 아니라, 중국군포로들도 포함해서 전체 수용중인 인원들에 대해 송환의향을 묻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1952 년 4 월 6 일 오후 포로관리당국은 70, 71, 72, 86 등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3 일 안에 곧 전체포로들을 상대로 심사를 실시하고 개인의 의향에 따라 송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미군의 안내방송 차량에서 중국군사령부 명의로 포로들을 상대로 하는 성명은 방송되었다. 성명에서 중국군사령부는 전체 수용인원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일부 포로들의 몸에 반공문구가 문신된 것과 대만으로 송환해달라는 서명 등은 전부 자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포로본인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179] 72 와 86 수용소에서 탈출해 71 로 합류된

[179]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09-111 쪽.

본토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은 기쁜 소식에 감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71 수용소의 공산주의조직에서 포로들의 심사에 대해 3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오성기를 만들어서 게양하고 도로 맞은 편에 있는 반공조직이 장악한 72 수용소의 중국군포로들에게 용기를 주어 심사 때 본토송환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격려한다. 둘째, 돗드 포로수용소장에게 긴급문서를 발송해 중국군포로들의 요구를 제기한다. 셋째, 71 수용소 전원은 본토송환을 이미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심사를 거부한다.[180] 4 월 8 일 오전 포로관리당국은 71 수용소에 있는 중국군포로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4 월 6 일 밤에 공산주의조직에서 결정된 것과 같이 중국군포로대표 孫振冠은 71 수용소에 있는 238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전원 본토송환을 원한다고 심사단에게 밝혔고, 자신들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부한다는 주장을 표시하였다. 관리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별 다른 절차없이 곧바로 송환을 희망하는 이들을 새로 지은 602 수용소로 이송하였다.[181] 이들은 602 중국군송환수용소의 첫 수용자들이었다.

거제도 항구에서 화물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던 70 수용소도 중국군포로들로 구성된 수용소였다. 대부분은 72 와 86 수용소에서 '강경공산주의자'로 지목되고 쫓겨난 자들이었다. 따라서 70 수용소는 상대적으로 반공포로들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었다. 따라서 4 월 10 일에 진행된 심사에서 반공세력 등의 별다른 간섭없이 전체 1,500 명 정도가 되는 포로들 중 총 1,270 명은 본토송환을 선택했다.[182]

한편, 관리당국이 포로들을 상대로 심사한다는 소식은 반공포로들이 장악한 72 와 86 수용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당시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약 15,000 명 정도의 중국군포로들은 72 와 86 두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었다. 이 두 수용소는 전부 반공조직의 철저한 통치하에 있었고 1951 년 7 월 휴전협상 시작 이래 이미 수차례 혈서쓰기와

---

[180]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11 쪽.
[181]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15-116 쪽.
[182]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46 쪽.

문신운동 등을 진행해 본토송환을 거부하는 뜻을 강력히 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핵심반공주의자들은 끔찍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일반포로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자신의 주장에 동참하라고 강요하였다. 심사 때 자유롭게 본토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포로관리당국의 안내방송 내용은 반공포로들에게 무서운 소식이었다. 심사 때 많은 포로들이 만약 본토송환을 선택한다면 휴전협상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반공포로들은 유엔군의 심사를 거부하려고 했고, 만약 심사를 해도 포로들이 본토송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반공포로들은 일반포로들이 유엔군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하였다. 72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은 관리당국의 안내방송이 있을 때마다 각종 소리를 내어 방송내용이 들리지 않게 했고 수용소내부에서도 연일로 폭력적인 수단으로 본토송환을 요구할 것 같은 '불순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마구 때리는 등 경고했다. 반공포로들 중 핵심인물인 李大安은 관리당국이 포로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수용소에서 대만으로 가지 않겠다고 천명한 포로들을 찾아서 그들 몸에 새겨진 반공문구 문신을 칼로 그대로 잘라내기도 했다. 4 월 7 일 밤부터 4 월 8 일 새벽까지 72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은 유엔군의 심사 전에 내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관리당국에서 심사를 실시한다고 지칭하고 본토송환을 원하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심사가 아닌 반공포로들이 수용소내부의 '불순자'들을 찾아내려는 가짜심사였다. 평소 내부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지목되거나 본토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이 모였다.

무슨 법정심판과도 비슷한 이 가짜심사과정에서 본토송환을 요구한 중국군포로 陽文華와 林學逋는 심한 구타를 당하여 반공포로들에 의해 살해되었다.[183] 결국은 반공조직의 통치와 위협하에 많은 중국군포로들이 두려움

[183]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18-120 쪽, 330-337 쪽;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20-123 쪽.

등으로 인해 심사 때 본토송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포로는 관리당국이 실시하는 포로에 대한 심사를 반공조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속임수라고 인식하였고, 따라서 심사 때 본토송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184]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반포로들에 대한 반공조직의 통치 및 폭력성과 협박성 등 문제들은 앞에 미국외교관 맨하드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고 포로관리당국도 매일매일 코앞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목격하여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판문점에서 공산군측에게 심사결과를 전달할 때 유엔군측은 이에 대한 공산군측의 반발을 어느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월 19 일의 휴전회담에서 유엔군측은 포로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산군측에게 통보하였고, 전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 중 15,599 명이 본토송환을 거부하였다고 전달했다. 중국군의 입장에서 22,000 여 명의 포로들 중 70% 이상이 본토송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중국군지도부는 중국군포로들 중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중국군협상대표단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토론하였고 포로들 중 전직 국민당출신병사들이나 전선에서 투항한 자들이 대만으로 가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었고, 70% 이상이 송환을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185]

4 월말까지 진행되었던 포로에 대한 심사와 분리작업은 일단락되었지만 외부적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휴전회담장에서 공산군측은 유엔군측이 실시한 심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했고, 유엔군측의 송환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동시에 수용소내부에서 공산주의자들도 계속해서 시위를 벌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폭력문제 등에 대해

---

[184]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324 쪽.

[185] 柴成文 趙勇田(1989),『板門店談判』239 쪽. 자료에 의하면 중국군포로들 중 몇 백명만 유엔군에게 투항한 것이었다. 張澤石 高延賽(2019),『孤島-抗美援朝志願軍戰俘在台灣』4 쪽.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북한군포로들에 의해 조직된 조선로동당 지하조직에는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책임자인 돗드준장을 억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5 월 7 일에 돗드는 76 수용소에서 북한군포로들에 의해 억류되었고 이후 5 월 10 일 돗드가 석방될 때까지 북한군과 중국군 공산주의포로대표들은 76 수용소에서 돗드와 여러차례 교섭을 벌였다. 포로들은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관리당국에게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포로들을 관리하는 수용소장이 포로들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엔군측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효되자 6 월말부터 유엔군측은 포로들에 대해 2 차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7 월 13 일의 회담에서 유엔군측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심사결과를 공산군측에에 통보했고, 공산군측으로 송환될 전체인원의 규모는 4 월에 주장한 7 만 여 명에서 8.3 만 여 명으로 재수정되었다. 중국군포로의 송환규모는 6,400 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중에서 7,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수용된 72 수용소에서는 700 여 명만 본토송환의사를 표시하였고, 86 수용소의 경우는 8,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2,100 여 명만 본토송환을 요구하였다.[186] 결과는 반공조직이 철저히 통치하는, 전체 중국군포로규모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이 두 수용소에서 심사 때 본토송환의사를 표시한 포로들의 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후 유엔군측의 분리정책으로 중국본토로 송환의사를 표시한 포로들은 전부 다 602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중국군포로 張澤石은 당시 5,000 여 명만 모인 602 수용소를 보고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1/4 만 조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187]

---

[186]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11 쪽. 유엔군측에서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 과정 중 각 수용소에서 본토송환을 표명한 중국군포로의 수는 자료에 의해 다르게 제기되었다. 앞서 43 쪽 각주 86 번 참조.

[187]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120 쪽.

유엔군측은 심사를 통해 송환여부에 따라 포로들을 분리시킨 다음에 제주도로 이송하였다. 당시 중국군포로들은 제주도에서도 꼬박 1 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려야 비로소 포로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송환정책의 지속적인 충돌과 휴전회담의 지체는 포로수용소의 미군과 한국군인들의 피로감과 포로들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고, 그들은 포로들 때문에 휴전을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한 거라고 인식했으며 자신들의 희생도 계속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188]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포로송환결과를 보면 유엔군측에서 1952 년 4 월부터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중국군포로송환과정의 최대분수령이 된 사건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총 7,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만 중국본토로 송환되었다. 이는 2 차 심사와 분리한 후 유엔군측에서 공산군측에게 전달한 송환포로의 수 [6,400] 와 거의 비슷하였다. 차이는 후술하겠지만, 송환직전에 판문점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44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본토로의 송환을 요구하며 대만행의 포로들 중에서 탈출한 데서 나왔다. 다시 말해 유엔군측에서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사와 분리 이후 송환과 미송환 포로의 수는 개별경우만 빼고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중국군포로들 중 본토송환의 최종적인 규모는 심사와 분리를 통해 거의 결정되었던 것이었다.

포로들에 대한 심사완 분리는 중국군포로송환 과정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 따라서 심사과정을 좌우하는 요소들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포로수용소내부의 폭력문제 및 반공조직이 수용소에 대한 통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조직은 관리당국의 심사 전에 포로수용소에서 내부 '심사'를 통해 본토송환을 요구하는 포로들을 찾아내 구타 및 살해까지 했다. 더 중요한 것은 포로수용소에서 지속적으로 반공조직에 의해 조성된

[188] 張瑞祺訪問紀錄,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371-372 쪽.

반공산주의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 반공조직은 이를 통해 포로수용소 내부의 통치를 강화하고 일반포로들의 본토송환에 대한 요구를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하였다. 수용소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포로관리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공조직으로 하여금 수용소를 장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리지웨이는 4 월 4 일에 문산에서 발송한 심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는 문서에서 수용소내부의 '폭발적인'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포로들에게 단 한 번의 선택기회만 주어지며 송환여부는 한번 결정되면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리지웨이는 미국 정부에게 이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한 강제적 송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다.[189] 여기서 주목할 것은 리지웨이의 용어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반공조직이 수용소를 장악한 것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잠재적인 폭력상황에 대해 리지웨이는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12 월부터 유엔군과 한국정부는 이미 수용소에서 민간인억류자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력 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지웨이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반공포로의 장악하에 포로들이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적절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사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심사를 직접 참여한 중국어통역요원의 관찰을 통해 미 국무부로 보고되었다. 1952년 5월 12일에 주한미국대사 무초는 부산에서 미 국무부로 발송한 전문에서 심사과정을 참여한 중국어전문가인 Aoa Meisling 의

---

[189] *'Approval of this plan requires prior US Government understanding and approval of the following features: a. Screening and segregation once accomplished are final. Prisoners having once chosen to identify themselves with one group or another, thereafter cannot be permitted to change their minds, or to remingle. Therefore it must be accepted that forced repatriation might be unavoidable in some cases.'*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80,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Ridgway)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말을 인용해 2/3 의 중국군포로들이 수용된 72 와 86 수용소에서 반공포로들은 심사와 분리 때 본토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에게 '체계적인 폭력과 신체적 징벌'을 가해 수용소를 통치했다고 보고하였다.[190] 비슷한 정황을 담은 내용을 유엔군측 휴전협상대표인 조이의 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이는 4 월 12 일의 일기에서 유엔군측에서 중국어통역을 담당하는 Wu 하고 May 에게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중국군포로수용소가 반공포로 지도자들의 완전통치하에 있고, 심사결과가 포로들의 진정한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 Wu 하고 May 는 항구에서 화물운반을 전담하는 포로수용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해당 수용소에 반공포로들의 지배가 덜 되어 1,500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85%가 송환을 선택했다고 조이에게 말했고, 나머지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진정한 선택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심사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오직 '대만', '대만'만 반복해서 외치고 대답했다고 조이에게 말했다.[191] 앞서 언급한 미 주한대사관 외교관 맨하드도 심사와 분리 과정에서 포로들의 선택은 공포와 불확실한 분위기에서 결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192]

한편, 공산주의포로들은 유엔군측이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나타난 폭력성 및 강제성 등 문제들을 강력히 비판했고, 계속해서 항의와 시위를 벌였다. 돗드납치사건은 포로들의 저항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도 포로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관리당국의 책임을

---

[190]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116,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1] Charles S. Young(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72 쪽. Wu 하고 May 가 조이에게 말한 이 노역 전담하는 수용소는 중국군 70 수용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다수 중국군포로들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각주 182 번 참조. Charles S. Young(2014)은 이어서 이 사례를 들어 만약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21,345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 17,850 명은 본토송환을 요청했을 거라고 추정했고, 실제 7,110 명만 송환되는 결과를 감안하면 10,740 명의 중국군포로들은 송환을 거절당했다고 추론했다. 같은 책, 101 쪽.

[192]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1, Document 208,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Department of State*.

질타했다. 관리당국은 포로들의 저항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포로들과의 충돌도 더욱 키웠으며 결국 송환문제와 휴전협상의 지체 등 결과를 초래하였다.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이 시기의 수용소와 회담장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야기한 강력한 후폭풍도 다시 휴전회담장에서 양측의 대립을 심화시켰고, 결국 중국군포로들의 운명까지 좌우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유엔군측의 자원송환원칙의 돌입은 정확히 포로들 중 몇 명이 송환을 원하는가에 의문을 남겼고, 유엔군측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에게 억류중인 17 만 명에 달한 인원들을 분류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엔군측에서 주장한 자원송환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회담장에서 오가는 논쟁들은 수용소의 작전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워싱턴의 자원송환정책은 그냥 정책이었을 뿐 현장에서 집행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반공조직의 철저한 통치하에 포로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향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포로관리당국도 충분히 인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로수용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포로들에 대한 심사도 계속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 포로수용소의 상황에서 포로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장 없이 그저 간단한 몇 개의 질문을 통해 포로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포로수용소의 내부권력투쟁 및 반공조직의 장악과 폭력 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측에서 자원송환의 간판으로 별 대책없이 그냥 실시한 심사와 분리에는 '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결여되었다. 따라서 '자원'이 결여된 '자원송환'은 결과적으로 그저 워싱턴의 욕망일 뿐이었다. 결국에는 회담장에서 계속해서 비非강제송환을 주장한 유엔군측이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작업을 통해 '비강제송환'이라는 원칙을 강제 '비非송환'으로 바꾼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 셈이었다. 심사와 분리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친공포로들의 분노도 더욱 자극했으며 돗드납치사건 및 포로들에 대한 유혈 진압 등 일련의 사건을 야기했다. 한편,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의 후폭풍으로 판문점 휴전회담장에서도 양측의 의견충돌이 더욱 격화되었고 휴전회담도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렬의 방향으로 흘러나갔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만약 유엔군측에서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면, 포로들이 진정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또 만약에 수용소에서 반공조직에 의해 조성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없었다면 본토송환을 요구한 포로들도 대폭 늘어났을 것이다. 휴전회담장에서의 의견충돌도 어느정도 완화되었을 수도 있고 휴전도 조기 달성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5.3 마지막 '설득'과 강요된 대만행 1953.4-1954.1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는 유엔군측의 입장에서 자원송환 원칙에서의 필수조치였지만 심사결과 및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 등 문제들로 인해 휴전협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양측의 의견충돌도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결국 수용소에서 공산주의포로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회담장에서 양측의 대립도 날로 심화되어 1952 년 10 월 8 일부터 휴전회담은 무기한으로 중단되었다. 이 시기의 수용소에서는 휴전협상의 중단에 따라 포로문제도 쉽게 해결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은 1953 년 4 월에 양측이 상병포로교환을 위한 접촉을 재개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상병포로의 교환으로 양측은 중단된 협상을 전면 재개하여 6 월 8 일에 포로처리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달성하였다. 휴전을 향한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후 7 월 27 일에 역사적인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지만 포로들의 송환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周恩來 중국총리는 1953 년 3 월 30 일에 한국전쟁 휴전에 관련된 성명에서 포로처리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양측에서 수용된 포로들 중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의 경우는 휴전 후 바로 송환을 진행하고, 나머지 직접 송환하지 않은 포로들의 경우는 중립국의 관리하에 이송하여 포로들에게 출신국으로부터의 설명을 듣게 한 뒤 송환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周恩來는 공산군측의 이러한 주장이 유엔군측에서 말한 송환거부포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지만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과 나머지 미송환포로들을 구분해서 송환을 실시한다는 제안 자체가 유엔군측에서 진행한 심사와 분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산군측에서 계속 주장해 온 '전원송환'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기성사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53 년 4 월에 양측 상병포로교환 Little Switch 때 1,030 명의 중국군상병포로들이 송환된 데 이어 양측의 최종합의에 따라 휴전 후 1953 년 8 월 5 일부터 9 월 6 일까지 본토송환을 원한다고 분류된 총 5,640 명의 중국군포로들도 송환되었다.Big Switch [193] 즉 1953 년 4 월의 상병포로들의 '소교환'부터 8 월에서 9 월 사이의 송환희망포로들의 교환까지 총 6,670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송환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휴전회담 내내 양측에서 치열하게 싸워 왔던 남은 14,000 여 명의 '송환거부'로 분류된 미송환 중국군포로들의 처리를 시작하는 단계였다.

---

[19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下卷』530 쪽; 杜平(1988),『在志願軍總部』637 쪽.

정전협정에서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합의내용에 공산군측과 유엔군측은 휴전 후 60 일 이내에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전부 교환하고, 나머지 포로들을 중립국의 관리하에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 송환되지 않은 포로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 월 9 일에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유엔군측에서 1953 년 9 월 10 일부터 23 일까지 상병포로들과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을 제외한 남은 22,604 명 북한군과 중국군 미송환포로들을 판문점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인계하였다. 이 중에는 중국군포로들이 약 14,700 명 포함되었다.[194]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국군과 북한군미송환포로들에게는 설득과정에서 다시 한번 본토송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국군포로들에게는 관리당국이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 이후 다시 한번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셈이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당초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였다. 우선 제주도에서 판문점으로 이송되고 나서부터 이들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철조망 안에서 동료포로들의 감시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수용소를 장악했던 반공포로 및 그 조직에 의해 구금된 듯이 살아왔던 본토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이었다. 설득작업 시작 전인 9 월 16 일에 한 명, 9 월 25 일에 65 명 많은 포로들이 순식간의 기회를 이용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였다.[195] 설득작업도 원래의 계획에 따르면 9 월 25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양측은 설득장소의 선정 및 관련 공사의 일정 등에 있어 의견충돌이 생겼으며 10 월 15 일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산군측에서는 이를 유엔군이 일부러 설득작업을 지연시키는 수법이라고 인식하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0 월 15 일에 14,000 여 명의

[194] 杜平(1988),『在志願軍總部』638 쪽.
[195] 杜平(1988),『在志願軍總部』641 쪽;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391 쪽.

중국군포로들을 상대로 하는 설득작업은 시작하게 되었다. 양측에서 합의한 총 90 일의 설득기간 중 이미 20 일이 지난 상태였다.

중국군측은 '송환거부'로 분류된 14,000 여 명의 포로들 중에 적지않은 이들이 본국측의 설명을 들은 뒤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측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간끌기'의 전술로 설득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던 것으로 공산군측이 판단하였다. 공산군측의 입장에서는 돗드사건과 포로들에 대한 유혈진압 등을 통해 포로관리당국의 문제는 이미 세계여론에서 제기되었던 상황이었고 게다가 14,000 여 명의 포로들 중에 상당수가 강요와 폭력과 위협에 의해 본토송환을 요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송환된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측이 설득과정 중에 많은 포로들이 본토송환을 요구할 것을 두려워해 일부러 설득기간을 지연시킨 것으로 공산군측은 판단한 것이었다. 앞서 맨하드의 보고 및 조이의 일기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엔군측도 수용소내부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산군측에서 지적한 대로 설득과정 중에 만약 이들이 본국에서 온 설득대표들을 자유롭게 만나 아무런 간섭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이 중에서 분명히 많은 포로들이 본토송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유엔군측에서도 어느정도 짐작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유엔군측에서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송환거부'로 분류되었던 포로들이 끝까지 송환을 거부해야 유엔군측이 공산진영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도 더욱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많은 포로들이 설득과정에서 본토송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유엔군측에서 실시한 포로들에 대한 심사의 허구성만 보여주고, 포로들을 억지로 억류한다는 공산군측의 지적도 전부 사실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유엔군측에서 고수해 온 '자원송환' 원칙은 많이 퇴색될 것일 뿐만 아니라 1951 년 7 월 휴전회담 시작 이래 '자원송환'을 고집해서 전쟁이 2 년 동안 연장된 것과 함께 전선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죽음도 전부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날 위험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 유엔군이나 미국 정부는 미국내의 지적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비판도 받았을 것이다. 이는 유엔군이 수행해 온 이 전쟁의 정당성과도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다. '자원송환'이 만약 무너진다면 그 위에 구축된 모든 것들도 다 따라서 무너질 거라는 위기가 유엔군측에게로 다가온 것이었다. '자원송환'을 실현하기 위해 2 년 동안 더 싸운 것과 이에 따른 병사들의 희생이 결국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는 결코 명예롭지 않은,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측의 입장에서 설득과정 중에 만약 많은 포로들이 본토송환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심지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1953 년 6 월에 미 국무부가 백악관에게 만일의 송환거부자들의 배신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미 '송환거부'로 분류된 미송환자들이 설득과정에서 송환을 요청하는 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시기에 작성된 미군의 심리작전에 관련된 한 보고서에서는 유엔군의 설득과정의 목표에 대해서 미송환반공포로들의 공산지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96]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이 6 월 8 일에 포로처리문제에 관련된 합의를 달성한 이후 도쿄 연합군사령부에서 CIE 측과 대만측 관계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로 파견돼 수용소에서 '예비설득'을 조직하였다. 중국군측은 귀환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 파견 온 사람들이 곧 실시할 예정인 설득과정에서 포로들에게 중국측설득대표를 습격하라는 등 설득과정을 방해하라고 선동하였다고 지적했으며 포로들 사이에 본토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을 찾아내 이들을 막으라고도 지시했다고 맹비난했다.[197]

---

[196] *Contingencies for the War in Korea*; Godel,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Conflict"*. Charles S. Young(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95-96 쪽 재인용.
[197]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88-92 쪽.

한편, 수용소내부에서도 4 월 휴전회담의 재개와 상병포로교환의 시작으로 인해 불안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송환을 희망하는 친공 쪽 중국군포로들은 유엔군측의 심사와 분리 이후 거제도 602 수용소에서 제주도 8 수용소로 이동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의 송환은 14,000 여 명의 '송환거부'로 분류된 중국군포로들보다 먼저 이루어졌다. 곧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사이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대만으로 가길 원하는 포로들은 자신들이 중립국들에게 이송되면 혹시나 차질이 생겨 중국본토로 송환될 까봐 두려워했고, 본토로의 송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기회를 잡고 반공조직의 통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1953 년 6 월에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이 포로처리에 대해 합의를 달성한 후에 미송환중국군포로들은 반공조직의 책동하에 연일로 '120 일 중립국관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판문점으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대만정부 蔣介石 총통에게 서신을 보내 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간다는 목적을 달성 못하면 차라리 집단자살을 선택하겠다는 결심도 전달하였다.[198]

다가오는 설득과정에 대해서 14,000 여 명의 '송환거부' 포로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더욱 많은 포로들이 대만으로 올 수 있도록 대만정부는 포로들이 중립국으로 이송되기 전인 1953 년 8 월에 제주도로 위문단을 보냈다. 위문단은 대만정부총통 蔣介石의 육성방송을 포로들에게 들려주고, 옷이나 식품, 담배 및 축구, 잡지 등 위문품도 전달하였다. 위문단의 주 목적은 이들 14,000 여 명의 포로들로 하여금 설득과정에서 대륙측 설득요원들에 의해 동요하지 말고 대만으로의 송환을 끝까지 요구하라는 것이었다.[199] 포로들 사이의 반공조직도 설득과정을 앞두고 나머지

---

[198]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139-140 쪽.
[199] 周琇環編(2001),『戰後外交部工作報告(民國三十九年至四十二年)』521 쪽, 563 쪽. Chang,

포로들에 대한 통치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설득과정에서 중국군측 설득대표를 공격하거나 욕설하는 것 등을 미리 연습시키기도 했다.[200] 공산군측은 반공조직의 이러한 일반포로들에 대한 장악과 영향을 인지하여 중립국에게 이들이 인계될 때 포로들의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티마야 중립국송환위워회 의장은 송환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를 응하려고 애썼지만, 포로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티마야는 당시의 인도관리군만으로 저항하는 포로들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들었고, 또한 포로들은 판문점으로 이송되기 전에 내부구조를 계속 유지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송에 동의했던 점도 설명하였다.[201]

이처럼 설득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많은 잠재적인 변수들이 작동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10 월 15 일에 처음으로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진행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아침 8 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설득은 오후까지 시작되지 못하였고 16 시 25 분경이 되어서야 중국군포로들이 인도군의 관리하에 설득장소로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202] 일부 핵심반공지도자들은 포로들을 통제하고 설득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첫날의 설득은 예정시간보다 7 시간이나 늦게 시작하였다.[203] 설득기간 내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졌다. 인도관리군이 포로들을 임시막사에서 데리고 나와 설득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포로들의 강력한 거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포로들 내부의 반공조직의 방해로 일반 포로들은 설득을 들을 기회가

David Cheng(2020), *The Hijacked War: The Story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330-331 쪽.

[200]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324-325 쪽;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90-91 쪽.

[201] K. S. 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96-97 쪽; 王東原(1988),「反共義士爭奪戰紀實: 為紀念一二三自由日第三十六週年而寫」,『傳記文學』第二十五卷第一期;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169 쪽.

[202]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120-122 쪽.

[203]「反共捕虜說得開始」,『경향신문』1953 년 10 월 17 일자.

없었다. 공산군측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일부대표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포로들을 막사에서 끌고 나와 강제적으로 설득을 듣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인도관리군은 이 과정에서 포로들의 유혈 및 한국정부의 반발을 의식하여 난색을 표하였다.

부산 및 거제도시절부터 수용소내부에서 일부 핵심 반공포로들에 의해 형성된 반공조직들은 제주도를 거쳐 판문점으로 그대로 옮겨졌고 유지되었다. 포로들의 내부조직과 그 통치력은 장소와 상관없이 여전히 잘 가동되고 있었고 일반 포로들도 그 영향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공조직은 하나의 전투적인 집단처럼 결속되었으며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은 격멸의 대상이 되었다. 포로들이 절대복종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였고 강압적인 규율을 지켜야 했다. 각 수용소에는 내부조직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경비대도 설치되었으며 거기서 규율을 위반한 자들, 또는 첩자로 판명되는 자들에게 심지어 사형선고도 하고 집행도 하였다.[204]

귀환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반공조직에서 취한 설득과정을 방해하는 움직임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득정책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정전협정에 의해 출범한 중립국송환위원회에서 직접 송환하지 않은 포로들을 대상으로 설득과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반공조직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반 포로들에게 설득규칙과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기에 일반포로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205]

둘째, 반공조직이 포로들을 폭력 등 수단으로 계속 통제를 강화한 것이었다. 이미 1951 년 4 월-6 월 사이 중국군포로들의 수가 대폭 증가했던 때부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반공조직이 나타나고 공산주의 포로들과의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

[204] K. S. 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142-143 쪽; 金幸福(1996),『韓國戰爭의 捕虜』248 쪽.
[205] K. S. 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163 쪽.

차지해 대부분 중국군포로들을 통치해 왔다. 통치의 목적은 명확했다. 나머지 다수 중국군포로들도 자신들이 요구한 대만송환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득작업의 진행은 반공조직에게 있어 대만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설득과정에서 본토송환을 요구하는 포로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공조직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고 대만으로 송환되는 것도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설득과정에 대비해 반공조직에서 나머지 포로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였다.

이때 반공조직에서 중국군포로들 사이에 '연대보증連環保'과 비슷한 제도를 강화하였고 포로 몇 명을 하나의 작은 그룹으로 설정하여 서로 본토송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담보해 주고 어느 한 포로가 만약 도망치거나 설득과정에서 본토송환을 요구하면 그를 담보해 준 다른 포로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제도였다. 포로들 사이에서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라는 통치수단이었다. 설득과정에서도 앞에 가는 사람이 본토송환을 요구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즉시 이를 저지해야 하고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다른 포로들에 의해 맞아 죽어야 된다는 규칙도 있었다. 따라서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자신을 잡으러 올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귀환한 중국군포로 肖達山이 폭로하였다.[206]

셋째, 설득거부 및 설득과정 중의 욕설과 시간끌기 등 방해행위들이었다. 설득을 진행하기 위해 포로들은 임시수용시설에서 나와 인도관리군의 안내에 따라 설득장소로 이동해야 했다. 반공조직은 포로들의 본토송환을 원천 봉쇄하고자 포로들이 자신의 통치에서 벗어나 공산군측의 설명을 들으러 간다는 것을 애써 막으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공조직에서 설득을 거부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표시하였으나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설득을 거부하지 못한 반공조직은 포로들을 선동하여 설득과정에서 공산군대표들을 공격하거나 욕설을 하라고 시켰다. 또 어떤 포로는 아무 말도 없이 2 시간 가까이 앉아만 있어서 제한된 설득시간을 일부러 끌어 다른 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

[206]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134 쪽.

못하도록 하였다. 또 어떤 포로는 다른 포로들의 이름을 사칭하여 설득이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막사를 드나들며 설득을 방해하기도 했다.[207]

이 과정에서 유엔군측의 심리전 활동요원 및 대만측에서 파견온 통역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반공조직의 배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설득과정에서 귀환한 포로들의 증언과 설득현장에서 근무했던 중국군대표들의 일기를 통해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 활동요원이나 통역들이 직무의 편리상 수시로 포로들 중 반공조직의 핵심자들을 접촉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티마야 중립국송환위원회의장은 미군 심리전 장교로부터 미군이 포로들과 수시로 라디오 통신으로 접촉한다고 직접 들었고, 인도관리군도 포로들에게 전달되는 물자 중에 라디오 등 통신장비를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대만정부 주 한국대사관 역시 판문점으로 이송된 포로들에게 리디오수신장비를 밀반입해 주었고, 한국의 리디오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중국어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방송에서 암호를 이용해 판문점에 있는 각 임시수용소에게 행동지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당시 대만정부 주 한국대사인 王東原은 회고했다.[208] 공산군측에서는 귀환포로들의 증언을 통해 유엔군이 비밀리 포로들을 접촉하여 반공조직의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포로들의 설득작업 거부를 계속 유도했다고 인식했다.[209]

대만정부도 꾸준히 이들 중국군포로들이 본토송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올 수 있도록 분주하였다. 대만측의 정부문서 등 각종 자료들을 통해 보면 대만정부는 한국으로 파견된 이들 공작요원들의 활동으로 수용소내부 반공조직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할 수 있다. 수용소내부의 반공조직은 이들 대만측

---

[207]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171-172 쪽.
[208] 王東原(1988),「反共義士爭奪戰紀實: 為紀念一二三自由日第三十六週年而寫」,『傳記文學』第二十五卷第一期.
[209]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208-209 쪽; K. S. 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166-167 쪽.

요원들을 통해 대만정부의 소식을 전달받고 그 행동지침에 따라 수용소내부의 통치를 강화하고 일반 포로들의 본토송환요구를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설득작업은 여러가지 방해요소로 인해 하루 진행되고 며칠 동안 중단되는 식의 반복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설득을 들을 수 있었던 포로들도 전체포로의 15% 밖에 안 된 소수였다.[210] 유엔군측의 통계에 의하면 14,000 여 명에 달하는 중국군포로들 중 설득을 들은 포로는 1,211 명에 불과하였다.[211] 10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은 수준이었다. 나머지 포로들도 설득을 들었으면 충분히 송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설득을 들을 기회도 없고 중국군측 설득대표를 만나 송환을 직접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되자 본토송환을 원하는 많은 포로들은 반공조직의 철통감시하에 극적인 탈출을 연출하였다. 1953 년 12 월 1 일 아침에 중국군포로 梁光輝가 판문점 임시수용시설에서 소속 소대장의 시선을 피해 수용소 입구 쪽으로 갑자기 달려가 성공적으로 탈출하였다. 이를 발견한 소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저지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梁光輝의 고함으로 동료포로들도 순식간에 수용시설에서 빠져나왔고 총 109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이 과정에서 성공하게 탈출하였다.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판문점으로 이송되고 나서부터 이 중에서 본토송환을 원하는 자들이 하나 둘 씩 반공조직의 감시하에 성공적으로 탈출하였지만, 단일 행동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포로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례는 유일했다. 전체 설득기간 중 총 440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송환되었다는 결과를 감안해 보면 이 109 명의 포로들은 전체인원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한 것이었다.[212]

---

[210]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억류중인 북한군과 중국군 미송환포로들 중 약 15% 정도만 설득과정을 참여하였다.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332 쪽.

[211]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395 쪽 재인용.

[212]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326 쪽; 한편, Chang, David Cheng(2020)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총 131 명이 탈출하였고, 사건 날짜도 1953 년 12 월 31 일로 기술되었다. Chang, David Cheng(2020), *The Hijacked War: the Story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335 쪽.

10 월 15 일 첫 설득일정 이후 12 월 23 일까지 중국군측은 10 월 15 일, 17 일, 31 일과 11 월 3 일, 4 일, 5 일, 11 일 및 12 월 21 일, 22 일, 23 일 등 단 10 일 동안만의 설득작업을 진행하였다. 시작도 원래 합의한 것보다 한 20 일 가까이 늦게 출발한 것인데 중간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대부분 시간에는 설득을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에는 중국군측에게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에서 합의한 90 일의 설득기간 중 단 10 일만이 유효했던 셈이었고 나머지 80 일 동안은 기다림과 초조함 속에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산군측에서는 설득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 계산해서 총 90 일의 설득기간을 보장하라고 중립국송환위원회에게 요청하였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90 일의 설득기간 이후 또 30 일의 기간 안으로 정치적 회의를 개최해 여전히 송환되지 못한 포로들의 처리문제를 합의한다고 정전협정에도 규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10 일 동안만 진행되었던 설득과정에서 총 1,211 명 중국군포로들이 중국군측의 설명을 들었고, 이 중에서 136 명이 송환을 결정하였다. 설득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기회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반공조직의 통치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탈출에 성공한 포로의 수는 설득을 들어서 송환을 요청한 경우보다 2 배 더 많았다.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설득과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앞서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했던 많은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포로수용소의 내부는 포로들의 자기만의 조직들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포로관리당국조차도 그 내부의 사정을 관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리상으로는 이들 미송환포로들이 제주도에서 판문점으로 이송되었지만 포로들의 내부조직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그대로 유지되었다. 포로관리당국도 관여 못했던 포로들의 '자치'는 짧은 시간 안에 조직된 언어도 안 통하는 인도관리군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중립국들로 구성된 송환위원회의 중립성도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애초부터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인도인들을 '공산편을 든 중립자'라고 평가하였다.[2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국제분쟁중에서 중립자의 역할로 전쟁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각오하면서 출범하였지만 당사자의 불신의 눈길과 포로들의 조직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송환포로들 사이의 반공조직에 대해서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런 조직의 목적을 송환을 저항하여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을 저지한다는 것이라고 기술하였고, 또한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송환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뒤받침되지 않았다고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지었다.[214] 결국에는 포로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설득작업은 유명무실이 되었으며 중립국송환위원회도 난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

포로들에 대한 설득은 유엔군측에서 1952 년 4 월-7 월 사이에 포로들을 상대로 실시한 심사와 분리 이후 중국군포로들의 운명을 좌우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앞서 1953 년 4 월 '소교환'이라고도 불렸던 상병포로교환의 시작으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이어서 1953 년 8 월에 양측에서 억류된 포로들 중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들을 교환하였다. 중국군포로들에게 송환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설득과정이었으나 이는 중국군측의 예상과 달리 여러가지의 방해요소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설득과정에서 총 440 명의 중국군포로들이 송환되었지만 이 중에서 136 명만 설득을 들어서 송환을 결정한 경우였고 다수를 차지한 나머지 포로들은 목숨 걸고 탈출을 통해서 송환되었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440 명의 포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14,235 명의 중국군포로들은 대만에 있는 중국국민당정부에 의해 대만으로

---

[213]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770,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214] 「中立國遣返委員會臨時報告 (多數報告)」, 周琇環編(2005),『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266-267 쪽; *The Final Report of the NNRC*,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401-402 쪽 재인용.

이송되었다.[215]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앨런 덜레스 Allen Dulles 는 이러한 미송환포로들의 처리결과를 대 공산진영의 심리전에서 자유세계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라고 평가하였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체면의 손상이라고 말했다.[216]

이 시기는 양측의 상병포로교환의 시작으로 공산군과 유엔군측이 최종적으로 포로처리문제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판문점에서의 빠른 움직임은 수용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반공조직의 철저한 통치하에 있는 수용소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날로 증가되었다. '송환거부'로 분류된 포로 중에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포로들에 대한 설득과정을 마지막 송환 기회로 여겼다. 기회를 잡아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포로들도 있었지만, 송환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반공조직의 탄압하에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었다. 수용소에서 관리지위를 차지한 반공조직이 송환을 거부하는 기본방침하에 나머지 포로들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던 데서 나온 결과였다. 이 시기에 수용소에서 일반 포로들에 대한 반공조직의 탄압도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의 관리로 이송되고 나서부터 이런 탄압은 더욱 서슴없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수용소내부구조의 유지 및 통치의 강화는 포로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득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반공조직의 활동으로 일반 포로들이 임시수용시설에서 나와 설득을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 시기의 휴전회담의 진전과 수용소내부상황과의 상호작용으로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

[215] Hermes, W.(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Appendix B-1-Repatriates & Appendix B-2-Nonrepatriates, 514-515 쪽.
[216]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57, *Editorial Note*.

제 6 장 결론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참전국인 중국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3 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면서 많은 중국군병사들이 희생하였고 총 22,000 여 명의 포로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역사서술에서 사라져 버린 듯 잘 언급되지 않았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본 연구는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잊혀졌던 한국전쟁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우선 핵심적인 질문은 이들의 송환결과에서 비롯되었다. 1953 년 4 월부터 다음 해 1 월말까지 공산군측과 유엔군측은 각측에 억류된 전쟁포로를 여러 차례로 교환하였다. 포로들의 송환결과는 22,000 여 명의 중국본토출신인 포로들 중에 70%가 넘는 14,000 여 명들이 의외로 송환과정에서 중국본토가 아닌 대만으로 송환되었다.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전쟁에 참여하다가 포로가 된 이들이 전쟁이 끝난 후 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대만으로 갔을까? 포로수용소에서 지낸 2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과정 두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결론은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긴말한 상호작용이 중국군포로들의 운명을 좌우하였으며 70%가 넘는 이들이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중국군병사들의 출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국도 내전 중인 상황이었다. 신생 중국공산당정권 1949 년 10 월~의 군사실력은 내전 중에 패배한 국민당의 부대를 흡수하면서 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병사들 중에는 전직국민당소속인 병사들, 그리고 대학생, 농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포로가 되면서 중국내전 중의 이념대립과 적대의식 등 요소들도 수용소로 따라 들어갔다. 이른바 '반공포로'라고 불리는 일부 전직국민당부대 출신 병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강력한 반공산주의 경향을 보였고, 중국본토로 송환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만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만으로 물러난 국민당정부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것이다.

반공포로들의 존재 및 대만으로의 송환을 요청한 것은 폐쇄된 수용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군포로들이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였고 서로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포로들 간의 이념충돌과 권력투쟁은 점점 격화되어 중국군포로들을 '친공'과 '반공' 두 진영으로 갈라 놓았다. 결국 반공진영은 투쟁 중에 우세를 보였고 중국군포로수용소를 완전히 장악했다. 수용소를 완전히 장악한 반공포로들은 대만으로의 송환을 실현하기 위해 잔인한 수법으로 나머지 포로들을 협박하였다. 그들이 조성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나머지 포로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반공포로들의 권력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포로관리당국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포로들이 수용소를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에서 관리당국의 방임 심지어 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통제가 불가능한 반공포로들의 권력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공포로들이 장악한 수용소는 그야말로 인간에 있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일반포로들을 협박하였고, 휴전회담장에서도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양측의 의견충돌은 확대되었다. 결국은 포로처리문제를 다루던 휴전회담도 이로 인해 결렬되었고, 전쟁도 지속되었다.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은 이처럼 첫째, 중국군포로들의 출신의 다양성; 둘째, 반공포로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수용소내부의 이념충돌, 권력투쟁과 폭력성; 셋째, 관리당국의 책임 등 3 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한국전쟁의 시대적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전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의 분위기 속에 휩쓸려 있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국민당과 공산당, 남한과 북한, 이 모든 세력 간의 충돌은 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이념전이라는 특수성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다양한 출신의 포로들이 함께 관리되었던 수용소 역시 이념전의 최전방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쟁에는 실로 미국과 소련, 중국대륙과 대만, 남한과 북한 3 쌍의 상대가 존재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념전의 특성은 70 여 년전의 포로수용소에서 존재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중갈등 속에도, 중국대륙과 대만 사이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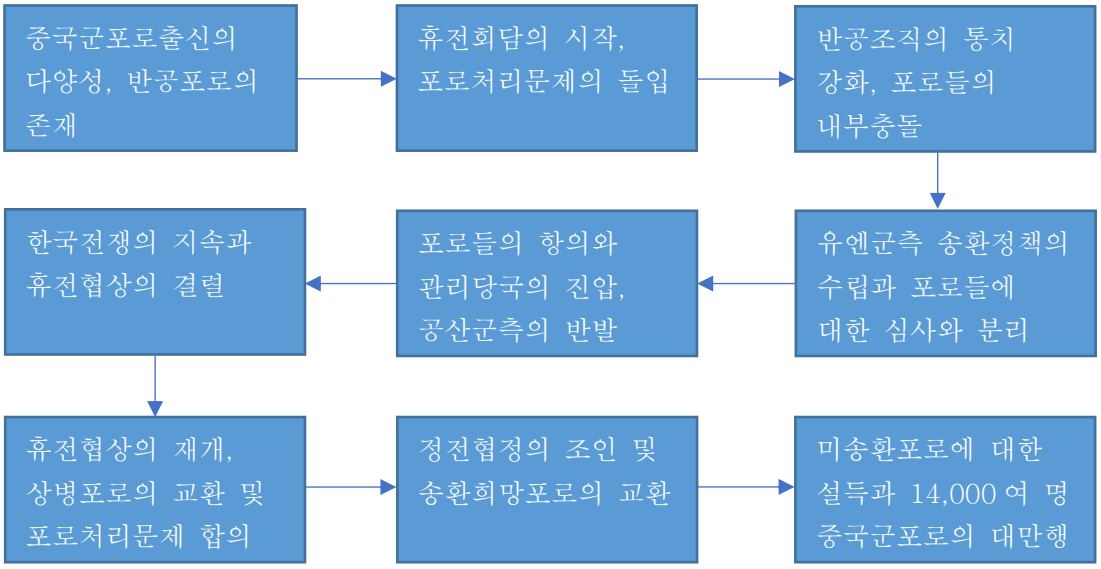
중국군포로를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송환문제를 좌우하였던 또 한가지의 측면인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전협상에서 오가는 대화는 포로들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엔군측에서는 계속해서 휴전회담에서 '자원송환'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포로들의 개인의 송환의향에 따라 송환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반공포로들이 장악한 수용소에서 포로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은 '하불식육미何不食肉糜'와 같은 일이었다.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에게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1952 년 4 월부터 실시된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작업에서 전체 22,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에 6,400 여 명만 본토송환을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는 것의 원인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워싱턴의 '자원송환'이라는 정책의 출발은 인권을 존중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였지만

거제도는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었다. '자원송환'의 실패는 미 행정부와 군부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냈다. 미국이 휴전회담장에서 계속 강조해 온 '비非강제송환'은 아이러니하게도 반공포로들의 장악하에 '강제비非송환'이 되었다.

휴전협상의 시작과 양측의 포로처리정책의 수립, 휴전협상의 지체와 결렬, 그리고 협상의 재개와 포로처리문제의 최종합의 등, 휴전협상의 모든 과정은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수용소의 내부상황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군포로를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2 개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포로들에 대한 심사와 분리, 그리고 미송환포로들에 대한 설득이었다. 겉으로는 포로들이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반공조직의 활동으로 전부 유명무실이 되었다.

장시간에 걸쳐 존재했던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과정은 아래와 같이 시간의 순서대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2]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협상의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



중국군포로들의 지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대만측의 통계에 의하면 대만으로 송환된 14,000 여 명의 중국군포로들 중에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은 43%에 달하는 정도였다.[217] 이러한 사람들이 '반공'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주장 때문에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하기 보다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계속 짓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반공조직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만으로 송환해 달라는 탄원서에 자신의 피로 서명을 해야 하는, 자신의 몸에다가 반공문구를 문신해야 하는, 자기의 부모형제, 배우자와 자식을 버려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포로처리문제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되었던 문제였다. 쉽게 해결될 줄 알았던 포로처리문제는 1951 년 12 월부터 1953 년 6 월까지 1 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원칙상으로 합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지연된 만큼 전선에서 공산군과 유엔군의 대치도 계속되었으며 병사들의 사상도 많이 발생하였다. 양측이 포로처리문제에 대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동시에 한국전쟁은 2 년이나 더 지속되어야 했던 셈이었다.

---

[217] 한국정부는 2014 년부터 해마다 한국내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중국군유해를 중국정부에게 송환하고 있다. 필자가 취재기자로서 중국군유해 및 유물을 근접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군의 유물 중에서 항상 이름이 새겨진 개인도장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도장에서 나온 이름을 통해 사망자의 후손들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에 의하면 당시 많은 중국군병사들이 항상 몸에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글자를 몰라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다음에 도장을 찍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의 도장이 찍혀야 가족들이 서신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군의 지식수준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사였다.「烈士的親人找到了！」, 中華人民共和國退役軍人事務部,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mva.gov.cn/sy/zt/yhhgdqp/mtbd/202009/t20200927_42363.html. 한편, 대만측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4,000 여 명의 대만으로 간 중국군포로들 중에 문맹인 사람들은 43%를 달했다.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74 쪽.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 명 한 명의 역사의 당사자, 한 명 한 명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자. 반공포로들에 의해 권위주의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 찼던 수용소는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집단주의가 유일한 기준이었고 개인이라는 존재가 없었다. 모든 말과 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해야 했다. 수용소는 인간의 악을 극대화 시켰던 지옥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반공포로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악마로 만들었을까? 포로수요소의 내부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막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막사 안에서 사라지고 포로관리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 수용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오직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었고 통제가 불가능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제도는 수용소와 중국군포로들의 비극을 만들어 냈다. 모두가 한국전쟁의 비극적인 주인공들이었다.

참고문헌

역사자료

『南北韓關係史料集』, 國史編纂委員會

周琇環編(2001),『戰後外交部工作報告(民國三十九年至四十二年)』

周琇環編(2005),『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一)』

周琇環編(2006),『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二)』

周琇環編(2007),『戰後外交史料彙編-韓戰與反共義士篇(三)』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

沈志華編(2003),『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회고록·구술자료

라윤도 옮김(1993),『판문점 일기』, 서울: 소나무

賀明(2001),『見證-朝鮮戰爭戰俘遣返解釋代表的日記』, 中國文史出版社

黃天才(2010),『我在 38 度線的回憶』, INK 印刻文學

張澤石編(1998),『考驗-志願軍戰俘美軍集中營親歷記』, 中國文史出版社

張澤石(2011),『我的朝鮮戰爭-一個中國志願軍戰俘的六十年回憶』, 金城出版社

張澤石 高延賽(2019),『孤島-抗美援朝志願軍戰俘在台灣』, 中國文史出版社

柴成文主编(2000),『板門店談判紀實』, 時事出版社

柴成文 趙勇田(1989),『板門店談判』, 解放軍出版社

邵毓麟(1980),『使韓回憶錄』, 傳記文學

周琇環 張世瑛 馬國正(2013),『韓戰反共義士訪談錄』, 國史館

杜平(1988),『在志願軍總部』, 解放軍出版社

王東原(1988),「反共義士爭奪戰紀實: 為紀念一二三自由日第三十六週年而寫」,『傳記文學』第二十五卷第一期

Dean Acheson(1969),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W. W. Norton & Company

K.S.Thimayya(1981), *Experiment in Neutrality-Gen. K. S. Thimayya's Korean Diary.*

Mark W. Clark(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Charles E. Tuttle Company

연구논저

김학재(2015),『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 기획』, 서울: 후마니타스

김행복(2015),『반공포로 석방과 휴전협상』, 경기도 파주: 백년동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거제시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8),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정전 65 주년기념 6·25 전쟁 포로 아카이브자료 공개전시』

박태균(2005),『한국전쟁』, 서울: 책과함께

이상호(2020),『한국전쟁: 전쟁을 불러온 것들, 전쟁이 불러온 것들』, 경기도 고양: 섬앤섬

이임하(2012),『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영희

조성훈(2010),『한국전쟁과 포로』, 서울: 선인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편(2010),『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한국전쟁연구회 편(2000),『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서울: 백산서당

허만호(2017),『6·25 전쟁 휴전회담과 역사적 유제들: 협상론과 제도론의 관점에서』, 경기도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金幸福(1996),『韓國戰爭의 捕虜』, 國防軍史研究所

于勁(2020),『厄運』, 天地圖書

大鷹(2009),『志願軍戰俘紀事』, 解放軍文藝出版社

反共義士奮鬥史編纂委員會(1955),『反共義士奮鬥史』, 反共義士就業輔導處

沈志華(2013),『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廣東人民出版社

沈幸儀(2013),『一萬四千個證人: 韓戰時期「反共義士」之研究』, 國史館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2010),『抗美援朝戰爭史』, 軍事科學出版社

程來儀(2000),『正義與邪惡的較量-朝鮮戰爭戰俘之謎』, 中央文獻出版社

楊奎松(2019),『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第四版, 江西人民出版社

邊麗君 馮金暉編(1990),『朝中戰俘遣返內幕』, 華藝出版社

Blair, C. (1987),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Chang, David Cheng(2020), *The Hijacked War: The Story of Chinese POWs in the Korean War*

Charles S. Young(2014), *Name, Rank, and Serial Number: Exploiting Korean War POWs at Home and Abroad*

Cumings, B. (2010), *The Korean War (A modern library chronicles book)*

Rees, D.(1964), *Korea: The Limited War*

Hermes, W.(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Jager, S.(2013), *Brothers at War: The Unending Conflict in Korea*

Kim, M.(2019), *The Interrogation Rooms of the Korean War: The Untold History*

Melady, J. (1983), *Korea : Canada's Forgotten War*

Rosen, Stanley Russell, & Rosen, Milton Jehiel (2018), *An American rabbi in Korea: A chaplain's journey in the forgotten war*

Stein, R. (1994), *The Korean war : "The forgotten war"*

학술·학위논문

김보영(2016), 「한국전쟁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선택」, 사학연구(123), 77-210

민경길(1997),「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4(1), 1-15

박영실(2016), 「타이완행을 선택한 한국전쟁 중공군 포로 연구」, 아세아연구, 59(1), 180-215

여계언(2014),「6·25 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21 세기정치학회보, 24(1), 393-413

여계언(2014),「6·25 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이사사(2019),「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포로의 송환과 귀국 이후의 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호(2010),「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현실(78), 421- 449

이선우(2017),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38, 317

전우(2016), 「한국전쟁 참전 중국지원군 포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근식 김란(2016), 「두 갈래길, 중국지원군 포로의 생애서사: 장저쓰(張澤石)와 류춰지엔(劉純儉)의 구술사에 기초하여」, 구술사연구, 7:1, 11-55

정인섭(2000), 「6·25 의 법적 조명 : 제 2 세션 ; 6·25 의 국제법적 성격과 휴전협정: 제 6 주제;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포로송환문제를 중심으로」

진탁(2017), 「6·25 전쟁시기 중국군 포로의 대만송환에 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王唯笑(2013),「朝鮮戰爭戰俘問題研究」, 外交學院碩士學位論文

朱進(2013),「中國人民志願軍 18 萬餘烈士名單分類」, 軍事歷史研究, 2013 年第 4 期

宋曉芹(2011),「試析朝鮮戰俘遣返談判中的蘇聯因素」, 世界歷史, 2011 年第 2 期

周琇環(2010), 「韓戰期間志願遣俘原則之議定(1950-1953)」, 國史館館刊, 第 24 (2010 年 6 月)

周琇環(2011), 「接運韓戰反共義士來臺之研究(1950-1954)」, 國史館館刊, 第 28 期 (2011 年 6 月)

孟照輝(2012),「抗美援朝戰爭志願軍傷亡人數辨析」, 軍事歷史, 2012 年第 2 期

宗興波(2014),「志願軍戰俘去台原因探索」,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常成(2016),「'新中國'的叛逃者-韓戰反共戰俘的生死逃亡路, 1950-1954」, 漢學研究 第 34 卷第 2 期

蔣洪勇(2005),「戰俘問題與朝鮮停戰」,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언론보도 및 영상자료

『경향신문』1952 년 2 월 12 일자.

『경향신문』1953 년 10 월 17 일자.

『동아일보』1951 년 5 월 30 일자.

『조선일보』1951 년 11 월 7 일자.

中國中央電視台 China Central Television(2019),『偉大的抗美援朝』4 부작 다큐멘터리 https://youtu.be/73GWWYMT3YA

Voice of America Chinese(2015),『解密時刻：志願軍戰俘』5 부작 다큐멘터리 https://youtu.be/f9EkfJcnisk

新華網, 2020 년 10 월 23 일, 「習近平: 在紀念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出國作戰 70 週年大會上的講話」(검색일 2021.4.10)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10/23/c_1126649916.htm

人民網,「黨史上的今天」'10 월 25 일' 검색한 내용: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5/70486/70516/index.html

「烈士的親人找到了！」, 2020 년 9 월 27 일, 中華人民共和國退役軍人事務部, Ministry of Veterans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www.mva.gov.cn/sy/zt/yhhgdqp/mtbd/202009/t20200927_42363.html

Abstract

A study of the Chinese POW repatriation issue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 the process of the truce negotiations

TANG XIN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patriation issue of the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which was the toughest one in the truc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its Communist counterpart to reach an armistice. Althoug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as already over 70 years ago, but strictly and technically speaking, the Korean War is still ongoing. This is because the armistice system of the Korean War has not yet been converted into a peace system. This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problem to solve between the two Koreas during these past decades and still for now.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not only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on the reg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War began

as a civil war aimed at reunification of the whole peninsula at first, but it took on the character of an international wa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UNC and later the Chinese forces.

In addi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also left a huge scar on China, a major participant in the war. Nearly 200,000 Chinese soldier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and about 22,000 were taken prisoners. These 22,000 prisoners of war are both parties to the war and witnesses of the unfortunate times. Where did those who survived from the front lines go? About 22,000 Chinese POWs were detained in Geoje Island and later Jeju Island, and then returned to each other before and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But unexpectedly, 70% of them, or about 14,000 POWs, went to Taiwan, not mainland China, where they came from.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se result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narrates the stories related to the POWs of the Korean War, which seem to have been forgotten, and examines one aspect of the Korean War, by especially focusing on the stories of the Chinese POWs.

Therefore, first of all, Chapters 1 and 2 of this study described the background of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process of occurrence of Chinese POWs, and Chapters 3 and 4 described the internal situation of Chinese POW camps and the Korean War truce negotiations respectively. In Chapter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factors and the interaction process were analyzed. Finally, in Chapter 6, the above cont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fact that a large number of the Chinese POWs went to Taiwan after the end of the war, is considered as a product of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ey factors, as mentioned in Chapter 3 and 4,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and the progres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Specifically,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was examin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compositional diversity of the Chinese military mobilization process; Second, the existence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power struggles among them; Third,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ers management authorities. Above all, it would be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repatriation issue of the war only by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side the camps.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armistice talks, which acted as another key factor,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patriation policy of both the Communists and UNC, the resistance of the prisoners and clashes of opinions inside the camps, and the final agreement process and problems, etc. were consider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and the progress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jointly influenced the handling of the POWs of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Chinese POWs, as they mutually influenced each other over a period of one and a half years. Chapter 5 summarizes important events that can support the assertion of this study by dividing these interaction processes by period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n detail. Through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handling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issue of the repatriation of the Chinese POWs.

Key Words: Korean War, Prisoners, POW, Repatriation, UNC, CPV
Student Number: 2018-26237